〈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재정분석을 통한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

2025. 10. 25

집필진

책임연구원 박민정 (원광대학교)

공동연구원 임홍래 (원광대학교)

<제목 차례>

Ⅰ. 연구목적 및 방법 ····· 11

1. 연구 목적 ····· 11

2. 연구범위 및 방법 ····· 12

Ⅱ.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제도 및 운영 ····· 15

1.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과 현황 ····· 15

2.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25

Ⅲ.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적 현황 및 전망 ····· 30

1. 인구감소 전망 ····· 30

2. 재정수입의 감소 전망 ····· 36

3. 시군단위 세수추계와 재정자립도 장기변화 ····· 41

4. 재정전망에 따른 대책 ····· 52

Ⅳ.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현황 및 분석 ····· 59

1.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현황 ····· 59

2. 출자·출연기관 문제점 ····· 62

3. 재무구조와 경영성과 현황 분석 ····· 113

가. 분석에 활용된 자료 ····· 113

나. 분석방법 ····· 113
다. 주요기관별 분석결과 ····· 117

Ⅴ.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합리화 방안 제안 ···· 154
1. 개선방향 ····· 154
2. 기타제도개선 방안 ····· 156

Ⅵ. 결론 ····· 164
참고문헌 ····· 167

<표 차례>

<표 1>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설차 ····· 19
<표 2> 지방출자·출연기관 현황 ····· 21
<표 3> 지방출자·출연기관 유형 및 구분 기준 ····· 23
<표 4> 지방출자·출연기관 자본 현황 ····· 24
<표 5> 지방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25
<표 6>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비교 ····· 37
<표 7> 2020-2040 년 생산가능인구 변화에 따른 지방세 수입 ····· 38
<표 8> 지방세 세목별 영향 ····· 39
<표 9> 기준선 시나리오 수치 가정 ····· 42
<표 10> 청년정착 시나리오 수치 가정 ····· 43

<표 11> 고령화 가속 시나리오 수치 가정 ····· 44
<표 12> 탄력세율 시나리오 수치 가정 ····· 45
<표 13>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별 입력 파라미터 ····· 47
<표 14> 시나리오별 익산시 자체세입과 재정자립도 예측결과 ····· 51
<표 15> 연도별 출연기관별 출연금(2020~현재) ····· 60
<표 16> 주요문제점 및 개선방향 ····· 65
<표 17> 최근 경영평가 결과 ····· 65
<표 18> 2025 년도 건전재정 관련 지표 경영평가 결과 ····· 66
<표 19> 주요문제점 및 개선방향 ····· 68
<표 20> 최근 경영평가 결과 ····· 68
<표 21> 2025 년도 건전재정 관련 지표 경영평가 결과 ····· 69
<표 22> 주요문제점 및 개선방향 ····· 71
<표 23> 최근 경영평가 결과 ····· 71
<표 24> 2025 년도 건전재정 관련 지표 경영평가 결과 ····· 72
<표 25> 주요문제점 및 개선방향 ····· 75
<표 26> 최근 경영평가 결과 ····· 75
<표 27> 2025 년도 건전재정 관련 지표 경영평가 결과 ····· 76
<표 28> 주요문제점 및 개선방향 ····· 78
<표 29> 최근 경영평가 결과 ····· 79
<표 30> 2025 년도 건전재정 관련 지표 경영평가 결과 ····· 79
<표 31> 주요문제점 및 개선방향 ····· 82

<표 32> 최근 경영평가 결과 ····· 82
<표 33> 2025 년도 건전재정 관련 지표 경영평가 결과 ····· 83
<표 34> 주요문제점 및 개선방향 ····· 84
<표 35> 최근 경영평가 결과 ····· 85
<표 36> 2025 년도 건전재정 관련 지표 경영평가 결과 ····· 85
<표 37> 주요문제점 및 개선방향 ····· 87
<표 38> 최근 경영평가 결과 ····· 87
<표 39> 2025 년도 건전재정 관련 지표 평가 결과 ····· 88
<표 40> 주요문제점 및 개선방향 ····· 90
<표 41> 최근 경영평가 결과 ····· 91
<표 42> 2025 년도 건전재정 관련 지표 경영평가 결과 ····· 91
<표 43> 주요문제점과 개선방안 ····· 94
<표 45> 2025 년도 건전재정 관련 지표 경영평가 결과 ····· 95
<표 46> 주요문제점 및 개선방향 ····· 97
<표 47> 최근 경영평가 결과 ····· 98
<표 48> 2025 년도 건전재정 관련 지표 경영평가 결과 ····· 98
<표 49> 주요문제점 및 개선방향 ····· 101
<표 51> 2025 년도 건전재정 관련 지표 경영평가 결과 ····· 102
<표 52> 주요문제점 및 개선방향 ····· 105
<표 53> 최근 경영평가 결과 ····· 105
<표 54> 2025 년도 건전재정 관련 지표 경영평가 결과 ····· 106

<표 55> 주요문제점 및 개선방향 ····· 108
<표 56> 최근 경영평가 결과 ····· 108
<표 57> 2025 년도 건전재정 관련 지표 경영평가 결과 ····· 109
<표 58> 주요문제점 및 개선방향 ····· 112
<표 59> 최근 경영평가 결과 ····· 112
<표 60> 2025 년도 건전재정 관련 지표 경영평가 결과 ····· 113
<표 61> 전북 문화관광 분야 결과 요약 ····· 119
<표 62> 전북 사회서비스원 분야 결과 요약 ····· 122
<표 63> 전북 산업진흥 분야 결과 요약 ····· 125
<표 64> 전북 신용보증 분야 결과 요약 ····· 129
<표 65> 전북 여성가족 분야 결과 요약 ····· 132
<표 66> 전북 연구원 분야 결과 요약 ····· 135
<표 67> 전북 의료원 분야 결과 요약 ····· 138
<표 68> 전북 콘텐츠 분야 결과 요약 ····· 141
<표 69> 전북 테크노파크 분야 결과 요약 ····· 144
<표 70> 전북 평생교육 분야 결과 요약 ····· 147
<표 71> 경영평가 결과를 통한 시사점 ····· 150
<표 72> 부채비율과 영업이익률 기준 기관 분류 ····· 152
<표 73> 부채비율과 영업이익률 기준 기관 유형 정리 ····· 153
<표 74> 건전재정 평가지표상의 문제점 ····· 158

<그림 차례>

<그림 1> 지방출자·출연기관 수의 추이 ····· 22
<그림 2> 전북특별자치도 총인구 변화 추이 ····· 31
<그림 3>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총인구 및 인구증감률('20 년 대비 '40 년) 31
<그림 4>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인구증감 ('20 년 대비 '40 년) ····· 32
<그림 5>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성장률(%) ····· 33
<그림 6> 전북특별자치도 연도별 생산가능인구(15~64 세) ····· 34
<그림 7>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생산가능인구(15 세~64 세) ····· 34
<그림 8> 시스템 다이나믹스 기본 구조 ····· 46
<그림 9> 익산시 자체세입, 재정자립도 시뮬레이션 그래프 ····· 51
<그림 10> 전북 출연기관 출연금 변동 ····· 61
<그림 11> 전북 출연기관 출연금 현황 ····· 61
<그림 12> 문화관광 분야 연도별 부채비율 ····· 117
<그림 13> 문화관광 분야 연도별 영업이익률 ····· 118
<그림 14> 문화관광 분야 연도별 총자산회전률 ····· 118
<그림 15> 문화관광 분야 연도별 인건비비율 ····· 119
<그림 16> 사회서비스원 분야 연도별 부채비율 ····· 120
<그림 17> 사회서비스원 분야 연도별 영업이익률 ····· 121
<그림 18> 사회서비스원 분야 연도별 총자산회전률 ····· 121
<그림 19> 사회서비스원 분야 연도별 인건비비율 ····· 122
<그림 20> 산업진흥 분야 연도별 부채비율 ····· 123

<그림 21> 산업진흥 분야 연도별 영업이익률 ····· 124
<그림 22> 산업진흥 분야 연도별 총자산회전률 ····· 124
<그림 23> 산업진흥 분야 연도별 인건비비율 ····· 125
<그림 24> 신용보증 분야 연도별 부채비율 ····· 127
<그림 25> 신용보증 분야 연도별 영업이익률 ····· 128
<그림 26> 신용보증 분야 연도별 총자산회전률 ····· 128
<그림 27> 신용보증 분야 연도별 인건비비율 ····· 129
<그림 28> 여성가족 분야 연도별 부채비율 ····· 130
<그림 29> 여성가족 분야 연도별 영업이익률 ····· 131
<그림 30> 전북 여성가족 분야 연도별 총자산회전률 ····· 131
<그림 31> 여성가족 분야 연도별 인건비비율 ····· 132
<그림 32> 연구원 분야 연도별 부채비율 ····· 133
<그림 33> 연구원 분야 연도별 영업이익률 ····· 134
<그림 34> 연구원 분야 연도별 총자산회전률 ····· 134
<그림 35> 연구원 분야 연도별 인건비비율 ····· 135
<그림 36> 의료원 분야 연도별 부채비율 ····· 136
<그림 37> 의료원 분야 연도별 영업이익률 ····· 137
<그림 38> 의료원 분야 연도별 총자산회전률 ····· 137
<그림 39> 의료원 분야 연도별 인건비비율 ····· 138
<그림 40> 콘텐츠 분야 연도별 부채비율 ····· 139
<그림 41> 콘텐츠 분야 연도별 영업이익률 ····· 140

<그림 42> 콘텐츠 분야 연도별 총자산회전률 ····· 140
<그림 43> 콘텐츠 분야 연도별 인건비비율 ····· 141
<그림 44> 테크노파크 분야 연도별 부채비율 ····· 142
<그림 45> 테크노파크 분야 연도별 영업이익률 ····· 143
<그림 46> 테크노파크 분야 연도별 총자산회전률 ····· 143
<그림 47> 테크노파크 분야 연도별 인건비비율 ····· 144
<그림 48> 평생교육 분야 연도별 부채비율 ····· 145
<그림 49> 평생교육 분야 연도별 영업이익률 ····· 146
<그림 50> 평생교육 분야 연도별 총자산회전률 ····· 146
<그림 51> 평생교육 분야 연도별 인건비비율 ····· 147
<그림 52> 부채비율과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한 유형 분류 ····· 151

Ⅰ.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 현황 및 향후 지방재정 전망

○ 통계청의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2020~2050년)에 따르면, 전라북도 인구는 2050년까지 약 13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2023~2050년 동안 연평균 1.0% 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년층(20~39세) 감소율이 특히 높아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인구감소는 지방세(재산세, 주민세, 취득세 등)의 급감과 기업활동 축소에 따른 법인세의 감소로 이어지며, 교부세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게 됨

○ 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인구수, 행정단위수, 사회복지 수요 등)이 증가되어야 그 액수가 증가되나, 인구감소가 이루어지면 재정수요도 줄었다고 간주되어 수요액은 줄어들게 되고 교부세를 줄이게 될 가능성도 높아짐

□ 재정수입확보를 위한 노력 외에 재정지출의 합리화 방안 필요

○ 지방세 수입 및 교부세 증가를 통한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지출의 합리화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도내 재정지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 합리화 노력이 필요함

○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경영 효율성이 낮고, 이로 인해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

○ 일부 기관은 설립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중복 운영되고, 각 기관 간 협업 부족으로 인한 중복 투자 문제 발생하고 있으며 행정 비효율성이 존재함

○ 낮은 생산성 및 불투명한 경영 방식으로 인해 예산 낭비 사례 발생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재정분석을 통한 지방재정운영의 합리화 모색

○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경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을 추구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적자를 감당하여 운영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개선조치가 필요함

○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정분석을 통해 중복성이 높은 기관들의 통폐합 및 명확한 기관의 역할 정립이 필요함

2. 연구범위 및 방법

□ 연구범위

○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감소추세 및 재정적 전망 예측

○ 재정전망에 따른 재정적 자구책의 모색

○ 재정지출 합리화 방안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현황과 실태를 분석

-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출자기관은 없으며 15개의 출연기관이 경영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들을 분석대상으로 함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재무, 경영지표의 분석 결과를 통해 클러스터링 하여 향후 진단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한 컨설팅 요구

□ 연구방법

○ 문헌조사 및 인구 및 재정적 통계자료를 통한 재정추계 분석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재무구조와 경영성과분석

-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들로 원구환(2006)은 총자본이익율, 총자본회전율을 재무지표로 보고 있으며, 신해룡(2008)은 수익성 측면에서 매출액순이익율, EBITDA/매출액, 총자본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율, 건전성 측면에서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을 재무지표로 봄
- 조임곤(2008)은 안정성 측면에서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유동성 측면에서 유동비율, 당좌비율, 수익성 측면에서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경상이익률, 자기자본경상이익률, 활동성 측면에서 총자본회전율을 재무지표로 보았다. 임충혁,정창훈(2020)은 재무구조(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와 경영성과 (당기순이익)의 추세와 특징을 분석

○ 본 연구의 재무구조와 경영성과 분석에는 재무건전성, 수익성, 자산활용효율성, 비용구조를 활용하여 출연기관의 재무구조와 경영성과를 확인하였음. 재무건전성, 수익성, 자산활용효율성, 비용구조는 각각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총자산회전률, 인건비비율을 활용하였음

-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조직의 재정건전성을 대표하는 핵심 지표이

며, 과도한 부채는 장기적 재정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은 재무적 안정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줌

-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은 조직의 운영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지표로 동일한 매출 규모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지를 보여주며, 비용통제 능력과 내부 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반영함
- 총자산회전률(매출액/총자산)은 자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효율성 지표 자산(시설·장비 등)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적합함
- 인건비비율(인건비/총비용)은 조직의 운영 구조와 비용 통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조직의 인력운영 효율성과 경영 유연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임. 인건비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면, 비용 구조의 경직성을 의미하며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지자체별 출자·출연기관 운영·재무 데이터 수집

○ 기관별 재무구조와 경영성과를 토대로 한 클러스터링 분석

- 경영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클러스터링 결과와 실제 5년간 재무구조와 경영성과 지표를 토대로 한 클러스터링 분석의 비교

○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정성적 자료 분석

- 특히 출연기관 인건비 산정과 관련하여 외부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심층분석

Ⅱ.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제도 및 운영

1.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과 현황

가. 설립근거

(1) 설립근거

○ 2014. 3. 2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07호)이 별도로 제정되었고, 2014. 9. 25.부터 시행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① 문화, 예술, 장학(奬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②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제1항).

○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함(지방출자출연법 제2조 제1항). 그리고 이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하여서는 ① 설립 목적, ② 주요 업무와 사업, ③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④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제3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함(지방출자출연법 제5조 본문).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출자·출연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음(지방출자출연법 제5조 단서)

(2) 설립절차

○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 과정은 설립의 타당성 확보와 법적 정당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본 절차는 대체로 1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며, 총 7단계로 구성

- 가장 먼저, 설립방침 결정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설립의 필요성과 정책적 방향성을 검토한 후, 실제 설립 여부를 결정한다. 이어서 조직의 법적 형태를 확정하고, 관련 부처와의 사전협의를 위한 준비안을 마련한다. 이 초기 단계는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
- 다음으로, 1차 사전협의 단계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시·도, 또는 시·도와 시·군·구 간의 협의를 통해 타당성 검토 이전 단계의 조율이 이뤄진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 제8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협의가 생략되기도 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향후 절차에서 타당성 검토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도 판단된다.

- 설립계획 수립 단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설립 목적, 기관 기능, 조직 구성 및 재정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설립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는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1~3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타당성 검토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고, 예비 검토를 거쳐 정식 약정을 체결한 후 본격적인 타당성 검토가 약 6개월간 수행된다. 이 검토에서는 정책적 필요성, 재정 건전성, 기대 효과 등을 분석하며,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진다.
-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포함된 결과 공개 및 심의 단계가 진행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심의위원회가 해당 검토 결과와 설립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한다. 이 단계는 약 1개월간 소요된다.
- 그 후, 2차 설립협의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한 번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 시·군·구와의 설립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이 과정 역시 법령 상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생략이 가능하다. 이후 설립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친다.
- 마지막으로, 설립 단계에서는 협의 결과와 설립계획서를 일반에 공개하고, 조례 및 정관을 제정하며, 임원을 공모 및 임명한다. 이후 법적 설립 등기를 통해 기관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에 지정고시를 신청함으로써 모든 설립 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무리

된다. 이 설립 단계는 조례 제정부터 지정고시까지 총 3개월가량 소요된다.

- 이러한 설립 절차는 지방정부가 정책 목적에 따라 공공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충분한 사전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표 1>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설차

단 계	내 용	주체	소요 기간
1. 설립방침 결정	가. 설립 여부 결정	지방자치단체	1개월
	나. 조직의 형태 결정		
	다. 사전협의안 마련		
2. 사전협의 (1차협의)	가. 타당성검토 전 협의 ※ 영 제8조제3항에 해당하면 협의생략	행안부-시도 시도-시군구	1개월
	나. 타당성검토 절차간소화 여부 판단		
3. 설립계획 수립	가. 설립계획 수립(자체 또는 용역)	지방자치단체	1~3개월
4. 타당성 검토	가. 타당성검토 의뢰 및 예비검토	지방자치단체 - 전문기관	1개월
	나. 타당성검토 약정 체결		
	다. 타당성검토 수행		6개월
5. 결과 공개 및 심의	가. 검토결과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	지방자치단체	1개월
	나. 지방자치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6. 설립협의 (2차협의)	가. 지방자치단체 설립 협의 요청 및 자료 제출 나.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 영 제8조제3항에 해당하면 협의생략	행안부-시도 시도-시군구	1개월
7. 설립	가. 협의결과 및 설립계획서 공개	지방자치단체	2개월
	나. 조례 및 정관 제정		
	다. 임원 공모 및 임명		
	라. 설립 등기 ※ 출연기관은 주무관청 설립허가 필요		
	마. 지정고시 신청	지방자치단체 -행안부	1개월

* 출처 : 행정안전부(2025).

(3) 설립기준 강화

○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단계에서의 ①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지방출자출연법 제6조 등), ② 설립 타당성검토 제도(지방출자출연법 제7조 등), ③ 설립 전 사전 협의 제도(지방출자출연법 제7조 등), ④ 출연 타당성검토 제도(지방출자출연법 제7조 등) 등에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검토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음(박지호 외, 2021).

- 구체적으로, ①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지방출자출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심의위원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②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검토기간도 충분하지 아니하며 그 결과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또한, ③ 출자·출연기관 설립 전에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설립 계획서 내용도 부실한 경우가 있고, ④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타당성검토 제도 등 제반 절차 이행실적도 미흡한 경우가 있었음(장호진,2024)

나. 현황

(1) 기관수 및 유형

○ 2025.3.31 기준 출자·출연기관은 총 864개 기관이며, 이 중 출자기관은 99개 기관이고, 출연기관은 765개 기관임(행정안전부, 2025)

○ 2025. 3.31 기준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총 420개 기관(행정안전부,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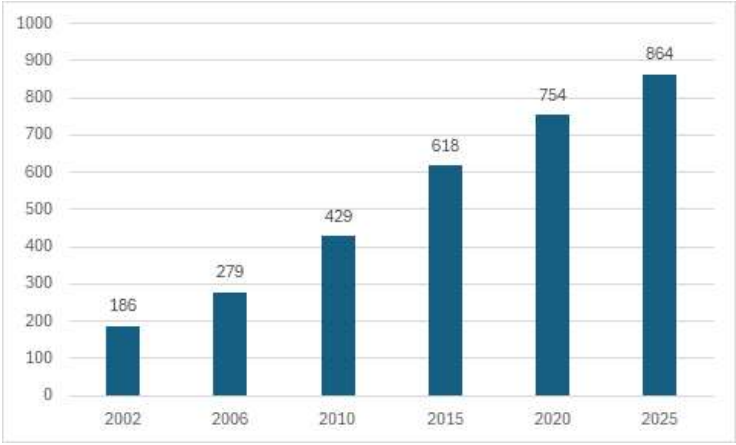
<표 2> 지방출자·출연기관 현황

(2025.3.31.기준)

시·도	출자출연 기관현황			비고
	계	출자기관	출연기관	
총계	864	99	765	
서울특별시	65	5	60	
부산광역시	30	2	28	1
대구광역시	22	1	21	
인천광역시	27	4	23	
광주광역시	18	1	17	
대전광역시	19	1	18	
울산광역시	11	0	11	
세종특별자치시	9	3	6	
경기도	157	15	142	1
강원특별자치도	87	11	76	
충청북도	44	9	35	
충청남도	67	9	58	2
전북특별자치도	61	8	53	
전라남도	86	9	77	2
경상북도	73	6	67	1
경상남도	74	14	60	
제주특별자치도	14	1	13	

<그림 1> 지방출자·출연기관 수의 추이

단위: 개



* 자료 : 행정안전부(2022 ; 2025)

○ 2025년 3월 기준으로 총 지방출자·출연기관 864개 중에서 출연기관이 765개로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출자기관은 99개로 12%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수는 1998년 이후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2010년 이후 10년 만에 429개에서 2025년 864개로 약 200%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음

○ 지방출연기관의 유형

- 지방출연기관의 경영평가 표준모델에서 총 8개의 유형으로 분류
- 신용보증재단, 지방연구원, 문화예술재단, 여성·청소년, 복지재단·서비스원, 평생교육·인재육성, 기업진흥 및 지원, 지방의료원으로 분류하고 있고 각 유형별 기능을 살펴보면 표와 같음

<표 3> 지방출자·출연기관 유형 및 구분 기준

유형		구 분 기 준
출자기관		「상법」상 주식회사
	특수목적법인	일정 사업기간 동안 산업단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등의 특정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출연기관		「민법」상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지방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
	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공연·예술 진흥 및 지원, 보급 및 조사·연구, 국내·외 교류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복지재단·서비스원	사회복지시설 수탁 및 운영, 지역복지 활성화, 사회복지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여성·청소년재단	여성·청소년·가족정책 연구 및 개발,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청소년 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청소년 활동 진흥, 여성·청소년·가족 관련 시설의 수탁 및 운영·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평생교육·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인재육성 및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학사 등 관련 시설 운영,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평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기업진흥·지원재단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기업 지원, 전문 기술·기능인력 양성, 산·학·연 연계·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개발 지원,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술지도, 마케팅 촉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지방의료원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 민간 공급이 부족한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급여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기능, 재난시 거점치료병원 역할 수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의료시책 수행하는 기관

(2) 기관 자본 및 부채현황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자본 현황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서울, 충북, 강원, 제주를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전국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부채액은 지자체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부채총액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표 4> 지방출자·출연기관 자본 현황

단위 : 억원

기관명	2022	2023	2024
계	163,359	163,303	166,285
서울	15,677	15,071	13,975
부산	8,469	8,424	8,445
대구	7,802	8,166	8,529
인천	10,089	10,214	10,560
광주	5,509	5,701	5,892
대전	4,368	4,684	5,197
울산	3,814	3,349	3,410
세종	1,158	1,307	1,369
경기	31,840	32,275	32,689
강원	11,410	11,376	10,765
충북	7,882	8,729	8,693
충남	9,201	9,356	10,353
전북	7,924	8,017	9,095
전남	10,072	10,464	10,619
경북	13,229	13,648	14,280
경남	10,267	7,884	7,891
제주	4,648	4,638	4,523

* 출처 : 클린아이

<표 5> 지방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단위 : 억원

기관명	2022	2023	2024
계	101,752	98,090	95,969
서울	5,835	6,239	6,594
부산	3,147	3,628	3,865
대구	1,609	1,640	1,772
인천	6,180	6,632	5,989
광주	904	997	787
대전	1,365	1,427	1,486
울산	639	625	714
세종	222	205	991
경기	18,052	18,760	17,722
강원	9,591	9,542	10,195
충북	12,718	11,077	9,959
충남	6,398	6,551	6,850
전북	5,408	4,418	2,795
전남	3,228	2,622	2,549
경북	3,637	2,907	3,648
경남	21,894	19,625	18,849
제주	925	1,195	1,204

* 출처 : 클린아이

2. 지방출자 · 출연기관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가. 기관수의 대폭적 증가

○ 지난 10년간 전국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 약 300곳 증가하여 2024년에 843곳, 2025년 기준 854곳에 이름

- 설립 장벽이 낮아 ‘우후죽순’으로 생긴 기관들이 많으며, 기능이 불분

명하거나 중앙기관과 중복되는 기관이 다수라는 지적

- 복지·문화재단 등 일부 기관은 수년간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었음에도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결국 통폐합 절차에 들어감 (한국경제신문, 2024-05-29).
- 과거 설립규제의 미흡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한 결과

나. 재정건전성 문제

○ 부채 규모는 66조원, 부채 비율은 33.8%에 달한다. 특히 부채 규모가 1000억원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곳은 지방공기업 29곳(7.0%),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곳(14.2%)

- "지방공공기관의 막대한 부채는 해당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해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생활여건 개선에 쓰여야 할 혈세가 줄줄 새게 된다" (뉴시스, 2022-07-27).
- 2024년부터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는 지방출자·출연기관 7개의 기관이 부채중점관리 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리[1)]

다. 규모 대비 운영의 비효율성

○ 인력 20인 이하 소규모 기관은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설립 기준 강화 조치를 시행

---

1) 농업회사법인한국절임(주), 완주농공단지개발(주),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 재단법인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전북테크노파크, 진안군의료원이다.

- 규모가 작을수록 경상비 비중 높고 사업비 대비 부문 효과 낮으므로 행안부는 광역 28인, 기초 20인 이상 기관만 설립 가능한 기준을 제시

○ 행안부에 따르면 2016년 645곳이던 지방출자·출연기관은 2021년엔 832개로 급증

- 이 기간 새로 설립된 기관 187개 중 141개가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현재 469개.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중 절반 이상이 10명 미만의 소규모 기관인 것으로 나타남

○ 행안부 관계자는 “소규모 조직일수록 사업 자체에 들어가는 돈에 비해 조직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높다”며 “20인 이상 기관의 경우 전체 예산 중 인건비 등 경상비 비중이 12.9%였지만 그 이하 규모에선 15.5%에 달해 조직 규모가 작을수록 효과적인 사업보다는 조직 운영 자체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고 함.

- 이 때문에 사업비는 50% 이상, 경상비는 25% 이하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가이드라인도 변경 안에 포함

○ 변경 안은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인원이 28명 이상,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원이 20인 이상인 지방 출자·출연기관만 설립하도록 함

- 인원이 51명 이상인 기관에만 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본부를 여러개 설치하려면 인원 규모가 151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

○ 조직 구성의 경우 관리부서나 지원부서 인원은 40% 이하로 제한하고, 사업 실무부서 인원은 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기관의 경우 정원의 75%이상,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65%이상을 유지하도록 함(경향신문,

2023-01-18).

- 운영비의 부담은 높은데 반해 기관 자체의 목적은 불분명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경영성과도 부진한 기관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는 것

라. 감독체계 소홀

○ 2014년부터 출자·출연기관의 인사, 예산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출자출연법이 지방공기업법에서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내부통제 제도만이 마련되어 있을 뿐 외부 감독·견제 장치가 사실상 부재하는 등 지방공기업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임(장호진,2024).

- 참고적으로, 2023. 9월 감사원은 정부 산하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관리상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음(감사원,2023). 여기서, 출연금·출연기관 관리체계 전반의 효율성·책임성 저해 요인을 분석한 결과 "① 출연금을 규율하는 법·제도 체계 정비, ② 이사회·자체감사기구 내실화 등 내부통제 기능 강화, ③ 평가·감사 등 체계적인 외부 감독장치 마련, ④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재)출자기관 평가체계 마련, 상위직 축소 등 인력운영 효율화, 수의계약 최소화 등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라는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출자·출연기관의 정상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우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증 채무에 대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을 위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2022년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을 유도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은 지방공공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임을 고려하여. 큰 틀에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자체 진단을 거쳐 자율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 행정안전부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것으로, 출자·출연기관을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정부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음

○ 즉, 지방공기업과 달리 출자·출연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감독에 권한은 전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임(장호진,2024).

Ⅲ.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적 현황 및 전망

1. 인구감소 전망

가. 총인구

○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장래인구 추계(2020~2040년)에 따르면[2], ’20년 1,806천명에서 지속 감소하여, ’40년에는 201천명(-11.1%) 감소한 1,605천명으로 전망

○ 최근의 인구변동 추세가 지속된다면, ’20년 대비 ’40년 진안, 무주, 임실 3개 군은 증가, 그 외 11개 시·군의 인구는 감소 전망

○ 시 지역 인구는 ’20년 1,487천명(82.3%) → ’40년 1,306천명(81.4%)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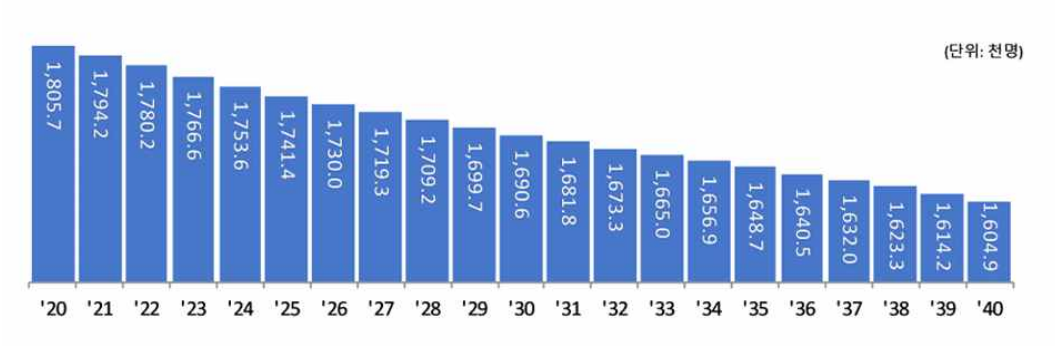
- 익산(-19.4%), 정읍(-15.1%), 군산(-12.2%), 김제(-11.2%), 남원(-9.5%), 전주(-8.9%)

○ 군 지역의 인구는 ’20년 319천명(17.7%) → ’40년 299천명(18.6%)으로 감소

- 증가 : 진안(6.0%), 임실(2.0%), 무주(1.8%)
- 감소 : 부안(-12.9%), 고창(-9.1%), 완주(-8.4%), 순창(-8.2%), 장수(-4.8%)

2) 이 보고서는 전라북도 정책기획관에서 배포한 것으로 2020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를 기초로 최근 시·군별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인구이동) 추이를 반영하여 미래 인구변동요인을 가정하고, 향후 20년(2020~2040년)간의 시군별 장래인구를 전망한 결과임(전라북도 정책기획관, 2022).

<그림 2> 전북특별자치도 총인구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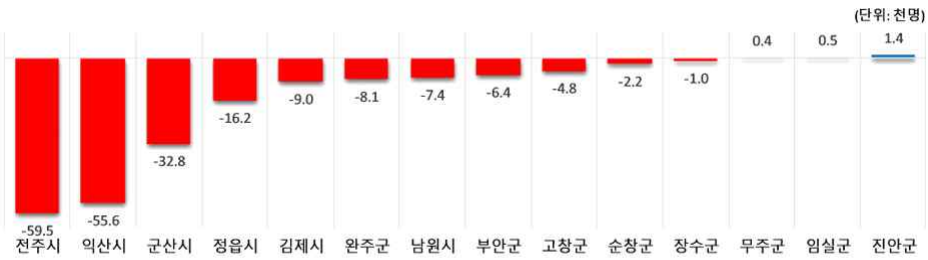
* 출처 : 전라북도 정책기획관(2022)

<그림 3>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총인구 및 인구증감률('20년 대비 '40년)



* 출처 : 전라북도 정책기획관(2022)

<그림 4>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인구증감 (‘20년 대비 ’40년)



* 출처 : 전라북도 정책기획관(2022)

나. 시군별 인구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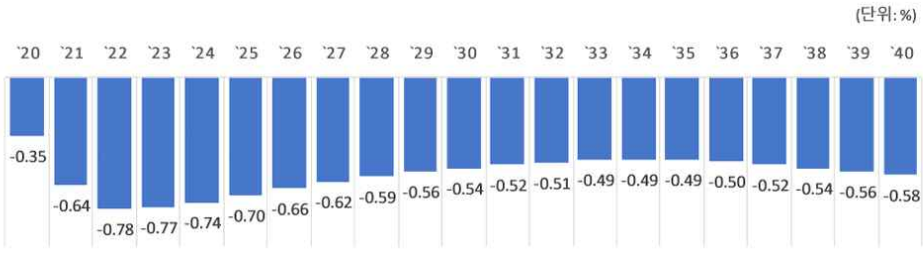
○ 전북의 인구성장률은 ’20년(-0.35%), ’30년(- 0.54%), ’40년(- 0.58%)로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전망

○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순창, 고창, 부안은 ’21년부터 ’40년까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인구성장률이 전망됨.

- 인구 마이너스 성장에서 진안, 무주는 ’23년 상승전환, 임실은 ’26년 상승전환하여 ’40년까지 지속적으로 인구성장률 상승을 보임.

○ 전주(’20~’21년), 남원(’20년), 완주(’22년), 장수(’27,’28,’30,’33년)는 일시적인 인구성장률 상승추세가 있으나,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

<그림 5>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성장률(%)



* 출처 : 전라북도 정책기획관(2022)

다. 시군별 생산가능인구

○ ’20년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1,222.8천명(67.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40년에는 401.4천명 감소한 821.4천명(51.2%) 수준에 이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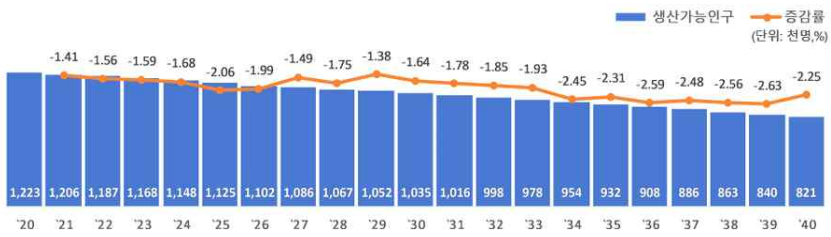
- 전 지역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확대될 전망

○ ’20년 대비 ’40년 생산인구 감소율이 높은 곳은 익산(-41.7%)으로 83.6천명 생산가능인구 감소

○ 생산가능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년은 전주(72.0%)가 가장 높고, 순창(56.3%)이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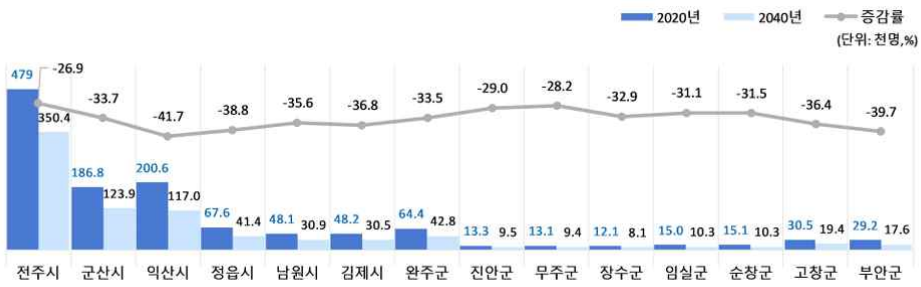
- ’40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14개 전 시·군이 60% 미만이며, 전주가 57.9%로 가장 높고, 진안은 38.0%까지 낮아질 전망

<그림 6> 전북특별자치도 연도별 생산가능인구(15~64세)



* 출처 : 전라북도 정책기획관(2022)

<그림 7>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 출처 : 전라북도 정책기획관(2022)

라. 인구감소가 미칠 재정적 영향

○ 인구감소는 지방세 감소와 복지수요 증가를 동시에 초래하여 이중의 재정 압박 구조를 형성함.

○ 중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 지방세 감소 → 재정자립도 하락 → 중앙의존도 상승’이라는 부정적 순환이 고착될 우려가 있음

(1) 지속적 인구감소와 재정기반 축소

○ 전북특별자치도의 총인구는 2020년 1,806천명에서 2040년 1,605천명으로 약 11.1%(201천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익산(-19.4%), 정읍(-15.1%), 군산(-12.2%) 등 중규모 도시 중심의 인구 감소는 지방세 수입의 기반이 되는 도시지역의 세입 축소를 의미하며, 지역 내 재정자립도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2) 생산가능인구 급감에 따른 지방세 수입 구조의 불안정화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0년 1,222.8천명(67.7%)에서 2040년 821.4천명(51.2%)으로 무려 401.4천명(-32.8%)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익산시는 생산가능인구가 41.7% 감소하며, 이는 지역의 주요 조세 기반(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약화를 의미. 세수 기반의 수축은 자체재원 확충 여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중앙정부 이전재원 의존도를 높이게 됨

(3) 복지지출 구조의 확대와 재정 부담 가중

○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복지 지출의 증가로 이어짐.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40년까지 60% 미만으로 하락하고, 일부 군 지역(예: 진안 38.0%)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

- 이에 따라 의료, 요양, 노인돌봄 등의 재정 수요가 급증하며, 지출 구조가 경직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투자성 예산(지역개발, 산업유치 등)의 상대적 축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지역의 성장잠재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음

(4) 지방재정의 구조적 불균형 심화

○ 시·군 간 인구감소 편차는 재정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음

- 진안, 무주, 임실 등 일부 군은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대부분 시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광역적 재정균형을 위한 보조금 조정 및 재정조정제도의 손질이 불가피

- 특히, 지방교부세 산정에 있어 '인구'가 핵심 지표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교부세 수혜 감소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정이 요구

2. 재정수입의 감소 전망

○ 인구감소는 지방세(재산세, 주민세, 취득세 등)의 급감과 기업활동 축소에 따른 법인세의 감소로 이어지며, 교부세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게 됨.

○ 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인구수, 행정단위수, 사회복지 수요 등)이 증가되어야 그 액수가 증가되나, 인구감소가 이루어지면 재정수요도 줄었다고 간주되어 수요액은 줄어들게 되고 교부세를 줄이게 될 가능성도 높아짐

가. 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개요

○ 2020년 대비하여 2040년 총 인구의 감소보다 생산인구감소의 감소율이 더욱 심각하다. 총인구 감소율 11.1%인데, 생산가능인구는 32.8% 감소될 것으로 예측

○ 생산가능인구는 대부분의 지방세(소득세, 취득세, 주민세 등) 납세 주체로 작용하므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봄

<표 6>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비교

항목	2020년	2040년	증감	증감률
총인구	1,806천명	1,605천명	▼201천명	-11.1%
생산가능인구 (15~64세)	1,222.8천명	821.4천명	▼401.4천명	-32.8%

나. 지방세 중심의 재정수입 감소 추정

○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세 중심의 재정수입 감소분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 2020년 기준 1인당 연간 지방세 기여액

- 1,609,328,000,000원÷1,222,800명≒1,315,800원/인
- 즉, 2020년 기준 생산가능인구 1인당 연간 지방세 기여액은 약 1,316,000원

○ 2040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액

- 401,400명×1,316,000원≒528,638,400,000원
- 약 5,286억 원/년의 지방세 수입 감소가 예상

○ 전북특별자치도는 2040년까지 약 32.8%에 달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2020년 대비 연간 약 5,286억 원의 지방세 수입 감소가 예상

- 이는 전체 지방세 수입의 약 32.8% 수준의 잠재 손실을 의미하며, 특히 지방소득세, 주민세, 취득세 등 인구 기반 세목의 직접적인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음

<표 7> 2020-2040년 생산가능인구 변화에 따른 지방세 수입

항목	값
2020년 지방세 수입	1,609,328,000,000원
2020년 생산가능인구	1,222,800명
2040년 생산가능인구	821,400명 (–32.8%)
생산가능인구 감소 인원	401,400명
1인당 지방세 기여액	약 131.6만 원/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수	약 401,400명
2040년 연간 지방세 수입 감소 추정액	약 5,286억 원

다. 지방소득세, 취득세, 담배소비세 등 항목별 영향 예시

○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세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구체적으로 지방세의 종류별로 인구감소에 따른 영향이 다소 차이는 있음

- 지방소득세는 생산인구감소에 따라 고용이 감소되기에 소득세가 감소

되어 영향이 가장 클 것이며, 주민세 또한 주민수 감소에 따른 정률세 기반이 축소됨으로써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

- 다음으로 취득세는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주택수요와 자동차 등록 감소로 인구감소의 영향이 다소 있을 것이며, 담배소비세 또한 고령화에 따른 흡연율 감소로 약간의 영향을 받을 것

○ 특히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등 도세의 60% 이상을 부담하는 도시지역의 생산가능인구가 평균 35~42% 감소할 것으로 보여, 직접적인 세입 급감 우려가 존재

<표 8> 지방세 세목별 영향

세목	기여 주체	인구 감소 영향	감소 메커니즘
지방 소득세	근로 인구	매우 큼	생산가능인구 감소 → 고용 감소 → 소득세 감소
취득세	주택·차량 등 취득자	큼	인구 유출·고령화 → 주택수요·자동차 등록 감소
담배 소비세	전체 인구	보통	고령화에 따른 흡연율 감소도 동반
주민세	개인 및 사업장	매우 큼	주민 수 감소 → 정률세 기반 축소

라. 보통교부세 등 이전재원 영향

○ 교부세의 구조와 산정 방식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통교부세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산정

보통교부세 =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해당 지자체가 적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수요
· 기준재정수입액: 해당 지자체가 자력으로 확보 가능한 재정 수입

- 여기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기준에 인구수, 면적, 행정단위수, 사회복지 수요(고령인구, 아동, 장애인 등) 등이 포함. 즉, 인구수는 교부세 산정의 핵심 변수 중 하나

○ 인구감소 → 기준재정수요 감소의 메커니즘

- 전북특별자치도는 2020년 대비 2040년까지 총인구 약 11.1% 감소, 생산가능인구 약 32.8% 감소가 예측. 이러한 인구감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준재정수요액에 영향
- 행정서비스 단가 계산의 모수로 인구 사용 : 주민 수가 줄면 행정서비스 수요가 줄었다고 간주되어 단위 행정당 필요 예산도 감소
- 복지 수요 증가 반영에 한계 : 고령화가 진행되어 실제 복지 수요는 증가하더라도, 교부세 공식은 절대 인구수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고정적 행정비용이 무시됨 : 도로, 상하수도, 교육시설, 기초보건소 등의 기반 유지비용은 인구감소와 무관하게 존재하지만, 인구수 감소로 인해 해당 항목의 기준재정수요도 줄어들 수 있음
- 따라서 인구가 줄면 수요가 줄었다고 간주되는 구조적인 함정이 발생하며, 교부세 총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 소규모 군지역(무주, 진안, 임실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도시지역(익산, 군산 등)은 세수 축소와 수요 축소가 동시에 발생. 결과적으로, 재정수입 측면에서는 '지방세 감소 + 교부세 감액'이라는 이중의 하방압력이 작용

3. 시군단위 세수추계와 재정자립도 장기변화

가. System Dynamics 기반 모형 모델링

(1) 변수 구성

(가) 주요 변수

○ 총인구, 생산가능인구(15 - 64세), 지방세·세외수입, 교부세,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복지지출 수요, 투자성 사업비

(나) 인과관계 흐름

○ 총인구 ↓ → 생산가능인구 ↓ → 세입 기반 ↓ → 지방세 수입 ↓ & 보통교부세 기준하락 → 교부세 ↓ → 재정자립도 ↓ → 중앙의존도 ↑

(2)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가) 기준선 시나리오 (BAU: Business As Usual)

○ 개요

- 기준선 시나리오는 현재 인구 구조 변화 및 경제 상황이 정책 개입 없이 유지될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 별도의 청년 유입정책이나 고령화 완화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자연적인 인구 및 재정 흐름을 추적

<표 9> 기준선 시나리오 수치 가정

변수	수치 및 가정
총인구 감소율	연 평균 –1.2% (2020–2040 누적 –19.4%)
생산가능인구 감소율	연 평균 –2.9% (2020–2040 누적 –41.7%)
고령인구 비중 증가율	연 +1.5%p (예: 20% → 40% 이상 가능)
지방세 수입 감소율	연 –2.5% (인구·소득 기반 약화 반영)
재정자립도 변화	14.73% → 2040년 예상 약 11.0%

○ 시뮬레이션 구조

- 생산가능인구 감소 → 경제활동인구 축소 →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감소
- 고령화 → 복지 지출 증가 → 투자성 지출 비중 축소
- 재정자립도 하락 → 중앙정부 이전재원 의존도 증가

(나) 청년정착 시나리오

○ 개요

-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적 개입(예: 주거·창업 지원, 지역 대학 활성화, 청년 일자리 보조금 등)이 생산가능인구 유지 및 회복

효과를 발생시키는 긍정적 개입 시나리오

<표 10> 청년정착 시나리오 수치 가정

변수	수치 및 가정
청년유입률	연 평균 +1.0%p (정착율 향상)
총인구 감소율	연 평균 –0.6% (2040 누적 –10% 이하)
생산가능인구 감소율	연 평균 –1.5% (2040 누적 –25%)
지방세 수입 감소율	연 평균 –1.0%
재정자립도 변화	14.73% → 2040년 약 13.8%

○ 시뮬레이션 구조

- 청년 유입 → 생산가능인구 완만한 감소 또는 일부 회복
- 고용률 유지 → 소득세 기반 유지 → 자체세입 감소폭 완화
- 지방세 수입 기반 안정 → 재정자립도 유지 → 지역 투자지출 확보 가능
- 정주환경 개선 → 인구 순유입 증가로 연결되는 긍정 피드백 루프

(다) 고령화 가속 시나리오

○ 개요

- 청년층 이탈 가속화, 출산율 저하, 고령자 복귀 증가 등의 부정적 사회변화가 중첩되며 고령화가 심화되는 미래 경로를 가정. 이는 정책 개입의 실패 혹은 한계 상황을 가정한 보수적 시나리오

<표 11> 고령화 가속 시나리오 수치 가정

변수	수치 및 가정
생산가능인구 감소율	연 평균 –4.0% (2040 누적 –50% 이상)
고령인구 비중 증가율	연 +2.5%p (2040년 고령자 비중 45% 이상 가능)
지방세 수입 감소율	연 평균 –3.5%
재정자립도 변화	14.73% → 2040년 약 9.0% 이하

○ 시뮬레이션 구조

- 고령화 → 소비 위축, 취득세·소득세 감소 → 자체세입 급감
- 생산가능인구 급감 → 기업 이전, 고용 축소 → 지역경제 침체
- 복지 지출 급증 (노인요양, 주거복지, 의료비 등) → 일반행정/투자사업 축소
- 자체재원 확보 어려움 → 재정자립도 급락 → '재정위기 악순환 루프'

(라) 탄력세율 도입

○ 개요

- 탄력세율 도입 시나리오는 인구감소와 생산가능인구 축소로 인한 세입 감소를 제도적으로 상쇄하기 위해 지방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소득세, 주민세, 취득세 등에 대해 세율을 조정하는 시나리오
- 청년유입이나 경제구조 개선과 같은 인구구조 측면의 대책이 어려울 경우, 직접적인 재정수입 확보 수단으로서의 정책 효과를 검토

<표 12> 탄력세율 시나리오 수치 가정

변수	수치 및 가정
생산가능인구 감소율	기준선 시나리오(–2.9%/년)와 동일 적용
지방세 수입 감소율	기준선의 –2.5%에서 조정 후 → –1.5% 수준으로 완화
재정자립도 변화	2040년 약 11.1% 수준
조정 대상 세목	지방소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조정 범위	+10% 상향 적용 가정(±50% 범위 내에 가능)[3]

○ 시뮬레이션 구조

- 세원 기반은 유지되나 인구 감소로 절대 규모는 축소됨
- 탄력세율 상향을 통해 1인당 지방세 기여액이 증가
- 자체세입 감소폭 완화 → 재정자립도 방어 가능
- 제도적 개입으로 '재정의 기능 유지 능력'을 확보

나. 익산시 대상 시뮬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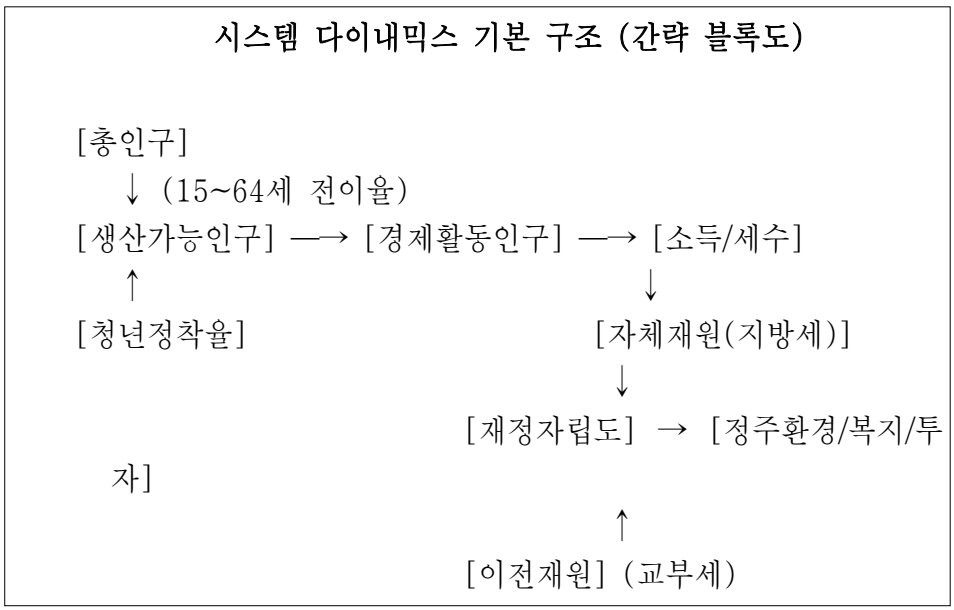
○ 실제 전북특별자치도내 시군 중에서 생산가능인구감소의 비율이 가장 큰 익산시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함

- 익산시의 실제 교부세와 지방세 수입 데이터를 반영한 System Dynamics 시나리오 모형 구성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여 아래 입력

3) 지방세법 제14조 조례에 따른 세율조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제 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분 범위에서 가감할수 있다. 제방세법 제 111조의 재산세, 지방세법 제 84조3의 주민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변수 기반으로 정책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정밀한 프레임워크 구성

<그림 8> 시스템 다이나믹스 기본 구조



(1) 실재정 데이터 기반 모형 입력 변수

○ 기본 재정 지표 (2024년 기준)

- 지방세 수입: 약 1,973억 원
- 총예산 : 13,950억 원
- 지방교부세: 약 5,017억 원
- 특별교부세: 총 149억 원 확보 (재난·시책·현안 사업 포함)
- 재정자립도 : 약 14.14%, 역대 최저치 예상(24년도 예산기준)

- 익산시 1인당 GRDP: 약 3,067만 원, 전북 평균의 98.3% 수준

○ 익산시 시뮬레이션 모형에서 사용된 입력 파라미터 구성표(Input Parameters Table)로 기준선(BAU), 청년정착, 고령화 가속, 탄력세율 시나리오의 핵심 변수들을 비교 형식으로 정리

<표 13>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별 입력 파라미터

구분	BAU (기준선)	청년정착 정책	고령화 가속	탄력세율 도입
총인구 감소율	연 –1.2%	연 –0.6%	연 –2.0%	연 –1.2%
생산가능인구 감소율	연 –2.9%	연 –1.5%	연 –4.0%	연 –2.9%
고령인구 비중 증가율	연 +1.5%p	연 +1.0%p	연 +2.5%p	연 +1.5%p
청년유입률 가정	없음	연 +1.0%p	없음	없음
지방세 수입 감소율	연 –2.5%	연 –1.0%	연 –3.5%	연 –1.5%
2024년 기준 자체세입	1,973억 원	동일	동일	동일
2024년 기준 총예산	13,950억 원	동일	동일	동일
탄력세율 적용 여부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10%)
탄력세율 적용 대상 세목	—	—	—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정책 개입 방식	없음	인구 구조 개입 중심	구조적 악화 방치	세율 조정 통한 수입 유지
기대효과 요약	세수 및 인구 동반 감소	인구 유지 → 세수 방어	인구·세수 동반 급감	인구감소 상태에서도 세수 방어 가능

(2) 인과구조 및 피드백 루프

○ 전반적인 인과구조는 아래의 형태를 보여주나,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피드백 루프를 제시함

- 전체인구 감소 → 생산가능인구 감소 → 경제활동인구 축소 → 소득·고용 감소 → 지방소득세·취득세 수입 감소
- 수입 축소 → 자체세입 하락 → 재정자립도 하락 → 투자성 예산 축소 → 정주환경 악화 → 추가 인구 유출

(가) 고령화 가속

청년 인구 유출 및 고령화 심화

↓

생산가능인구 급감 (노동력 감소)

↓

경제활동 및 소비 위축

↓

지방세 수입 급감 (소득세·취득세 중심)

↓

자체세입 감소

↓

재정자립도 하락

↓

공공투자·기초서비스 축소

↓

지역 정주환경 악화 (교육, 의료, 일자리 등)

↓

인구 유출 가속 및 기업 이탈

↺ (고령화율 상승 및 세수기반 추가 약화)

(나) 청년정착정책

청년정착정책

↓

생산가능인구 유지 또는 증가

↓

경제활동인구 증가 → 지역 고용 및 소득 기반 강화

↓

세수 회복 (지방소득세·주민세 등 증가)

↓

재정자립도 유지 또는 상승

↓

지역 공공투자 확대 (정책사업·복지·인프라 등)

↓

정주환경 개선 (교육·문화·주거·일자리 등)

↓

청년 유입 지속 및 지역 정착률 제고

↺ (생산가능인구 유지 또는 증가로 순환)

(다) 탄력세율

탄력세율 조정권 활용

↓

지방세율 상향 (지방소득세·주민세 등 +10~20%)

↓

1인당 조세부담 증가

↓

세수 감소율 완화 또는 자체세입 방어

↓

재정자립도 유지 또는 안정적 하락 관리

↓

공공투자·기초서비스 유지 (교육·복지·인프라 등)

↓

지역 정주환경 유지 및 서비스 질 유지

↓

조세수용성 제고 및 이탈 방지

↺ (재정 안정 → 탄력적 세율 운용 여지 확보)

(3) 예측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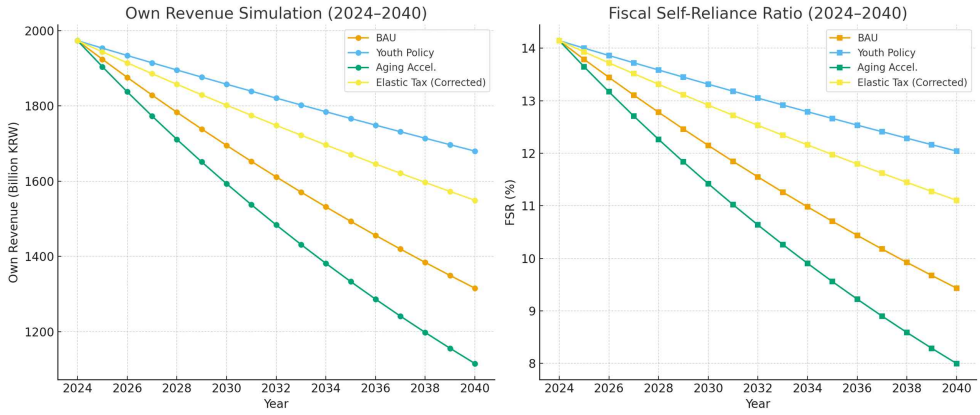
○ 본 모형은 익산시 2024년 기준 지방세·교부세·특별교부세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였고 인구·산업지표(1인당 GRDP) 기반으로 모델 입력값 설정이 가능하도록 설계

○ BAU vs 정책 시나리오 비교를 통해 청년정착정책, 세율 조정, 고령화 대응 전략의 재정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

<표 14> 시나리오별 익산시 자체세입과 재정자립도 예측결과

시나리오	2040년 생산가능인구 (천 명)	2040년 자체세입 (억원)	2040년 재정자립도 (%)
기준선 (BAU)	약 112.1천 명 (–37.6%)	약 1,316억 원 (–33.3%)	9.43%
청년정착 정책	약 141.4천 명 (–21.5%)	약 1,679억 원 (–14.9%)	12.04%
고령화 가속 시나리오	약 93.7천 명 (–48.0%)	약 1,116억 원 (–43.4%)	8.00%
탄력세율 도입	약 112.1천 명 (BAU 동일)	약 1,679억 원 (-21.48%)	11.11%

<그림 9> 익산시 자체세입, 재정자립도 시뮬레이션 그래프



* BAU (기준선): 현재 추세 유지
* Youth Policy: 청년 정착 정책 적용
* Elastic Tax : 탄력세율 도입
* Aging Accel.: 고령화 가속화 상황

○ 기준선(BAU) 시나리오는 인구 및 세수 모두 가파르게 감소하며, 재정자립도가 9%대로 하락하여 재정건전성에 큰 위협이 발생.

○ 청년정착 시나리오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폭을 크게 완화하며, 자체세입 유지와 재정자립도 방어에 효과적.

○ 탄력세율 도입 시나리오는 인구는 줄어들지만, 세수 방어를 통해 청년 정착 수준의 재정 안정성 유지가 가능함을 보여줌.

○ 고령화 가속 시나리오는 가장 취약한 경로로, 인구·세수 동반 급감으로 인해 FSR 8% 이하 추락.

다. 소결

○ System Dynamics 모델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인구와 세입, 지출 간 상호의존 피드백 구조를 드러냄

○ 도내 주요 시군은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며, 복지지출 증가와 맞물려 재정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재정자립도 역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어짐

4. 재정전망에 따른 대책

가. 세수 다변화 및 비과세 감면 축소 전략 마련

□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세 기반 축소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기존의 인구 의존적 세목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세입 구조의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자체재원을 확보해야 함

○ 현재 전북은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전통적인 인구 기반 세목에 집중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세목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라 자연스럽게 축소될 수밖에 없음

- 디지털 세원(예: 디지털서비스세), 환경세(예: 온실가스 배출세), 관광·문화재 기반 이용료 등 비인구 기반 세원 발굴 및 제도화가 필요 또한 전북 내 산업별 과세 기초를 세분화하고, 지역 특화산업(예: 농생명, 재생에너지, 농촌체험 관광 등)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원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각종 비과세 및 감면 제도의 합리화 필요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유치나 민생 안정 명목으로 다양한 감면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세입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감면제도에 대한 총괄 평가와 사후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감면 효과가 미미하거나 중복되는 항목은 과감히 정비해야 함
- 이를 통해 제한된 인구 하에서의 세수 회복을 도모하고, 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

나. 고령친화형 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로 생산인구 유지

□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단순히 세수 감소뿐만 아니라 지역의 노동력 기반 약화, 경제활동 위축,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 다차원적 위기를 초래함.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령친화형 산업 구조로의 전환과 일자리 창출

이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함. 전북은 타 지역 대비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이며, 이 특성을 위기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노인 돌봄 서비스, 실버 헬스케어, 스마트 건강기기, 고령자 맞춤형 주거 및 여가 산업 등은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로, 이를 기반으로 지역 특화 고령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 이러한 산업은 단순한 서비스업을 넘어 ICT 기술, 바이오·의료 산업 등과 융합되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지역 내 중장년 및 청년 고용 확대 효과도 기대

○ 청년과 고령층의 '세대 연계형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맞춤형 직업훈련과 기술이전 체계를 강화해야 함

- 이를 통해 지역에 머무를 이유를 만들어주는 '정주 여건' 개선과 동시에 생산가능인구의 이탈을 완화할 수 있음.

○ 고령사회에 적합한 산업정책은 단순한 복지 비용의 증가가 아니라 새로운 세원 기반을 창출하는 전략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음

다. 재정분권 하의 탄력세율 조정권 적극 활용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제고는 단순히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 확보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세 자체 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특히 전북과 같은 인구감소·고령화 지역에서는 기존 세율 구조로는 수요에 비해 세입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현행 지방세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탄력세율 조정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에 대한 조정 범위(현행 ±10~50%)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중 일부 항목에 대해 한시적 인상을 검토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조정은 단기간의 세입 증가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방정부가 재정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사업을 설계·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
- 다만, 세율 조정은 주민 수용성과 형평성 문제도 동반되기 때문에, 대상별·목적별 조세형평성 분석을 바탕으로 탄력적으로 접근해야 함
- 예를 들어 고소득자 중심의 누진 세율 강화, 공시지가 기준 감면 조정 등의 정책적 설계가 가능할 것임. 이는 단기 재정 보강을 넘어서 지방의 '조세주권' 회복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전략으로 평가됨

라. 중앙정부 대상 이전재원 산정기준의 '인구기준 완화' 요청 필요

□ 전북특별자치도와 같은 비수도권, 저밀도 지역의 가장 큰 재정 의존 구조는 보통교부세와 같은 중앙정부 이전재원이나 현재 대부분의 교부세 산정 기준은 '기준재정수요 - 기준재정수입' 공식에 따라, 인구수와 경제활동지표 비중이 절대적으로 큼. 이 구조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일수록 기초수요도 줄어든다고 간주되므로, 교부세 수혜액이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전북과 같은 지역은 인구기준 중심의 산정체계를 완화하거나 보정계수

반영을 요청해야 함

- 예컨대, 고령화율, 지형 접근성, 농어촌 특성, 재난위험도, 지역 간 격차 등을 교부세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개발이 필요
- 또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지해야 하는 도로, 복지, 교육, 안전 인프라의 '고정적 수요' 구조를 반영한 보정 공식을 도입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임

○ 정책적으로는 '지역소멸 대응 재정특례구역' 지정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거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한 별도 지원 방식과의 연계도 검토할 수 있음

- 단순히 수치 중심의 수요계산을 넘어, 인구감소 지역이 직면한 구조적 불리함을 재정 제도에서 완화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국회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한 중장기 재정정책 협상의 핵심 주제가 될 것임

마. 재정지출의 합리화 노력

□ 재정지출의 합리화 노력은 인구감소로 인해 세입이 축소되는 구조적 재정환경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병행해야 할 핵심 전략임. 세수 다변화나 이전재원 확보가 중장기적 과제라면,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는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수단이자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본 전제임. 특히 고정성·경직성 지출 비중이 높은 지방재정 구조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출 구조 조정이 무엇보다 시급함

○ 지출 항목별 성과 중심 재편이 필요함.

- 단순 항목별 예산 삭감이 아닌, 사업별 투자 대비 산출(ROI)을 기준으

로 성과가 미미한 사업, 중복 사업, 단기성과에 그친 사업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특히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복지 예산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복지사업 간 우선순위 조정 및 중복 지원 배제 기준 정립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해 '지출 구조 진단 모델'이나 '정책사업 평가 시스템'과 같은 데이터 기반 정량 평가체계의 도입도 적극 검토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 합리화 역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핵심 과제

- 현재 많은 출자·출연기관이 설립 목적과는 무관하게 행정 편의적 기능 위주로 운영되거나, 민간과 기능이 중복되며 실질적인 성과 없이 예산만을 소모하는 사례가 발생함
- 이에 따라 각 기관의 설립 목적, 운영 성과, 인력 구조, 예산 대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통합·폐지·전환 등 구조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인구감소로 인해 수요가 줄어드는 서비스(예: 공공문화, 체육시설 등)에 대한 지원기관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원점 재검토가 요구됨
- 더불어, 매년 자동적으로 편성되는 보조금, 위탁사업, 민간경상보조 등의 반복성 예산 항목에 대해서도 성과 및 필요성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함. 이는 단기적으로는 일부 이해관계 충돌을 야기할 수 있으나, 재정지속성을 확보하고 공공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음

○ 결국, 인구감소라는 외생적 요인에 대응하는 지방의 재정 전략은 수입 확대와 동시에 재정지출의 구조적 혁신을 통해 '적은 돈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내는 구조 전환이 병행되어야만 실효성을 가짐

-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지방정부는 재정지출의 합리화를 단순한 긴축이 아닌, 미래지향적 재정체계 구축의 핵심 기제로 인식해야 함

Ⅳ.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현황 및 분석

1.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현황

가. 기본현황

○ 지방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증가 추이

- 2020년 82,154백만원에서 2025년 240,318백만원으로 5년사이에 192.52% 증가

-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북테크노파크로 2025년에 171,991백만원으로 급격히 증가 (글로컬 사업 예산 배정 때문에 이전 대비 약 3.7배 상승)함으로 인한 전체 출연금 증가비율도 크게 증가함

- 다른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 또는 정체 추세를 보임

- 전북연구원, 경제통상진흥원: 꾸준한 증가세

- 신용보증재단: 2022년 급등 후 하락

- 의료원 계열(군산·남원): 전반적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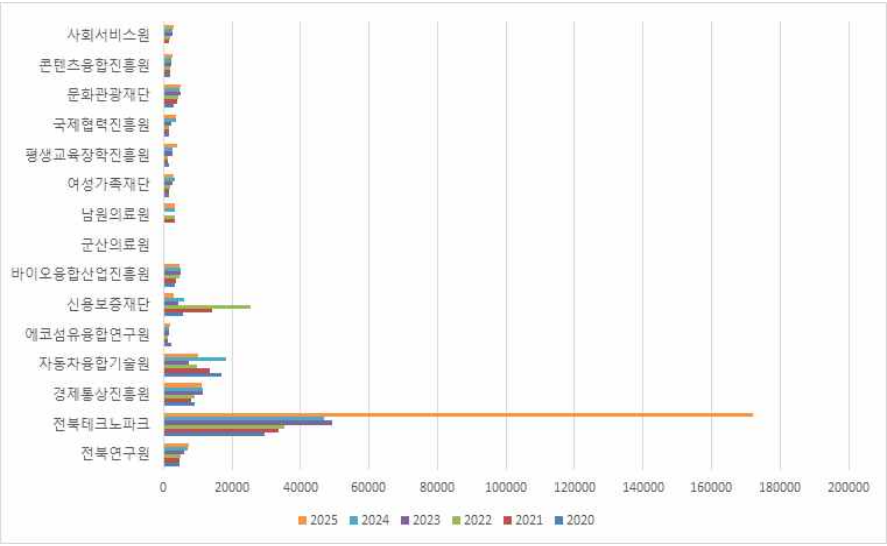
<표 15> 연도별 출연기관별 출연금(2020~현재)

□ 작성기준 : 국비 포함(국가직접 제외), 2015~2024년(최종예산), 2025년(제1회 추경) (단위: 백만원)

연번	기 관 명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15개 기관	82,154	95,384	107,546	102,942	118,516	240,318
1	전북연구원	4,760	4,760	5,130	5,900	6,875	7,403
2	전북 테크노파크	29,491	33,745	35,337	49,278	46,813	171,991
3	경제통상 진흥원	8,995	8,020	8,923	11,298	11,591	11,084
4	자동차융합 기술원	17,030	13,615	9,760	7,472	18,363	10,013
5	에코섬유 융합연구원	2,307	1,397	1,377	1,721	1,525	1,895
6	신용보증 재단	5,820	14,059	25,430	4,450	5,980	3,000
7	바이오융합 산업진흥원	3,205	3,693	4,522	4,961	4,920	4,534
8	군산의료원	378	358	326	276	237	198
9	남원의료원	261	3,296	3,290	398	3,278	3,269
10	여성가족재단	1,748	1,738	1,818	2,476	3,210	3,057
11	평생교육 장학진흥원	1,492	1,371	1,405	2,482	2,548	4,050
12	국제협력 진흥원	1,662	1,652	1,758	2,202	3,674	3,495
13	문화관광 재단	3,076	4,118	4,465	4,999	4,580	5,091
14	콘텐츠융합 진흥원	1,929	1,909	2,004	2,313	2,253	2,643
15	사회서비스원	-	1,654	2,001	2,716	2,669	2,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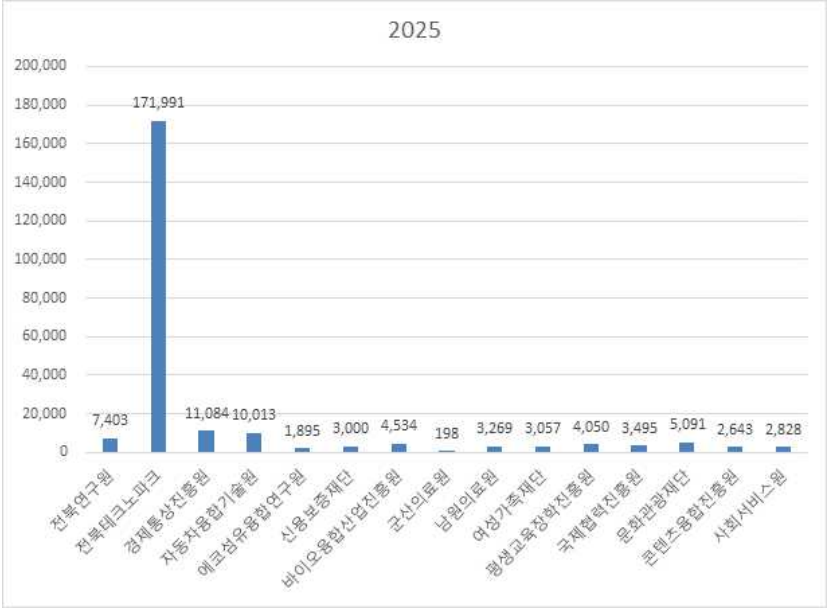
*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내부자료

<그림 10> 전북 출연기관 출연금 변동



<그림 11> 전북 출연기관 출연금 현황

단위:백만원



2. 출자·출연기관 문제점

가. 출자기관

○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출자기관은 현재 도 출자기관은 없으며 시군 출자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음[4)]

- 군산시(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 익산시(신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식회사),
- 완주군(완주테크노벨리주식회사, 완주농공단지개발주식회사),
- 임실군(임실고추엔농산물가공판매),
- 순창군(농업회사법인순창장류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한국절임주식회사),
- 고창군(농업회사법인고창화토배기유통주식회사)

나. 출연기관

□ 전북특별자치도내 출연기관의 주요 문제점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및 경영평가 결과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1) 전북연구원

○ 조직운영 및 경영관리

- 경영 효율성 부족 : 연구원 내 인력 및 조직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

4) 행정안전부(2024). 지방출자·출연기관 현황자료

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 성과관리 미흡 : 연구과제 수행 성과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관리체계가 미흡하며, 외부 피드백 반영 부족 (연구 성과가 단순 보고서 발간에 그치고, 도정(道政) 정책에 활용된 비율이 낮음. 예: '농생명 산업 전략' 보고서는 발간됐으나 실제 도정 사업화 반영률이 미비)
- 중복 연구 및 연구 방향성 부족 : 기존 연구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과제가 많고, 장기적 연구 로드맵이 불분명 (일부 연구부서에서 비슷한 주제의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여 중복 연구 발생 .예: 인구감소 대응 연구가 여러 부서에서 별도로 수행되어 결과물이 분산됨)

○ 재정 집행 및 예산 관리

- 예산 낭비 소지 : 외부 용역 의존도가 높고, 자체 연구비 관리에서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 가능하다는 지적 (자체 연구 인력을 활용하지 않고, 외부 용역으로 과제를 다수 발주. 예: 교통·물류 분야 연구의 상당 부분이 외부기관 위탁)
- 성과 대비 예산 효율성 미흡 : 연구비 투입에 비해 정책 반영도와 실질적 파급력이 낮음(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전북형 신재생에너지 정책 연구'가 중앙정부 및 타 시도 연구와 크게 차별성이 없어 활용도 낮음)

○ 연구 성과와 정책 반영

- 정책 기여도 부족 : 연구원의 정책 연구 결과가 실제 전북도의 정책 수립 및 실행에 반영되는 정도가 낮음('전북 청년 정책 종합계획'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나, 실제 도정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됨)
- 현안 대응력 미흡 : 급변하는 지역 현안(인구감소, 지역소멸, 산업 전

환 등)에 대해 선제적·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평가(군산 조선소 폐쇄, 새만금 사업 등 지역 현안 발생 시, 연구원이 즉각적인 대응 연구를 제시하지 못함)

○ 인사 및 연구윤리

- 인사 관리 불투명성 : 채용 및 승진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필요 (채용 공고와 실제 채용 절차 간 불일치 사례 지적. 특정 연구직 채용 과정에서 공고와 다른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됨)
- 연구윤리 문제 지적: 일부 연구과제에서 인용, 표절, 연구윤리 준수 여부에 대한 우려 제기(일부 연구과제에서 타 연구기관 보고서와 유사도가 높아 표절 의혹 제기. 예: 교통 정책 관련 연구에서 기존 연구와 40% 이상 유사)

o 최근 경영평가 결과분석

- 경영전략과 계량목표 간 연계성이 부족하여 기관 비전 실현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함.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분석이 미흡하고, 연구과제·연구지원·성과확산·지자체 컨설팅 등 사업 성격 구분이 불명확함.

- 연구성과가 여전히 실적 위주로 관리되어 정책 활용 중심의 성과환류 체계가 미흡하며, 도정 정책이나 시·군 사업과의 연계·확산이 제한적임. 따라서 전략-성과의 정합성 강화, 환류 시스템 제도화, 정책 반영 실효성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표 16> 주요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도	구분	문제점	개선 방향
2025년	전략 및 목표 관리	전사 경영전략과 계량목표 간 연계성 부족	경영목표와 사업성과지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중장기 목표 달성 여부가 기관의 비전 실현에 기여하도록 체계화 필요
	사업계획 수립	이해관계자 분석 미흡, 사업별 성격 구분 불명확	사업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분석을 강화하고, 연구과제·연구지원·성과확산·지자체 컨설팅 등 사업 성격을 명확히 구분
	성과 관리 체계	연구성과가 실적 위주로 관리, 정책 활용과의 연계 부족	연구성과 관리체계를 "정책 활용 중심"으로 전환하고, 자체평가·외부평가와 연계한 환류 활동 강화
	성과 확산 및 환류	연구성과의 도정 정책·시군 사업 연계 부족, 공유·환류 장치 미흡	연구성과 공유회 등 제도화된 성과 환류 시스템 정착,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모니터링을 통한 실질적 정책 반영 확대

<표 17> 최근 경영평가 결과

연도	2023	2024	2025
등급	나	가	나

<표 18> 2025년도 건전재정 관련 지표 경영평가 결과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내용		배점	달성률	득점
일반관리비 충당률		0.80점	83.75%	0.67점
당기순이익 증가율		0.80점	52.50%	0.42점
재정자립도 증가율		1.40점	84.29%	1.18점
자체수입률(II유형 미평가)				
재무/예산 건전성		4.00점	75.00%	3.00점
(지표 내부 항목)	총인건비 인상율	기준 준수로 평가[5]		8.02%
건전재정관련 지표 소계		7.00점	75.29%	5.27점

(2) 국제협력진흥원

○ 국외사무소 운영 부실

- 해외사무소(베트남, 일본 등) 운영성과가 미흡.
- 파견인력 관리 부재, 현지 활동 실적 부족.
- 출장·파견 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실질적 사업성과 확인 어려움

○ 사업 성과 미흡

- 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한 다수 국제교류사업이 일회성 행사에 그침.
- 참여 인원과 기관의 만족도는 높게 보고되지만, 중장기적 성과나 네트워크 구축 효과 미비.

5)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관련 기준(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은 정책인상률 2.5%, 호봉상승분 1.4%를 합한 3.9% 초과시 미준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전북연구원의 경우 기준을 초과한 8.02%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에서는 기준준수로 평가되어 감점을 받지 않음

- 국제회의·포럼 개최 후 후속 협력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 다수

○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 국제행사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예산 집행 지적.
- 인건비·운영비 비중이 높아, 실질적 국제교류 사업비보다 관리비 중심 구조.
- 출장비·사무소 운영비 과다 집행 우려

○ 지역 기여도 부족

- 사업 추진이 주로 국외 네트워크 형성에 집중되어, 도내 기업·기관과의 연계 부족.
- 국제협력 성과가 지역 산업 및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함.
- 도내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 구조도 미흡

○ 조직 운영 및 인사 관리 문제

- 전문 인력 부족: 국제협력 전문성·외국어 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 한계.
- 인사 운영이 경직되어 우수 인재 영입과 장기적 역량 축적이 어려움.
- 감사 과정에서 기관장이 일부 사업 현황을 정확히 답변하지 못해 리더십 부족 지적

o 최근 경영평가 결과분석

-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비전 내재화 부족, 정책 반영 미흡, 재정·조직 운영 효율성 한계, 성과지표 연계 부족, 환류·투명성 미흡이 지적되었으며, 성과 공개·KPI 도입·재정연계 강화·고객 대응 체계화·전략적 홍보 다각화 등이 개선방향으로 제시되었음

<표 19> 주요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도	구분	문제점	개선 방향
2025년	경영이념 및 비전 관리	미션·비전에 대한 구성원 내재화 수준이 낮고, 경영이념 실천성과 공유가 미흡	ESG 성과보고서 발간 등 주요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션·비전 인식 진단을 통해 구성원 내재화 수준을 점검
	도 정책 반영 및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활동, 인권 이슈 대응 등 정책 반영이 구체적 성과로 연결되지 못함	사회공헌활동 KPI 체계 도입, 인권 이슈 대응계획 수립 및 실행, 산업안전보건법 기반 위험성 평가시스템 구축 필요
	재정 운영 및 효율성	중장기 재정계획과 예산편성 간 연계 부족, 운영비 절감 전략 미흡	중장기 재정계획–예산편성의 연계를 강화하고, 운영비 절감계획 수립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조직 운영 및 대외 소통	홈페이지 등 정보 제공의 맞춤형 기능 부족, 고객군별 요구사항 관리체계 미비	홈페이지 맞춤형 콘텐츠 제공, 고객 정의 기준 명확화, 고객군별 요구사항 관리체계 및 불만 대응 프로세스 구체화 필요
	성과 관리 체계	경영전략–성과지표 연계가 약해 기관 비전 실현 기여도가 낮음	성과지표를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기관 비전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화
	특성 사업 운영	양성평등, 국제교류, 홍보사업 등에서 정의·범위·전략이 구체적이지 않음	사업 정의·범위 구체화, 매체 활용을 포함한 전략적 홍보 다각화, 간접지원·직접지원 효과성 비교분석 강화
	성과 환류 및 투명성	자율지표 선정 및 운영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환류 체계 미흡	도청·관련 단체·재단 구성원 참여 공청회, 의견수렴 체계를 통한 투명한 환류시스템 강화

<표 20> 최근 경영평가 결과

연도	2023	2024	2025
등급	가	가	가

<표 21> 2025년도 건전재정 관련 지표 경영평가 결과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내용		배점	달성률	득점
일반관리비 충당률		0.80점	100.00%	0.80점
당기순이익 증가율		0.80점	100.00%	0.80점
재정자립도 증가율		1.40점	100.00%	1.40점
자체수입률(II유형 미평가)				
재무/예산 건전성		4.00점	80.00%	3.20점
(지표 내부 항목)	총인건비 인상율	기준 준수로 평가		3.70%
건전재정관련 지표 소계		7.00점	88.57%	6.20점

(3) 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장학금 지원의 실효성 부족

-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수혜자 수와 효과가 제한적.
- 장학금 수혜자의 학업 성취도, 진로성과 등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성과 분석 부족.
- 성과에 기반한 차등 지원이 미흡하여 재정 투입 대비 효율성 낮음.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미흡

- 프로그램이 단기·일회성 위주로 운영됨.
- 도민 수요와 연계성이 부족하고, 실제 생활·취업 연계성이 떨어짐.
- 참여자 만족도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 피드백 반영 부족.

○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 홍보·운영비 비중이 과도하여 실제 장학금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규

모 축소.

- 특정 사업에 반복적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누적되지 않음.
- 집행 과정에서 계약 투명성 부족 및 집행 기준 불명확 지적.

○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부족

- 도내 대학·학교, 기업과의 협력체계가 미흡.
- 장학사업과 지역 산업 수요 간 연계성이 부족해 지역 인재 육성 효과 미비.
- 평생교육 사업 역시 도민 맞춤형보다는 중앙정부 공모사업 성격에 치중.

○ 조직·인력 운영 문제

- 전문 인력 부족으로 장학사업 관리와 평생교육 기획 역량 한계.
- 인력 교체 잦아 사업 지속성이 낮고, 내부 평가 및 혁신 부족.
- 기관장의 리더십 및 전략적 비전 부재 지적.

o 최근 경영평가 결과분석

-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전략 - 계획 연계 부족, 조직 간 연계 미흡, 소통 체계 한계, 사회적 책임 수행 미비, 재정·성과관리 취약, 기금 확보의 어려움이 주요 지적사항으로 확인되었고, 중장기 전략 정비, 조직 연계 강화, 양방향 소통 활성화, 안전·약자 지원 강화, 재정계획 체계화, 후원 확대가 개선방향으로 제시되었음

<표 22> 주요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도	구분	문제점	개선 방향
2025년	경영이념 및 전략	중장기 전략과 연간 경영계획 간 연계성이 부족	중장기 경영전략–연간 경영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여 일관된 추진체계 마련
	조직 운영	장학숙과 평생교육 간 조직적 간극 존재	단계적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조직 간 연계·통합 강화
	도 정책 반영 및 소통	홈페이지의 소통 기능과 민원·제안 채널 운영 미흡	홈페이지 양방향 소통기능 활성화 및 민원·제안 채널 운영 고도화
	사회적 책임	사회적 약자 정의·대상 불명확, 안전의식 제고 활동 미흡	기관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약자 정의 재정립, 장학숙 참여형 안전체험 프로그램 도입
	재정 운영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부재, 집행률 관리체계 미흡	재무전략·목표·시나리오 기반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구축, 월·분기 집행계획과 차이분석·사후관리 중심의 집행률 관리체계 정비
	성과 관리 및 환류	장학·평생교육 사업의 성과환류 체계 미흡, 외부 의견 반영이 제한적	성과분석 결과를 단·중·장기로 구분하여 관리, 외부 의견 반영을 강화하고 환류 시스템 정착
	재원 조달	기금 및 후원금 확보가 타 지자체 대비 열악	정기적 후원금 유치(기업 후원 등)를 통해 기금 기반 확충

<표 23> 최근 경영평가 결과

연도	2023	2024	2025
등급	나	다	다

<표 24> 2025년도 건전재정 관련 지표 경영평가 결과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내용		배점	달성률	득점
일반관리비 충당률		0.80점	72.50%	0.58점
당기순이익 증가율		0.80점	27.50%	0.22점
재정자립도 증가율		1.40점	100.00%	1.40점
자체수입률(II유형 미평가)				
재무/예산 건전성		4.00점	65.00%	2.60점
(지표 내부 항목)	총인건비 인상율	기준 준수로 평가		3.82%
건전재정관련 지표 소계		7.00점	68.57%	4.80점

(4) 자동차융합기술원

○ 예산 집행 및 이월 문제 : 명시이월·사고이월 규모 과다

- 2023년 기준 명시이월 191억 원, 사고이월 171억 원.
- 특히 전북형 30대 핵심부품·소재개발 사업에서 예산 집행 지연으로 1,270만 원 이월
- 사업이 예산 승인 후에도 9개월 이상 지연 착수되는 사례 발생. (3년간 60억 도비 투입 사업이 2024년 9월에서야 본격 시작)
- 내부 담당자 교체·조직 개편을 이유로 사업이 지연 → “방만한 예산·사업 관리”라는 비판

○ 국비 확보 부진 및 재정 악화

- 2024년 국비 1,100억 원 → 2025년 510억 원으로 절반 감소.
- 원장 취임 후 기대와 달리 신규 국비 과제 확보 저조, 자본잠식 우려까지 제기됨.

- 기금 일부를 인건비·운영비로 사용 → 본래 장비 유지·보수 목적과 어긋나며 이사회에서도 부적절 지적

○ 인사·조직 운영 문제

- 높은 이직률과 인력 충원 미흡
- 원장 취임 전 3년간 이직률 64% → 최근 2년간 5% 미만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결원 10명 수준.
- 팀장 보직 기피 현상,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인원을 줄이자”는 논의까지 발생.
- 업무 과중 개선책 마련이 지연, 노사 협상도 진통

○ 연구개발 및 공모사업 성과 저조

- 공모사업 선정률 하락

2022년 : 11개 사업 → 2025~2026년엔 3개 사업만 진행 가능.

- 지역 기업과의 소통 부족 : 도내 기업 미팅 건수가 타 출연기관 대비 가장 적음.
- 원장이 강조한 외부 네트워크 성과가 실질적 R&D 확대로 이어지지 못함

○ 국외출장 및 출장비 집행 논란

- 해외출장 건수 증가 (2022년 대비 2023~2024년 급증).
- 일부 결과보고서 외부 기고문 베껴쓰기, 시사점 부실 작성 사례 발견.
- 독일 등 특정 지역 출장 집중, 출장비 집행(연 1억 7천~1억 9천만 원 규모)이 과다하다는 지적
- 수탁과제 수행 명목의 해외출장도 성과 미흡.

○ 시설 및 사업 관리 부실

- 주행시험장 운영 수입 19억 원(2023년) → 현대차 등 소수 기업 의존.
- 전북형 30대 상용차 핵심부품 개발 지원: 60억 지원에도 특허·매출 성과 미흡.
- 일부 항공(UAM/AAM) 사업은 드론사업과 구분 불명확, 사업 부풀리기 지적
- 항공산업 얼라이언스, 도심항공교통 협의체와 중복 협의체 운영 → 예산 낭비 우려

o 최근 경영평가 결과분석

-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재정·조직운영 체계 미흡, 고객·성과관리 부족, 대외협력 성과 관리 한계 등이 지적되었으며, 중장기 재무전략 고도화, 직무분석 기반 조직정비, 고객·불만 관리체계 확립, 사업성과 점검 강화, 인프라 활용 촉진, 협력 성과 정량화가 개선방향으로 제시되었음

<표 25> 주요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도	구분	문제점	개선 방향
2025년	경영 전략 및 재정 운영	중장기 재무전략과 목표 수립이 부족하고, 재무운영·관리계획의 체계성이 미흡	환경·시나리오·자원 배분 전략을 포함한 중장기 재무전략·관리계획 고도화 필요
	조직 운영	조직 규정 체계와 직무분석 기반 R&R이 불명확, 협업 촉진 장치 부족	사무위임전결규정 현행화, 직무분석 기반 R&R 재정립, 조직통합 후속 보완, 협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프로세스 개선 마련
	외부 소통 및 고객 관리	고객군 세분화 및 불만 관리체계 미흡	고객유형별 관리방안 수립, 불만 데이터 분석·사후관리·재발방지 체계 구축 및 교육 강화
	사업 추진 및 성과 관리	경영환경 변화 대응과 문제 해결·사업 활성화 사례 분석 부족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 사례와 성과측정 지표 달성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업 효과성 제고
	특성 사업 운영	미래차·바이오융합산업·인프라 활용 등에서 실질적 성과 창출이 제한적	광역단위 연계협력 강화, 미래산업 포지셔닝 제고, 인프라 활용 촉진(수수료 부담 완화 모델 등)
	대외 협력 및 환류	외부 기관과의 협력 성과는 있으나, 단순 실적 나열 수준에 그쳐 효과성 설명 부족	공동 사업·기술개발 과제 발굴, 장비 가동률 증대 등 실질적 협력 성과를 정량·정성 지표로 제시하고 환류 체계화

<표 26> 최근 경영평가 결과

연도	2023	2024	2025
등급	나	다	다

<표 27> 2025년도 건전재정 관련 지표 경영평가 결과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내용		배점	달성률	득점
일반관리비 충당률		1.00점	57.00%	0.57점
당기순이익 증가율		1.00점	100.00%	1.00점
재정자립도 증가율		1.50점	57.33%	0.86점
자체수입률(II유형 미평가)		1.50점	44.00%	0.66점
재무/예산 건전성		4.00점	65.00%	2.60점
(지표 내부 항목)	총인건비 인상율	기준 준수로 평가[6]		17.61%**
건전재정관련 지표 소계		9.00점	63.22%	5.69점

(5) 에코융합섬유연구원

○ 공모사업 성과 부진 : 신청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정률 저조

- 2022년: 25건 신청 중 19건 선정(76%)
- 2023년: 41건 신청 중 17건 선정(41.5%)
- 2024년: 43건 신청 중 23건 선정(53.4%)
- 산업부·국토부·환경부 등 대형 과제 도전은 긍정적이나, 기술 차별성·혁신성·사업화 가능성 부족으로 탈락률이 높음
- 준비되지 않은 과제 도전으로 행정력과 재정 낭비 지적.

○ '올라벨(OL-LABEL)' 공동브랜드 사업 실패

- 2019년 시작, 2024년까지 약 7억 원 도비 투입.
- 성과: 5년간 총 매출 740만 원에 불과.

6) 정책인상률 2.5%, 호봉상승분 1.4%를 합한 3.9% 초과 시 미준수인데, 17.61%의 인건비 상승률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에서 준수판정을 받음(도 승인 인상률을 반영한 것으로 표기함)

- 무신사 입점 실패, SSG·11번가·옥션 등 온라인 판매 실적 미비.
- 홈페이지 방문자는 15만 명 수준이나, 실제 판매성과 전무
- 무분별한 유지보수 계약과 관리 부실로 홈페이지 게시판에 대마·마약·도박 광고 글 노출 → 기관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
- 도의회로부터 “매년 실망을 안겨주는 기관”이라는 강한 질책.

○ 사업 운영 및 계약 관리 문제

-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
- 광주·서울 외부업체와 수의계약 반복, 전문성 부족 의혹.
- 관리 부재로 불법 광고글이 방치됨.
- 한국표준협회에 경영컨설팅 용역을 반복 발주했으나 경영평가 3년 연속 ‘다등급’ → 효과 없는 용역 남발 지적.
- 수의계약 및 쪼개기 계약 의혹 제기, 전수조사 필요성 언급.

○ 외부 협회 의존 및 지역 기여 부족

- 스마트 의류제조공장 클러스터 구축사업: 주관이 외부 협회(한국아웃도어스포츠산업협회)로, 도내 기업 회원사 없음.
- 도내 기업 지원이 불투명하고, “왜 전북도가 예산을 투입해 외부 협회를 돕느냐”는 원성 제기

○ 경영관리 및 조직 운영 미흡

- 경영평가 3년 연속 ‘다등급’ : 기관 혁신 부족, 성과관리 부재.
- 수의계약 관행과 투명성 부족으로 재정 집행의 신뢰성 훼손.
- 연구원장의 답변 부정확, 사업 현황 파악 부족 등 리더십 부재가 지적됨.

o 최근 경영평가 결과분석

-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비전·전략 내재화 부족, 성과관리 체계 미흡, 소통·재정·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사업 지속성 불확실성이 지적되었으며, 구체적 전략계획 수립, ESG 및 제안제도 환류 강화, 홈페이지 개선, 재무계획 일원화, 인력·평가 체계 합리화, 중장기 사업 전략화가 개선방향으로 제시되었음

<표 28> 주요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도	구분	문제점	개선 방향
2025년	경영이념 및 전략	미션·비전 인식·공유가 부족하고, 연간 경영계획이 구체성이 낮음	이해관계자 대상 미션·비전 인식조사 실시, 과제별 목표·주체·예산이 구체화된 연간 경영계획 수립
	성과관리 및 환류	ESG 실행과제 관리 미흡, 제안제도 실행률 저조	ESG 과제 정량평가·환류체계 고도화, 제안제도 실행률 제고, 무상임대 장비 활용성과 KPI 관리 강화
	도 정책 반영 및 소통	홈페이지 정보·검색·소통 기능이 미흡하여 이용 편의성이 떨어짐	홈페이지 정보구성 개선, 검색 및 소통 기능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시의성 강화
	재정 운영	재무전략과 재무계획 간 정합성이 부족	재무전략-재무계획을 일원화하고 중장기 목표 정합성 강화
	조직 운영	인력 운영과 평가 기준의 합리성이 부족(부서·개인 간 불균형)	부서업적·개인업적 평가 비중 조정, 정원·현원 대비 본부 운영 적정성 재검토
	중장기 사업 지속성	소상공인 교육·컨설팅 사업의 범위·재원 계획 미흡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범위 확대 및 재원 확보방안을 전략과제로 설정하여 지속성 강화

<표 29> 최근 경영평가 결과

연도	2023	2024	2025
등급	다	다	나

<표 30> 2025년도 건전재정 관련 지표 경영평가 결과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내용		배점	달성률	득점
일반관리비 충당률		1.00점	91.00%	0.91점
당기순이익 증가율		1.00점	46.00%	0.46점
재정자립도 증가율		1.50점	100.00%	1.50점
자체수입률		1.50점	72.67%	1.09점
재무/예산 건전성		4.00점	60.00%	2.40점
(지표 내부 항목)	총인건비 인상율	기준 준수로 평가[7]		9.67%
건전재정관련 지표 소계		9.00점	70.67%	6.36점

(6) 신용보증재단

○ 자산 운용 및 수익률 저조

- 현금성 자산 운용 수익률 전국 17개 재단 중 10위권 수준.
- 일부 예치금이 연 0.5% 저금리 상품에 묶여 있어 “방치” 비판.
- 운용 수익 개선을 위해 CMA/MMF 등 활용 필요성이 지적됨

○ 보증 실행 미흡 및 대출 거절 문제

7) 정책인상률 2.5%, 호봉상승분 1.4%를 합한 3.9% 초과 시 미준수인데, 9.67%의 인건비 상승률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에서 준수판정을 받음(도 승인 인상률을 반영한 것으로 표기함)

- 최근 3년간 보증서 발급 후 미실행·반려 건수 1,400여 건 발생.
- 은행별 심사기준 상이, 소상공인들이 보증서를 들고 가도 실제 대출 거절 사례 다수.
- 신용회복·채무조정 지원 등 후속 대책 부족 지적

○ 저신용·영세 자영업자 지원 한계

- 대위변제율 상승 → 대부분이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다중채무자 비율 약 56%.
- 평균 대출액 3천만 원 미만, 취약계층 중심.
- 사각지대 구제 방안 미흡, 보다 적극적인 저신용자 보증 지원 요구

○ 임직원 처우 및 임금체계 문제

- 5·6급 직원 기본연봉이 최저임금보다 낮음 (월 203만 원 수준).
- 생활임금 미적용, 하위직 처우 열악.
- 반면 성과급·임금 인상은 고위직 중심으로 확대 → 임금 격차 심화
- “청년들이 남고 싶지 않은 직장”이라는 비판.

○ 불필요한 행사·운영비 지출

- CEO 포럼 등 조찬 행사에 연간 수천만 원 소요 → 경기 침체 속 불필요 지출이라는 지적.
- 교육훈련비·해외연수 비용 집행 기준 불명확, 일부 직원 해외연수 비용 과다

○ 채권 회수율 저하

- 채권 회수율이 최근 2년간 14%p 하락.

- 경기침체 상황 고려 없이 무리한 회수보다 유연한 채권관리 방안 요구

○ 사무실 임차 및 보증금 운용 논란

- 전주상공회의소 건물 임차 시 보증금 35억 원 납입 → 과도하다는 지적.

- 보증금 회수 안정성 및 재정 운용 적정성에 대한 우려 제기

o 최근 경영평가 결과분석

- 전북신용보증재단은 보증제도 실효성 한계, 채권 회수율 저하, 임차보증금의 적정성 논란, 대위변제 리스크가 지적되었으며, 금융 사각지대 해소, 채권 회수 전문성 강화, 재무 리스크 관리, 대위변제 대응 전략 마련이 개선방향으로 제시되었음

<표 31> 주요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도	구분	문제점	개선 방향
2025년	보증제도 운영	보증서를 발급했음에도 채권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하는 사례가 반복 발생 → 금융 사각지대 발생	금융기관과 협력해 대출 거절 시 후속조치 및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 금융 사각지대 해소
	채권 관리	2022년 대비 채권 회수율이 13% 감소, 채권 회수 전문성 부족	경기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회수 전략과 채권 회수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
	재무 건전성	본원 사무실 임차보증금(35억 중 2천만 원)이 과도하다는 지적, 보증금 손실 가능성 우려	건물 평가액과 임차보증금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위험 관리 방안 수립
	위험 관리	연말에 역대급 대위변제액 발생 가능성 우려 제기	대위변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모니터링 및 대응 시나리오 마련

<표 32> 최근 경영평가 결과

연도	2023	2024	2025
등급	가	가	가

<표 33> 2025년도 건전재정 관련 지표 경영평가 결과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내용		배점	달성률	득점
일반관리비 충당률		1.00점	67.00%	0.67점
당기순이익 증가율		1.00점	88.00%	0.88점
재정자립도 증가율		1.50점	100.00%	1.50점
자체수입률		1.50점	100.00%	1.50점
재무/예산 건전성		4.00점	75.00%	3.00점
(지표 내부 항목)	총인건비 인상율	기준 준수로 평가		3.86%
건전재정관련 지표 소계		9.00점	83.89%	7.55점

(7) 경제통상진흥원

○ 도쿄사무소 설치 및 파견 절차 위반

- 해외사무소 설치 시 필요한 정관 개정, 이사회 의결, 운영 지침 마련 없이 졸속 추진됨
- 공무원 파견 과정이 불투명하고 8일 내에 급하게 선발되어 '꼼수 파견', '불법 사무소 운영'으로 지적됨
- 초기에 도민회 사무실을 무상 사용(협약도 없음) → 이후 5년 임차 계약 체결(2024.2~2029.2) → 장기 재정 부담 발생

○ 사무소 운영 목적 불분명

- 통상 업무라기보다 국제교류·관광·홍보 등 성격이 강해 본래의 설립 취지와 불일치
- "전북 위상에 꼭 필요하지 않은데 도지사 지시로 즉흥적 추진"이라는 비판 제기

○ 행정 절차 및 감독 부재

- 해외사무소 운영 지침·매뉴얼이 부재하여 향후 운영의 정당성이 취약
- 의회와 협의 없이 5년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출연금 지속 부담 우려
- 향후 이사회 소집 및 절차적 보완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됨

o 최근 경영평가 결과분석

- 경제통상진흥원은 비전 내재화 부족, 사회공헌·안전관리 미흡, 조직운영 비효율, 해외·국제교류 성과 관리 한계가 지적되었으며, 성과 공개·ESG 강화, KPI 기반 사회공헌 관리, 행정·인력 운영 개선, 국제교류 성과 분석 체계화가 주요 개선방향으로 제시되었음

<표 34> 주요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도	구분	문제점	개선 방향
2025년	경영 전략 및 비전	미션·비전 내재화 수준이 낮고, 성과 공개 및 실질적 효과성 분석이 부족	미션·비전 인식도 진단을 통해 내재화 수준을 점검하고, ESG 성과보고서 발간 등 주요 성과 공개 방안 마련
	사회적 책임 및 정책 반영	사회공헌활동의 성과 지표 부족, 안전관리 예산 배분계획 미흡	사회공헌활동 KPI 체계 도입, 안전관리 예산 항목별 배분계획 정교화 및 관리 강화
	조직 운영	행정지원 체계(매뉴얼·디지털 분장시스템) 미흡, 높은 이직률, 과도한 업무부담	행정지원 체계 정비, 직무만족도 제고 방안 마련, 인력배치 최적화(대체인력 운영 포함)
	특성 사업 운영	해외진출 지원과 국제교류 사업이 양적 실적 중심, 정책 기여도 평가 미흡	해외진출 지원사업 발굴·확대 및 성과 분석 체계화, 국제교류 질적 성과 분석과 정책적 기여도 평가체계 구축

<표 35> 최근 경영평가 결과

연도	2023	2024	2025
등급	나	나	나

<표 36> 2025년도 건전재정 관련 지표 경영평가 결과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내용		배점	달성률	득점
일반관리비 충당률		1.00점	80.00%	0.80점
당기순이익 증가율		1.00점	40.00%	0.40점
재정자립도 증가율		1.50점	100.00%	1.50점
자체수입률(II유형 미평가)		1.50점	100.00%	1.50점
재무/예산 건전성		4.00점	65.00%	2.60점
(지표 내부 항목)	총인건비 인상율	기준 준수로 평가		3.60%
건전재정관련 지표 소계		9.00점	75.56%	6.80점

(8) 전북테크노파크

○ 기관 운영 및 관리 문제

- 원장의 관용차(G80 렌트, 월 150만 원 수준) 사용이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집행이라는 지적
- 원장이 의회와의 소통 부재로 현안 공유 부족, 위원들 다수와 교류가 거의 없다는 문제 제기

○ 이차전지·고도분석센터 사업 관리 부실

- 369억 규모의 이차전지 고도분석센터 사업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음에도 의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

- 공모 선정 당시 대대적 홍보와 달리 추진계획 구체성 부족, 시설 수요·운영계획·비용 분담 미흡

○ 교육·인력양성 연계 사업 부진

- 이리공고 마이스터고 지정 무산 → 인력 수급 차질 우려
- JB지산학협력단(RIS/라이즈 사업) 관련 2년 연속 최하위 평가, 단장 대기발령, 직장 내 괴롭힘·폭언 등 조직 기강 문제 발생
- 평가 등급이 라이즈 사업 예산(800억 기대 → 500억 축소 예상)에 직접적 악영향

○ 사업 공정성 및 장비 운영 문제

- 선도기업 지원사업에서 특정 기업에 편중 지원 의혹 (일부 기업은 수억 원, 다수는 수백만 원)
- RIS 장비 구매 시 3000만 원 이상 장비 거의 없음, 대부분 2,900만 원대 쪼개기 구매 → 연구재단 심의 회피 및 실효성 저하 우려

o 최근 경영평가 결과분석

- 전북테크노파크는 성과 관리의 실효성 부족, 수요자 중심 서비스 개선 한계, 외부 환경 대응 전략 미흡이 주요 지적사항으로 나타났으며, 평가 적정성 확보, 정례적 의견수렴 강화, 리스크 관리전략 수립 등이 개선방향으로 제시되었음

<표 37> 주요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도	구분	문제점	개선 방향
2025년	경영 전략 및 성과 관리	성과분석 및 환류 활동이 있으나, 사업 여건(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지 못한 평가로 실질적 효과성 한계	사업 추진 여건을 반영한 성과 관리·평가체계를 정비하여 적정성 확보
	수요자 중심 서비스	입주기업·입주민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체계가 일부 강화되었으나, 지속적 개선 장치 부족	수요자 관점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정례적 의견수렴·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위험 요인 대응	경기 침체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부족	산업·부동산 경기 등 외부 요인을 반영한 리스크 관리 및 대응 시나리오 수립

<표 38> 최근 경영평가 결과

연도	2023	2024	2025
등급	다	나	나

<표 39> 2025년도 건전재정 관련 지표 평가 결과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내용		배점	달성률	득점
일반관리비 충당률		1.00점	0.00%	0.00점
당기순이익 증가율		1.00점	24.00%	0.24점
재정자립도 증가율		1.50점	100.00%	1.50점
자체수입률(II유형 미평가)		1.50점	100.00%	1.50점
재무/예산 건전성		4.00점	75.00%	3.00점
(지표 내부 항목)	총인건비 인상율	기준 준수로 평가[8]		5.94%
건전재정관련 지표 소계		9.00점	69.33%	6.24점

(9) 여성가족재단

○ 계약 및 집행의 적정성 문제

- 수의계약 남용 의혹: 「전북 여성일자리 미래 전망과 전략 수립 기초 연구」 용역(2,500만 원)을 광주 소재 여성기업과 수의계약 체결했음.
- 일반적으로는 2,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이 원칙이나,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가능 규정을 적용했음.
- 그러나 계약 업체의 소재지·성격 등에 대한 검증 부족, 특혜 시비 가능성 지적

○ 인력 운영 및 조직관리

- 정원 미충원: 정원 64명 중 실제 현원은 61명, 취업상담사 2명과 8급 직 2명 공석 상태. 일부 채용은 지원자 부족으로 미충원

8) 정책인상률 2.5%, 호봉상승분 1.4%를 합한 3.9% 초과 시 미준수인데, 5.94%의 인건비 상승률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에서 준수판정을 받음(도 승인 인상률을 반영한 것으로 표기함)

- 연구직 이직: 주요 연구과제를 담당했던 연구자가 타 기관으로 이직 → 연구 연속성 저해.
- 비정규직 비율 과다 : 새일센터 및 일부 연구보조 인력 등 다수가 계약직(비정규직). 업무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

○ 연구성과 관리 미흡

- 일부 연구용역은 보고서 발간이 지연되거나, 연구자가 사직하여 성과 활용에 차질 발생
- 연구결과가 정책화·의회 보고·공론화로 연결되지 않고 내부 실적에 머무는 경우 많음.
- 지역업체보다는 외부(광주 소재 기업 등)와 계약하는 사례가 있어 지역연구기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 경영평가 및 제도 이행 부족

- 경영평가 : 2024, 2025년도 평가에서 나등급으로 하락.
- 특히 정책연구 결과 공개 지침 준수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마이너스 평가
- 조례 이행 미흡: 장애인 고용률, 고졸자 고용,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율 등 조례상 의무 이행률이 법정 기준에 미달

○ 교육·일자리 사업 운영 문제

- 직업능력개발 교육 과정(자격증 취득 과정 등) 과목 수와 운영 실적 불일치. 일부 과정(예: 떡 자격증 과정)은 수강생 모집 실패로 미운영
- 교육과정이 시대적 수요(디지털, AI 등)에 맞지 않고 전통적 과정에 치중된 점이 지적됨.

- 강사 배정에서 동일 인물이 다수 과정에 참여, 전문성 부족 우려

o 최근 경영평가 결과분석

- 전북여성가족재단은 비전 내재화 부족, 사회적 책임 이행 미흡, 재정·조직 운영의 비효율성, 일부 사업 실효성 저하, 제도 운영 미비가 지적되었으며, ESG·인권 대응 강화, 재정·운영비 관리 고도화, 콘텐츠 전략 전환, 법규·제도 정비 등이 개선방향으로 제시되었음

<표 40> 주요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도	구분	문제점	개선 방향
2025년	경영 전략 및 비전	미션·비전 내재화 수준이 낮고, ESG 실행성과 공유 노력이 부족	미션·비전 인식조사 실시, ESG 성과보고서 발간 등 성과 공개 및 내재화 수준 제고
	사회적 책임	인권 이슈 대응계획 부재, 산업안전보건 관리 미흡	주요 인권이슈 대응계획 수립 및 실행, 산업안전보건법 기반 위험성 평가시스템 구축
	재정 운영	중장기 재정계획과 예산편성 간 연계 부족, 운영비 절감 전략 미흡	중장기 재정계획–예산편성 연계 강화, 운영비 절감계획 수립
	조직 운영 및 소통	홈페이지 콘텐츠 제공과 이용자 편의성 부족	홈페이지 맞춤형 콘텐츠 제공, 이용자 편의성 강화
	정책 및 사업 운영	장학·평생교육 사업 등 일부 사업의 실효성·연속성 부족 (행사성 콘텐츠 중심)	해외 어학연수의 장단기 운영전략 마련, 사이버 도민 강좌 콘텐츠 수요도 기반 재편, 행사성 콘텐츠 축소 및 심층 학습 중심 전환
	인적 자원 및 제도 운영	교육사업 취업 연계 미흡, 계약 및 조례 운영상 문제 지적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수의계약 관리 철저, 조례 개정 통한 법적 의무사항 정비

<표 41> 최근 경영평가 결과

연도	2023	2024	2025
등급	가	나	나

<표 42> 2025년도 건전재정 관련 지표 경영평가 결과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내용		배점	달성률	득점
일반관리비 충당률		0.80점	100.00%	0.80점
당기순이익 증가율		0.80점	96.25%	0.77점
재정자립도 증가율		1.40점	100.00%	1.40점
자체수입률(II유형 미평가)				
재무/예산 건전성		4.00점	75.00%	3.00점
(지표 내부 항목)	총인건비 인상율	기준 준수로 평가		2.6%
건전재정관련 지표 소계		7.00점	85.29%	5.97점

(10)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운영 관련

- 성과 및 만족도 : 기업의 만족도는 상승했으나, 참관객 만족도는 큰 변화가 없음. 지역민 체감도 제고 필요.
- 행사 성격 : 순창 전통 발효축제와의 차별화 부족, 전통발효 중심성 강화 요구.
- 성과 부족 : 해외 박람회(싱가포르·상하이·방콕) 참여에서 상담은 있었으나 실질적 수출계약 성과가 없음

○ 민원 처리 및 지역업체 활용 문제

- 민원 대응 미흡: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민원 없음" 보고했으나, 실제로 민원 발생 확인.
- 시설 대행업체 선정: 발효식품엑스포 시설(특히 화장실 설비) 발주를 일괄 계약 방식으로 진행하여 지역업체 참여가 제한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리발주 및 지역업체 참여 확대 필요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문제

- 소통 창구 부재 : 전용 홈페이지나 온라인 소통 공간이 없어 도민 의견 수렴이 어려움.
- 숙의기구 운영 미흡 : 조례상 설치 의무가 있으나, 예산·인력 부족으로 운영 지연.

→ 도민 참여형 소통 시스템 및 운영 예산 확보 필요

○ 기관 간 역할 중복 및 협력 문제

- 전북테크노파크·경제통상진흥원과 역할 중복 지적.
-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그린바이오·농식품 기반을 중심으로 하고, 신약·재생의료 등은 TP가 담당하나, 현장에서 혼선 발생.

→ 명확한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강화 필요

○ 자산취득·계약 집행 관련

- 수의계약 및 외부업체(서울·인천) 계약 다수 발생.
- 일부 장비(영상디스플레이, 가구, 포장기 등)는 도내 업체 참여가 미흡.

→ 조달 기준을 따랐으나, 예산 범위 문제로 도내 기업 활용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

○ 조직 및 운영 측면

- 연구 인력·박사급 인력 증가로 내부 경쟁 심화 가능성 지적 → 조직 화합 및 협력 필요.
- 청년푸드 사업 등 청년 유입 정책 예산 미반영 → 추경 반영 필요성이 제기됨

o 최근 경영평가 결과분석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전략-계획 연계성 부족, 재무·조직 운영 체계 미흡, 환류 지표 정량화 부족, 사회적 책임 관리 한계, 지원사업 실효성 한계가 지적되었으며, 중장기 계획 고도화, 조직·규정 정비, 정책환류 지표 정량화, 전 시설 안전·인권 관리 강화, 지원사업 성과 관리 개선이 개선방향으로 제시되었음

<표 43> 주요문제점과 개선방안

연도	구분	문제점	개선 방향
2025년	경영 전략 및 비전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간계획 간 연계 부족, 조직운영 방향이 모호	중장기 발전계획–연간경영계획 연계 강화, 정책기조·환경변화를 반영한 조직운영 로드맵 수립
	재정 운영	중장기 재무전략 및 관리계획 체계 부족	재무전략·목표를 포함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고도화, 환경·시나리오 기반 자원 배분 전략 마련
	조직 운영	사무규정 체계와 직무분석 기반 R&R 재정립 부족, 협업 촉진 장치 미흡	사무위임전결규정 정비, 직무분석 기반 R&R 재정립, 조직통합 보완, 협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정보공유 강화
	성과 관리 및 환류	정책 환류 지표가 비공식 수준에 머물고 정량화 자료 부족	정책 연계형 자율지표로 강화, 외부성과 지표를 정량화하여 환류 체계 보완
	사회적 책임	위험성 평가 체계가 일부 시설에 국한, 인권·안전 관리 미흡	위탁운영 시설 포함 전 시설에 대한 위험성 평가 확대, 책임과 역할 명확화
	사업 운영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해결 실패사례 관리 미흡, 성과목표 설정 방식 한계	실패사례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구조 설계, 수출기업 만족도 기반 성과목표 설정 및 평가방식 개선

<표 44> 최근 경영평가 결과

연도	2023	2024	2025
등급	가	나	나

<표 45> 2025년도 건전재정 관련 지표 경영평가 결과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내용		배점	달성률	득점
일반관리비 충당률		1.00점	49.00%	0.49점
당기순이익 증가율		1.00점	37.00%	0.37점
재정자립도 증가율		1.50점	49.33%	0.74점
자체수입률(II유형 미평가)		1.50점	55.33%	0.83점
재무/예산 건전성		4.00점	75.00%	3.00점
(지표 내부 항목)	총인건비 인상율	기준 준수로 평가		3.03%
건전재정관련 지표 소계		9.00점	60.33%	5.43점

(11) 군산의료원

○ 경영 및 재정 관리

- 재정적자 누적 :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적자가 반복적으로 발생.
- 도비 의존도 심화: 운영 손실 대부분을 도비 지원으로 보전, 자생적 경영체계 미비.
- 비용구조 불균형 : 인건비 비중이 과다(전체 비용의 절반 이상)하여 수익 대비 지출 구조가 취약.
- 부실한 경영 혁신 노력 : 적자 해소를 위한 수익다변화·비용절감 방안이 미흡.

○ 인력 및 조직 운영

- 전문의 인력 부족 : 필수 진료과(내과·외과·산부인과 등) 전문의 유치 실패로 진료 공백 발생.
- 간호 인력 이탈 : 타 지역·민간병원으로 간호사 유출, 높은 이직률 문

제.

- 인사·보직 운영 미흡 : 조직 효율적 관리 부족, 일부 부서 과부하 상태 지속.

○ 시설 및 장비 관리

- 시설 노후화 심각 : 병동·외래 건물의 노후화로 환자 불편·안전 위험 증가.
- 장비 교체 지연 : 핵심 의료장비 교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진료 효율성 저하.
- 장기 투자계획 부재 : 단기 수선·보수 중심으로 근본적 개선책 없음.

○ 의료 서비스 및 환자 관리

- 환자 만족도 저하: 긴 대기시간, 전문 진료 부족, 서비스 질 하락.
- 응급실 운영 취약: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지역 응급환자 이송에 의존.
- 지역 수요 반영 부족: 고령화·만성질환 대응체계 부족 → 지역 의료 거점 기능 약화.

○ 제도적·전략적 문제

- 중장기 전략 부재 : 의료원 발전계획(전문화·센터화·차별화 전략)이 미비.
- 타 병원 대비 경쟁력 열세 : 남원의료원 및 인근 민간 종합병원과 비교해 경쟁력이 약화.
- 성과관리 미흡 : 의료 질 지표·내부 평가 시스템이 부실, 성과 중심 운영체계 부재.

o 최근 경영평가 결과분석

- 군산의료원은 재정적자 구조, 사회공헌 활동의 지속성 부족, 환자 접근성 및 만족도 한계, 서비스 품질 관리 미흡, 취약계층 지원체계 약화, 재난안전 환류 부족이 지적되었으며, 수익성 개선 전략 수립, 사회공헌 정량화, 환자 서비스 고도화, 응급·위생 관리 강화, 취약계층 지원체계 정립, 재난안전 성과 관리 강화가 개선방향으로 제시되었음

<표 46> 주요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도	구분	문제점	개선 방향
2025년	재정 운영 및 수익성	적자 구조 지속, 인건비·감가상각·운영비 등 비용 요인이 수익성 악화	진료 포트폴리오 재편, 병상 운영 최적화, 적자 요인 정밀분석 기반 예산조정 및 집행 모니터링 강화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 활동이 단발성에 그쳐 지속성 부족	정량목표를 반영한 사회공헌 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 기반 마련
	환자 만족도 및 접근성	환자 신뢰 기반 재방문 전략, 예약 접근성 개선이 미흡	다채널 예약 시스템(전화·모바일 등) 고도화, 환자 신뢰를 통한 재방문 제고 전략 마련
	서비스 품질 관리	응급·위생·공익의료 서비스의 성과 관리체계가 불명확	응급서비스 체크리스트·핫라인 등 성과평가 체계화, 부서·개인별 위생관리 모니터링 강화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사업에서 연계기관 협력과 성과 관리가 부족	연계기관별 역할과 성과목표 구체화, 정례화된 워크숍·협의체 운영
	재난·안전 관리	재난안전관리 활동의 성과 분석 및 환류 부족	재난안전관리 성과의 정량·정성 분석, 개선계획 수립 및 환류체계 고도화

<표 47> 최근 경영평가 결과

연도	2023	2024	2025
등급	나	나	나

<표 48> 2025년도 건전재정 관련 지표 경영평가 결과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내용		배점	달성률	득점
일반관리비 충당률		0.80점	100.00%	0.80점
당기순이익 증가율		0.80점	100.00%	0.80점
재정자립도 증가율		1.40점	100.00%	1.40점
자체수입률(II유형 미평가)				
재무/예산 건전성		4.00점	70.00%	2.80점
(지표 내부 항목)	총인건비 인상율	기준 준수로 평가		3.75%
건전재정관련 지표 소계		7.00점	82.86%	5.80점

(12) 남원의료원

○ 경영 및 재정 관리

- 만성적자 구조 : 남원의료원은 매년 약 20억 원 규모의 적자가 지속. 이는 낮은 병상 가동률, 전문의 부족, 지역 환자 감소 등에 기인.
- 도비 의존도 심화 : 운영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도비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자생적 경영 개선 노력은 미흡.
- 비용 구조 비효율 : 인건비 비중이 높아 고정비 부담이 과중하며, 수익 대비 비용이 구조적으로 불균형.

○ 인력 및 조직 운영

- 전문의 부족 : 내과·외과 필수 진료과 전문의 인력 충원 미비. 특히 내과는 의료원 존립과 직결되나 전문의 유치가 지연됨.
- 간호사 이직률 : 열악한 근무환경 및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한 간호사 이직률 증가 → 환자 안전 및 진료 연속성 위협.
- 인사관리 비효율 : 인력 배치와 보직 관리가 전략적이지 못하고, 임시방편적 운영에 그침.

○ 시설 및 장비 관리

- 노후 시설 방치 : 병원 건물 및 주요 장비가 노후화되었음에도 정기 점검·개선 계획 부족.
- 안전 문제 : 환자 대기실·입원실 환경이 열악하고, 일부 의료 장비는 교체 시기를 넘겨 사용 중.
- 투자계획 부재 : 장기적 시설·장비 투자 로드맵이 없어 매년 단편적 보수에 그침.

○ 의료 서비스 및 환자 관리

- 진료서비스 저하 : 환자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 이는 전문의 부족, 대기시간 장기화, 의료 질 관리 미흡과 관련.
- 지역 의료 수요 반영 부족 :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비해 재활·노인병 전문센터 운영 미흡.
- 응급실 운영 문제 : 응급의료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지역 내 응급환자 이송 의존도가 높음.

○ 제도적·전략적 문제

- 중장기 발전계획 부재 : 단기 운영 적자 해소에 치중하여, 전문센터

설립, 진료과 특성화, 지역 거점화 전략이 부재.

- 타 병원과의 경쟁력 약화 : 익산 원광대 병원 등 민간병원 대비 의료 경쟁력 저하.
- 성과 관리 미흡 : 의료 질 지표, 환자 만족도, 직원 성과평가 체계가 미흡하여 내부 혁신 동력이 부족.

o 최근 경영평가 결과분석

- 남원의료원은 사업 단위 중심 운영, 공익적 서비스 효율성 부족, 성과 환류 미흡, 지역사회 협력 제한, 취약계층 서비스 체계성 부족이 지적되었으며, 통합적 운영전략 수립, 경영환경 대응 강화, 성과분석·환류 고도화, 지역사회 협력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확대가 개선방향으로 제시되었음

<표 49> 주요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도	구분	문제점	개선 방향
2025년	전략 및 운영체계	단위 사업 중심의 계획·평가가 이루어져 프로그램 간 유기적 연계 부족	개별 사업을 통합·연계하는 종합적 운영전략 수립, 중장기 관점의 체계적 계획 강화
	공익적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도는 있으나, 과정 효율성 확보와 경영환경 변화 대응 미흡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사업 추진 과정의 효율성 제고, 환경 변화 대응력 강화
	성과 관리 및 환류	재난안전·보건사업 등에서 성과분석과 환류체계가 미흡	정량·정성적 성과분석 실시, 결과 기반 개선계획 수립과 환류체계 고도화
	지역사회 연계	외부기관 협력은 일부 진행되었으나,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부족	유관기관 협력체계 정례화, 지역사회 기반 신규사업 발굴 및 확대
	취약계층 지원	치매 노인·고령 농업인 등 대상 사업은 있으나, 접근성 개선 노력이 제한적	원스톱 검사·왕진버스 등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확대와 체계화

<표 50> 최근 경영평가 결과

연도	2023	2024	2025
등급	가	가	가

<표 51> 2025년도 건전재정 관련 지표 경영평가 결과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내용		배점	달성률	득점
일반관리비 충당률		0.80점	100.00%	0.80점
당기순이익 증가율		0.80점	100.00%	0.80점
재정자립도 증가율		1.40점	100.00%	1.40점
자체수입률(II유형 미평가)				
재무/예산 건전성		4.00점	75.00%	3.00점
(지표 내부 항목)	총인건비 인상율	기준 준수로 평가		3.24%
건전재정관련 지표 소계		7.00점	85.71%	6.00점

(13) 문화관광재단

○ 관광사업 관련 문제

- 체류형 관광 활성화 한계 : 전주는 주말 숙박은 만실에 가깝지만 평일 수요가 낮아 관광객 분산 유치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
- 의료·치유 관광의 경쟁력 부족 :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성형·의료관광 유치력이 떨어지므로 지역 특화(말·동물 치유산업 등) 대안 모색 필요
- 전북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 적자 : 연 3억 5천만 원의 도비가 투입되지만 매출 실적은 부진. 가짓수를 줄이고 내실화해야 한다는 비판
- 사후면세점 실적 부진 :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제도를 도입했으나 총 매출이 2,700만 원에 불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 미흡【
- 쇼핑페스타 성과 저조 : 전주 원도심 중심으로 추진했으나 실효성 부족, 전북 관광과 연계한 쇼핑 전략 부재
- 쇼핑트래블라운지 운영 미흡 : 총사업비 2억7천만 원 중 2억1천만 원

이 인건비로 사용, 방문객 유치 및 판매 성과 저조. “예산 낭비형 사업”이라는 지적

○ 사업 및 용역 추진의 문제점

- 예산 낭비성 사업 다수

: 관광 QR코드 전자지도 제작(2,200만 원) → 활용 미비

: 유니크베뉴 VR체험 콘텐츠(4,950만 원) → 홍보 및 이용 저조

- 새만금 열기구 관광상품화 용역(8,600만 원) → 사업화 무산

- 용역 남발 지적: 2023년 한 해 수의계약 55건 중 용역 다수가 실효성 없이 보고서만 남았다는 비판

○ 조직 운영 및 인사 문제

- 징계 미이행 및 승진 관리 부적절 : 징계 의결(정직 1개월)을 실제 처분하지 않고 해임기간으로 대체 처리. 결과적으로 징계 이력이 남지 않아 승진에 부적절한 사례 발생

- 이사회 운영 부실 : 회의 소집 절차(10일 전 안건 통지)를 지키지 않고 하루 전 통보 등 부적정 운영. 이사회 심의·의결 기능의 신뢰도 저하

- 성과급 지급 형평성 문제 : 2019~2021년 퇴직자 32명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 재산권 침해 및 법적 분쟁 우려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미비 : 일부 보조금 사업에서 이해관계 신고가 사후에 이루어져 절차적 정당성 결여

○ 심사 및 공정성 문제

- 문화예술 공모사업 심사 공정성 논란

- 심사 과정에서 본부장이 개입하여 결과가 변동된 사례 발생.
- 심사 과정 녹음이 중지되는 등 투명성 부족.
- 심사위원 독립성 훼손, 향후 개입 방지 및 제도 개선 필요

○ 정책적 방향성 부족

- 문화·관광 통합 운영의 비효율 논란 : 문화와 관광을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문화는 인문학·예술 중심, 관광은 산업 중심)
- 지역 균형발전 미흡 : 전주 구도심에만 사업·예산이 집중, 타 시·군과의 균형 부족

o 최근 경영평가 결과분석

- 문화관광재단은 비전 내재화 부족, 전략·성과 관리의 실효성 한계, 위험 관리 미흡, 재정·조직 운영 체계 취약이 지적되었으며, 실질적 전략체계 개편, 질적 성과평가 도입, 위험 관리 강화,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행정·인력 운영 개선이 개선방향으로 제시되었음

<표 52> 주요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도	구분	문제점	개선 방향
2025년	경영 전략 및 비전	미션·비전 내재화 수준이 낮고, 전략과제와 핵심성과지표가 중복·실적 위주로 구성됨	미션·비전 인식도 진단 추진, 중장기 발전계획–연간계획 연계 강화, 실질적 기능 중심의 전략체계 개편
	성과 관리	지표가 교류 횟수·참가자 수 등 활동 실적 중심 → 사업 효과성 및 정책 기여도 부족	국제교류 등 사업의 질적 성과 분석과 정책적 기여도 평가체계 구축
	사회적 책임	안전관리·개인정보보호 등 위험 관리 체계 미흡	유해·위험요인 개선,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정기적 점검 체계 구축
	재정 운영	중장기 재정전망 및 대응전략 부족	중장기 재무환경 분석 및 재무운영계획 고도화, 수입·지출 전망 기반 대응전략 수립
	조직 운영	행정지원 체계 미흡, 인력 부담 과중 및 이직률 개선 필요	업무매뉴얼·디지털 행정지원 체계 정비, 직무만족도 제고, 인력배치 최적화

<표 53> 최근 경영평가 결과

연도	2023	2024	2025
등급	다	가	가

<표 54> 2025년도 건전재정 관련 지표 경영평가 결과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내용		배점	달성률	득점
일반관리비 충당률		0.80점	0.00%	0.00점
당기순이익 증가율		0.80점	82.50%	0.66점
재정자립도 증가율		1.40점	100.00%	1.40점
자체수입률(II유형 미평가)				
재무/예산 건전성		4.00점	95.00%	3.80점
(지표 내부 항목)	총인건비 인상율	기준 준수로 평가		2.86%
건전재정관련 지표 소계		7.00점	83.71%	5.86점

(14) 콘텐츠융합진흥원

○ 계약 및 집행 관련 문제

- 수의계약 남용 의혹 :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연구·용역 계약이 다수 수의계약으로 체결됨. 지방계약법 제25조1항4호·5호(특수한 기술·학술연구 필요)를 근거로 했으나, 특수성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지적
- 근거 불명확 : 한국갤럽, 제이넷컴 등 특정 업체와 반복 계약된 사례가 확인되며, 연속성·특수성을 이유로 했으나 타당성 부족.

○ 사업 운영상의 미비점

- 문화콘텐츠 아카데미·찾아가는 키움센터 : 교육 지역이 축소되고(전년도 대비 시·군 수 줄어듦), 교육 인원도 감소. 예산 감소(2022년 5,500만 원 → 2024년 3,400만 원)가 원인이나, 홍보 및 접근성 부족도 문제
- 편집자 양성과정 : 강사 위주 교육으로 운영되었으나, 실제 교육 인원

은 62명에 불과했음에도 3,500만 원이 투입되어 효율성 논란

○ 전략 사업 관련 지적

- 글로컬 대학 연계사업 : 도비 500억 투입에도 불구하고 사업 결정권이 전북대에 종속적이라는 구조적 한계 지적. 도비 집행에도 주도권 부족
- 홀로그램 실증단지(익산) : 총 200억 중 60억 투입 사업 진행 중이나, 전국 규모에 비해 소규모이며 성과 불확실. 쇼룸 구축은 진행 중이나 사업 파급력에 의문
- 인턴십 지원사업 : 지원 기간 축소(6개월→3개월), 월 지원액 축소로 청년 인재 유출 우려. 예산 삭감으로 사업 효과 약화

○ 시설 관리 문제

- 정보산업지원센터 운영 : 매년 동일하게 1억 1천만 원의 보수·유지비가 투입(3년간 총 3억 3천만 원). 하지만 시설 노후(누수·곰팡이 등)로 입주 환경 열악. "돈 먹는 하마"라는 지적
- 임대수익과 보수비용이 불균형하여 구조적 개선 필요.

○ 제도적·운영적 문제

- 사업 중복 및 협력 부재 : 문화관광재단 등 타 기관과 사업 구분이 불분명하여 예산·역할 중복 가능성.
- 도비 의존도 과다 : 예산의 60% 이상을 도비에 의존, 자생적 수익 창출 부족.
- 성과 관리 미흡: 다수 사업이 연구·용역 단계에서 멈추고 실질 성과(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 등)로 이어지지 못함.

o 최근 경영평가 결과분석

- 콘텐츠융합진흥원은 중장기 전략 부재, 환류체계 미흡, 성과 확산 부족, 조직 운영의 전략적 연계 부족이 지적되었으며, 종합계획 수립, 환류체계 고도화, 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전략 기반 자원 관리가 개선방향으로 제시되었음

<표 55> 주요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도	구분	문제점	개선 방향
2025년	전략 및 사업계획	다공성 탄소소재 기반 구축·활용 사업 등에서 종합적 사업계획 및 중장기 로드맵 부재	전체 사업을 아우르는 종합계획 수립, 중장기 전략성과 연계된 로드맵 마련
	성과 관리 및 환류	환류 결과가 단기 계획 수립에는 반영되나, 중장기 전략 수정과 연계된 구조 부족	환류활동 결과를 중장기 전략 수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화된 체계 마련
	산업 육성 성과	일부 사업화 성과(R&D 과제 수주, 매출 증대, 고용창출)는 있으나 지속성·확장성 부족	기업 수요조사·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기업 맞춤형 지원 고도화, 사업화 성과 확산
	조직 운영	중장기적 전략 기반 인력·자원 관리 체계 부족	조직·인력 운영과 예산 배분을 장기 전략과 연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표 56> 최근 경영평가 결과

연도	2023	2024	2025
등급	나	나	가

<표 57> 2025년도 건전재정 관련 지표 경영평가 결과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내용		배점	달성률	득점
일반관리비 충당률		1.00점	71.00%	0.71점
당기순이익 증가율		1.00점	94.00%	0.94점
재정자립도 증가율		1.50점	100.00%	1.50점
자체수입률(II유형 미평가)		1.50점	72.67%	1.09점
재무/예산 건전성		4.00점	65.00%	2.60점
(지표 내부 항목)	총인건비 인상율	기준 준수로 평가		3.83%
건전재정관련 지표 소계		9.00점	76.00%	6.84점

(15) 사회서비스원

○ 행사 운영 관련

- 사회서비스 박람회 개막식 이중 진행 : 오전(도지사, 교육감, 의장 참석)과 오후(도의회 참석) 두 차례 개막식이 진행되어 “허례허식” 비판이 제기됨.

→ 의회와 사전 조율 부족, 주객 전도 현상이라는 지적

○ 인사·조직 운영

- 본부장 채용 미비 : 본부장직 임기 만료 후 장기간 공석.
- 인사 과정의 낙하산·연고 인사 의혹과 투명성 부족 지적.
- 채용위원회 구성·공정성 문제에 대한 우려 : 행감 자료에 위원회 명단이 누락되어 전문성과 중복 여부 검증 불가.

○ 위탁·직영 시설 운영

- 과도한 위탁 운영 : 직영 2개 포함 총 16개소 운영(위탁 14개소).

- 사회서비스원이 광역기관 외 시·군 단위 시설까지 운영하면서 옥상옥 구조, 자율성 침해 및 민간 위축 문제 지적

→ 민간법인 설립 후 이양 필요성 강조.

- 장수종합재가센터 운영 부실 : 휴지 후 재정비 과정이 미흡. 제출 자료와 실제 운영내용 불일치로 위원 지적.

→ 자료 제출의 부정확성, 행정 신뢰 저하

○ 위원회 구성의 법령 위반

- 성별 불균형 : 이사회(남 12, 여 3), 인사위원회(전원 남성 7명) 등 성별 편중, 관련 법령(특정 성별 60% 초과 금지) 위반
- 지역 편중 : 다수 위원이 전주 거주(이사회 15명 중 8명, 인사위 7명 중 5명 등), 조례상 특정 시·군 출신 비율 제한(40% 이하)을 위반
- 출석률 저조 :일부 위촉직 위원의 출석률이 0%~25% 수준. 해촉 사유임에도 개선 미흡

○ 플랫폼 운영 (‘전북인복지’)

- 중복성과 실효성 논란 : 보건복지부 ‘복지로’와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 (복지로 314개 사업 vs 전북인복지 634개 사업, 민간 정보 포함 주장)
- 예산 집행 과다 우려 : 총 55억 투입, 현재까지 43.7억 집행. 매년 5천만~1억 운영비 필요.
- 실질적 홍보 부족으로 접근성 낮음 : 도민 인지도 미흡, 검색·접속 경로 불편 지적

○ 계약 및 예산 집행

- 수의계약 과다 : 수의계약 남용으로 공정성·투명성 저하 우려.
- 인터넷전화 설치비로 9,700만 원 등 과다 지출 사례 지적 : 내부 지침 마련 필요

○ 종사자 처우 개선

- 근로조건 개선 미흡 : 사회서비스원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 필요성 제기.
- 민간 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향상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 언급

○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 기능·인력 부족 : 정원 19명 중 15명 근무.
- 탈시설 거점기관으로서 역할 부족, 단순 시설 운영에 그친다는 지적. 거점 조사·연구·인큐베이팅 기능 수행 필요
- 운영 형태 재검토 필요 : 위탁 운영 적정성 의문. 독립 출연기관 전환 검토 필요

○ 최근 경영평가 결과분석

- 사회서비스원은 전략·계획 연계 부족, 개인정보·안전관리 미흡,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부족, 재정 관리체계 미흡이 지적되었으며, 중장기 전략 연계 강화, 정보보호·안전관리 고도화, 고립·은둔계층 지원 강화, 재정 집행·환류 체계 확립이 개선방향으로 제시되었음

<표 58> 주요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도	구분	문제점	개선 방향
2025년	경영 전략 및 비전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된 연간계획 수립 미흡, 복지사각지대·취약계층 대응 전략 부족	중장기 발전계획–연간계획 연계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성과지표 개발 및 전략 수립
	정책 반영 및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관리 미흡, 보안 점검 체계 미비	'전북인복지 플랫폼' 개인정보 보호 강화, 주기적 보안 점검 체계화
	사회적 책임 및 안전 관리	고립·은둔 청년·시니어 지원사업 부족, 종합 안전매뉴얼 미비	고립·은둔계층 대상 복지서비스 발굴, 사이버 보안 포함 종합 안전매뉴얼 구축 및 대응체계 강화
	재정 운영	주요사업별 성과분석과 예측 기반 재정대응 전략 부족, 집행률 관리체계 미흡	성과분석 기반 예측 시나리오 수립, 집행계획·차이분석·사후관리 중심의 예산 집행률 관리체계 강화
	안전·위기 대응	안전보건 규정 및 기록 관리 미흡 → 법적 대응력 한계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 및 기록 관리 체계 강화, 재난안전관리 기록물 관리 역량 보강

<표 59> 최근 경영평가 결과

연도	2023	2024	2025
등급	나	가	가

<표 60> 2025년도 건전재정 관련 지표 경영평가 결과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내용		배점	달성률	득점
일반관리비 충당률		0.80점	72.50%	0.58점
당기순이익 증가율		0.80점	62.50%	0.50점
재정자립도 증가율		1.40점	100.00%	1.40점
자체수입률(II유형 미평가)				
재무/예산 건전성		4.00점	75.00%	3.00점
(지표 내부 항목)	총인건비 인상율	기준 준수로 평가		3.60%
건전재정관련 지표 소계		7.00점	78.29%	5.48점

3. 재무구조와 경영성과 현황 분석

가. 분석에 활용된 자료

○ 분석에는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클린아이)의 지방출자출연기관 기관별공시 자료 중 예산결산, 요약재무상태표, 요약포괄손익계산서, 인력현황을 활용하였음

○ 지방출자출연기관 기관별공시 자료는 2025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2020년에서 2024년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나. 분석방법

○ 분석은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과 유사한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연기

관과 재무지표를 연도별로 비교하는 방법을 활용하였음. 이와 같은 분석방법을 활용한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만을 대상으로 재무지표를 비교하는 경우 기관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과 연도를 고려하지 않고 비교하면 연도의 특성(예: 코로나의 영향 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임

○ 분석에는 재무건전성, 수익성, 자산활용효율성, 비용구조를 활용하여 출연기관의 재무구조와 경영성과를 확인하였음. 재무건전성, 수익성, 자산활용효율성, 비용구조는 각각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총자산회전률, 인건비비율을 활용하였음

-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조직의 재정건전성을 대표하는 핵심 지표이며, 과도한 부채는 장기적 재정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은 재무적 안정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줌
-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은 조직의 운영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지표로 동일한 매출 규모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지를 보여주며, 비용통제 능력과 내부 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반영함
- **총자산회전률(매출액/총자산)**은 자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효율성 지표 자산(시설·장비 등)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적합함
- **인건비비율(인건비/총비용)**은 조직의 운영 구조와 비용 통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조직의 인력운영 효율성과 경영 유연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임. 인건비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면, 비용 구조의 경직성을 의미하며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와 같은 비교에서는 비교 대상 기관 설정이 중요한데, 본 분석에서는 지방출자출연기관 기관별공지 자료의 유형 분류를 먼저 활용하고, 수정

이 필요한 유형은 일부 수정하였음

- 지방출자출연기관 기관별공시 자료는 출연기관의 유형을 농식품, 문화, 복지자원봉사, 신용보증, 여성청소년, 연구원, 의료원, 장학, 중소기업 진흥, 지식정보산업, 테크노파크, 기타로 구분하고 있음
- 문화관광재단은 지방출자출연기관 기관별공시 자료에 문화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문화재단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기관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역축제 기관 등 이질적인 기관이 많아 문화관광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인 울산문화관광재단, 충남문화관광재단을 비교 대상기관으로 설정하였음
-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출자출연기관 기관별 공시 자료에 복지자원봉사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질적인 기관을 제외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을 비교 대상기관으로 설정하였음
- 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신용보증재단을 비교 대상기관으로 설정하였음
- 여성가족재단은 지방출자출연기관 기관별공시 자료에 기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타 도의 경우 여성가족재단이 여성청소년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여성가족 유형으로 비교대상 기관을 설정하였음
- 전북연구원은 지방출자출연기관 기관별공시 자료에 연구원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을 비교 대상으로 설정하였음.
-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은 지방출자출연기관 기관별공시 자료에 의료원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연의료원을 비교 대상으로 설정하였음.
-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지방출자출연기관 기관별공시 자료에 장학 유형

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장학 유형에는 장학 사업만을 담당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다수이므로 평생교육으로 유형을 설정하고 비교 대상 기관을 설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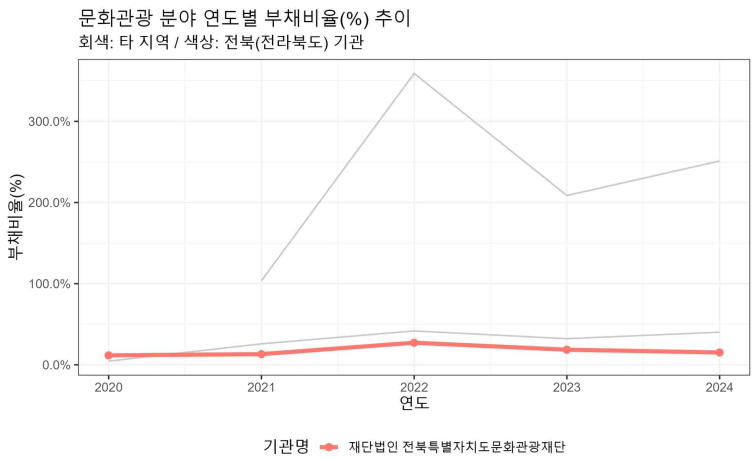
- 경제통상진흥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중소기업진흥으로 유형이 설정되어 있음.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방출자출연기관 기관별공시 자료에 농식품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농식품 유형에는 로컬푸드 등 성격이 다른 기관이 다수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으로 유형을 변경하였음. 또한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지방출자출연기관 기관별공시 자료에 지식정보산업으로 유형이 구분되어 있으나, 지식정보산업에는 콘텐츠진흥원 등 이질적인 기관이 다수이므로 중소기업진흥으로 유형을 변경하였음.
-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방출자출연기관 기관별공시 자료에 테크노파크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타 광역자치단체의 테크노파크를 비교 대상 기관으로 설정하였음.
- 국제협력진흥원은 지방출자출연기관 기관별공시 자료에 기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국제협력 기능을 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없기 때문에 비교 대상을 설정할 수 없으며,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다. 주요기관별 분석결과

(1) 문화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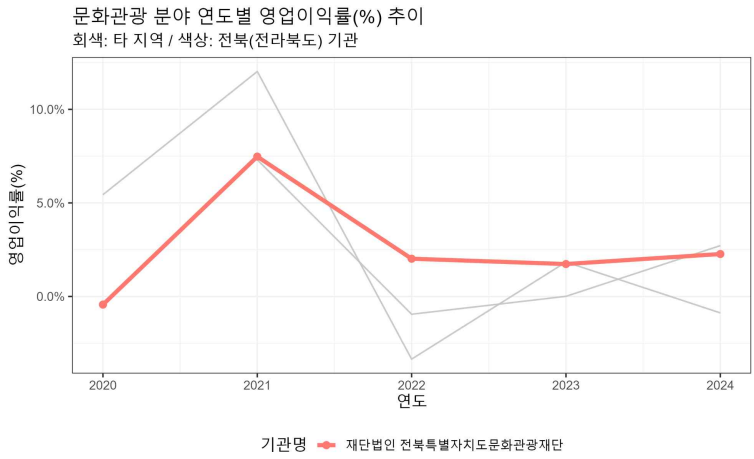
○ 문화관광재단의 연도별 부채비율은 타 도의 문화관광재단에 비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12> 문화관광 분야 연도별 부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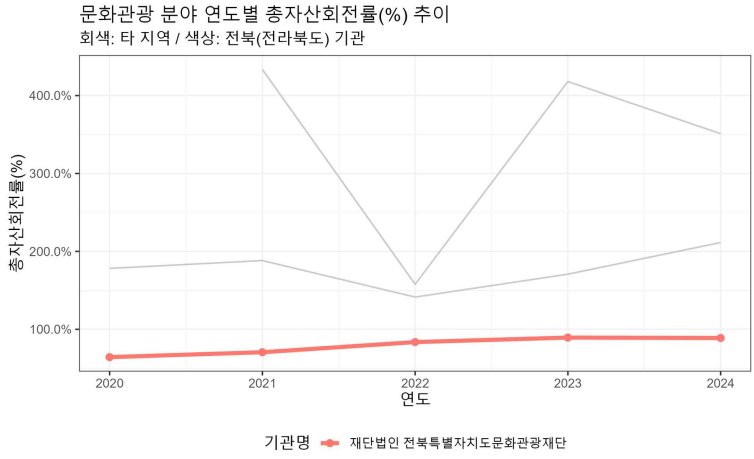
○ 문화관광재단의 연도별 영업이익률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비교 대상 기관들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

<그림 13> 문화관광 분야 연도별 영업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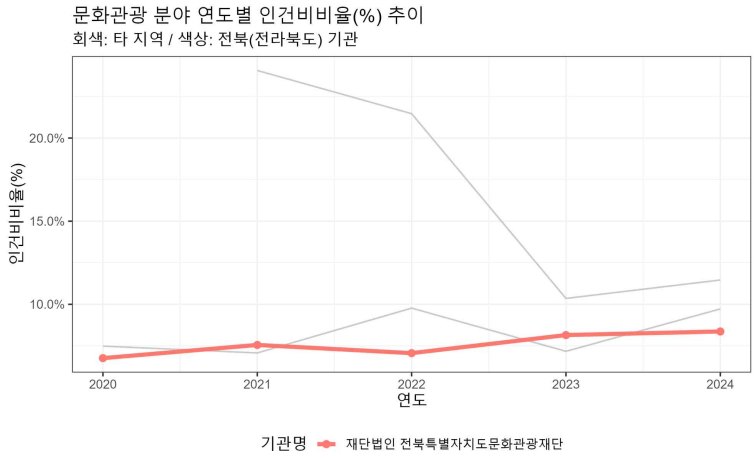
○ 문화관광재단의 연도별 총자산회전률은 타 도의 문화관광재단에 비해서 낮음

<그림 14> 문화관광 분야 연도별 총자산회전률



○ 문화관광재단의 연도별 인건비비율은 타 도의 문화관광재단에 비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15> 문화관광 분야 연도별 인건비비율



○ 이상의 내용은 다음 표로 요약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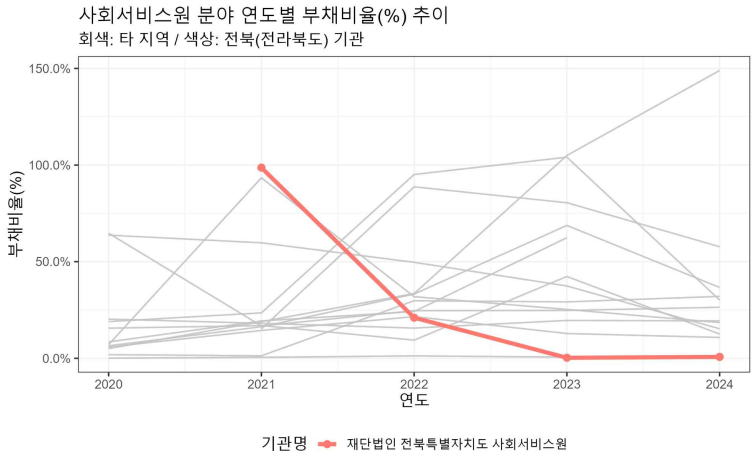
<표 61> 전북 문화관광 분야 결과 요약

기관명	연도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총자산회전률	인건비비율
문화관광재단	2020	11.64	-0.43	64.29	6.76
문화관광재단	2021	13.14	7.48	70.59	7.56
문화관광재단	2022	27.22	2.02	83.61	7.06
문화관광재단	2023	18.6	1.73	89.38	8.15
문화관광재단	2024	15.21	2.27	88.85	8.37

(2) 사회서비스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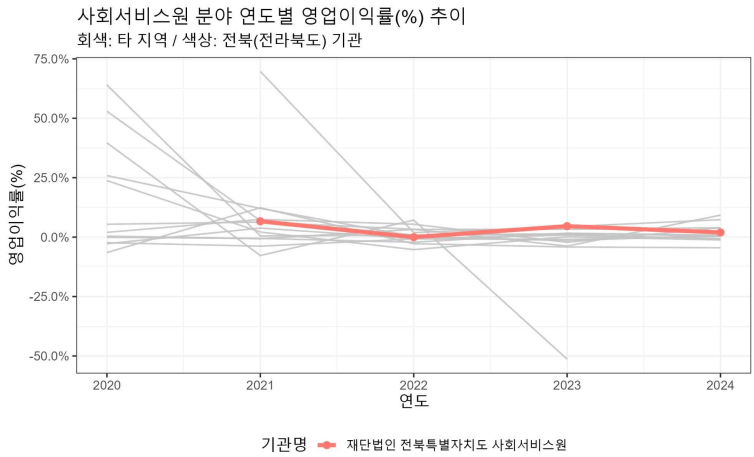
○ 비교 대상 기관들의 부채비율이 증가하거나 유지되는 추세인 것에 비해 사회서비스원의 연도별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그림 16> 사회서비스원 분야 연도별 부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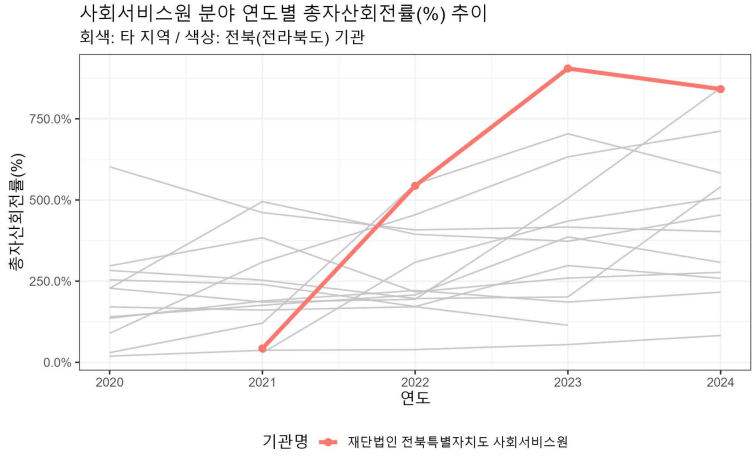
○ 사회서비스원의 연도별 영업이익률은 -4%에서 6%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타 도의 비교 대상 기관들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

<그림 17> 사회서비스원 분야 연도별 영업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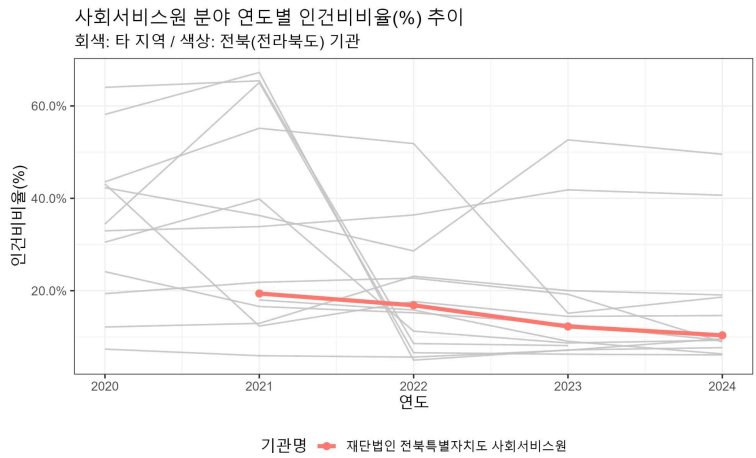
○ 사회서비스원`의 연도별 총자산회전률은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2021년 비교 대상 기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가 2022년 이후 비교 대상 기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변화하였음

<그림 18> 사회서비스원 분야 연도별 총자산회전률



○ 사회서비스원의 연도별 인건비비율은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그림 19> 사회서비스원 분야 연도별 인건비비율



○ 이상의 내용은 다음 표로 요약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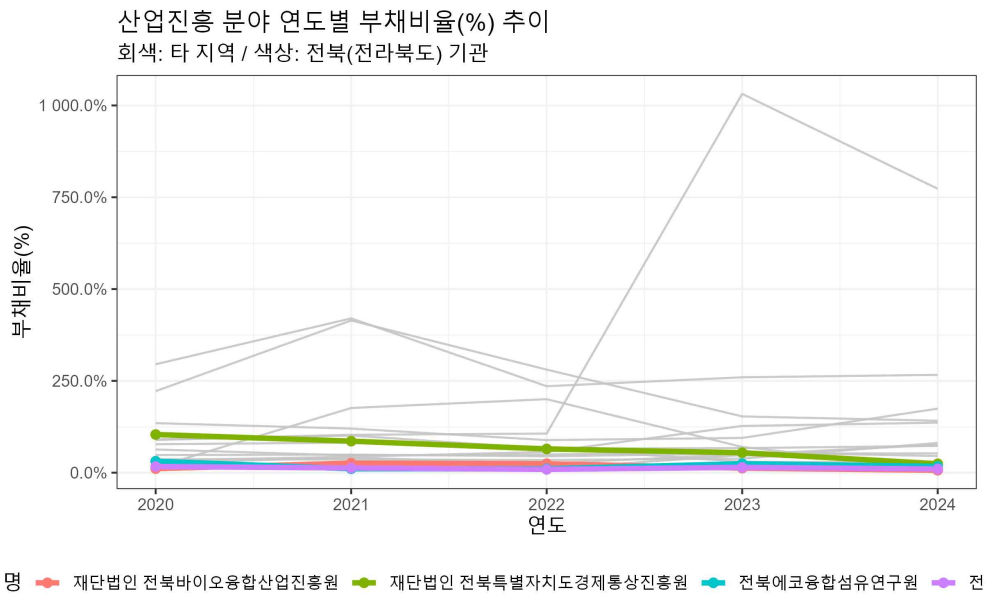
<표 62> 전북 사회서비스원 분야 결과 요약

기관명	연도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총자산회전률	인건비비율
사회서비스원	2020	98.67	6.66	42.67	19.39
사회서비스원	2021	21.03	-0.02	543.61	16.84
사회서비스원	2022	0.28	4.61	905	12.25
사회서비스원	2023	0.73	1.97	841.53	10.34
사회서비스원	2024	24.26	-4.13	10.07	160.24

(3) 산업진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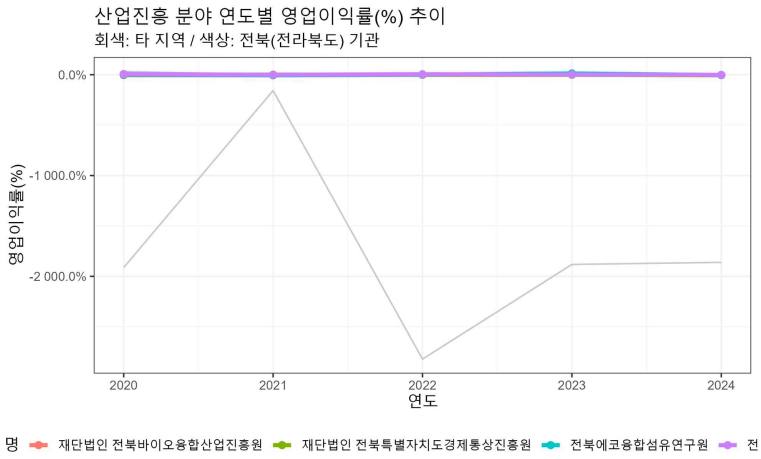
○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경제통상진흥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연도별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비교 대상 기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20> 산업진흥 분야 연도별 부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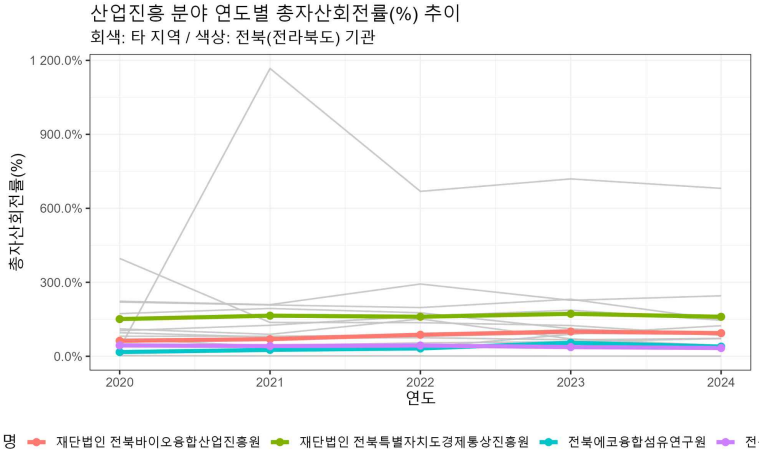
○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경제통상진흥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연도별 영업이익률은 -4%에서 5% 사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교 대상 기관들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

<그림 21> 산업진흥 분야 연도별 영업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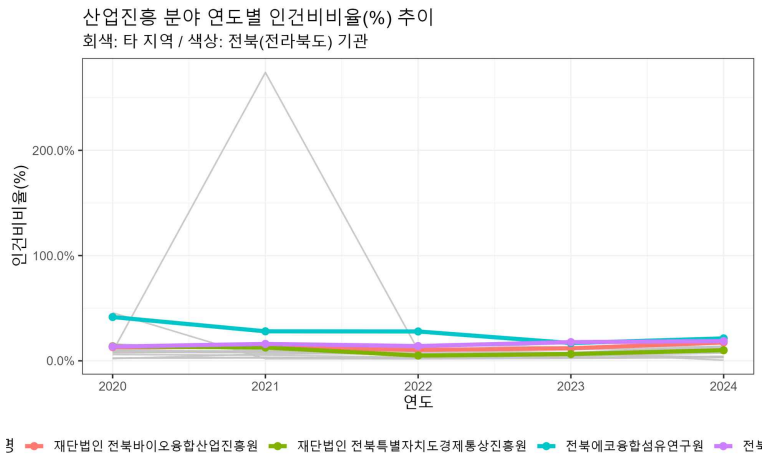
○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경제통상진흥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연도별 총자산회전률은 기관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비교 대상 기관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그림 22> 산업진흥 분야 연도별 총자산회전률



○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경제통상진흥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연도별 인건비비율은 기관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비교 대상 기관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그림 23> 산업진흥 분야 연도별 인건비비율



○ 이상의 내용은 다음 표로 요약할 수 있음

<표 63> 전북 산업진흥 분야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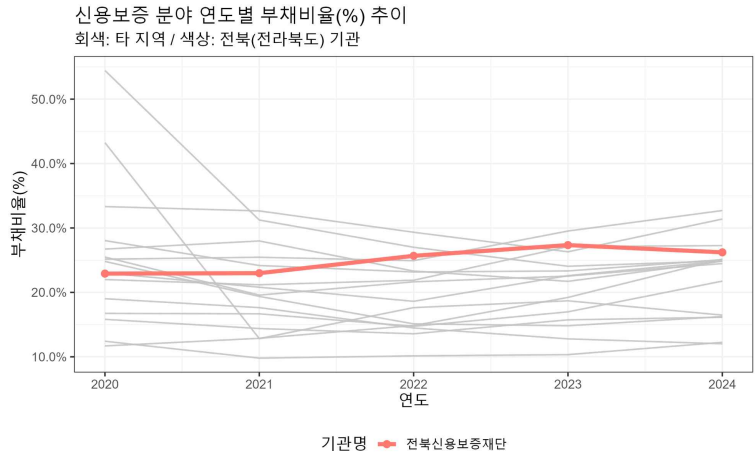
기관명	연도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총자산회전률	인건비비율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2020	11.07	-3.98	62.62	13.04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2021	25.98	-5.1	69.58	13.4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2022	24.41	-0.7	87.35	10.34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2023	12.32	-0.61	100.27	11.87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2024	6.57	-3.08	93.87	17.49

경제통상진흥원	2020	103.92	0.72	150.92	13.88
경제통상진흥원	2021	85.82	1.2	164.63	12.66
경제통상진흥원	2022	64.7	0.34	160.34	4.98
경제통상진흥원	2023	54.33	-0.67	172.21	6.4
경제통상진흥원	2024	24.26	-4.13	160.24	10.07
에코융합섬유연구원	2020	31.19	0.92	17	41.61
에코융합섬유연구원	2021	10.62	-4.56	25.95	28.03
에코융합섬유연구원	2022	10.66	1.88	31.84	27.91
에코융합섬유연구원	2023	24.32	12.87	54.76	16.9
에코융합섬유연구원	2024	17.21	-3.03	39.25	21.31
자동차융합기술원	2020	16.8	6.9	43.91	13.53
자동차융합기술원	2021	12.78	-0.08	41.52	16.07
자동차융합기술원	2022	9.02	5.22	43.72	14.05
자동차융합기술원	2023	14.34	1.75	37.23	17.77
자동차융합기술원	2024	10.1	-0.96	33.43	18.72

(4) 신용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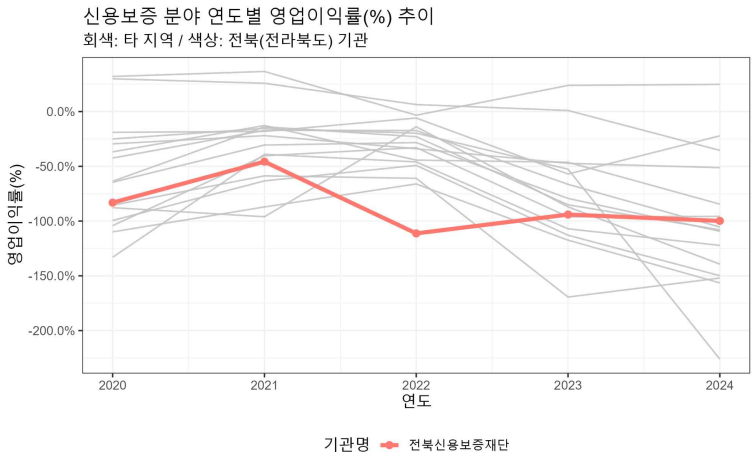
○ 신용보증대단의 연도별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비교 대상 기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24> 신용보증 분야 연도별 부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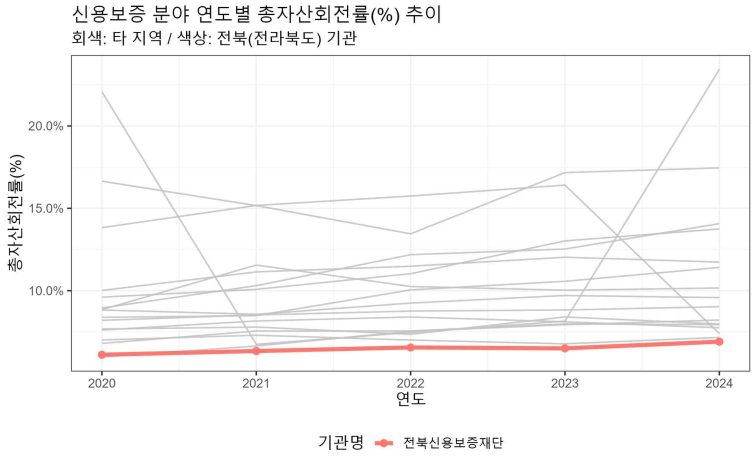
○ 신용보증재단의 연도별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비교 대상 기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25> 신용보증 분야 연도별 영업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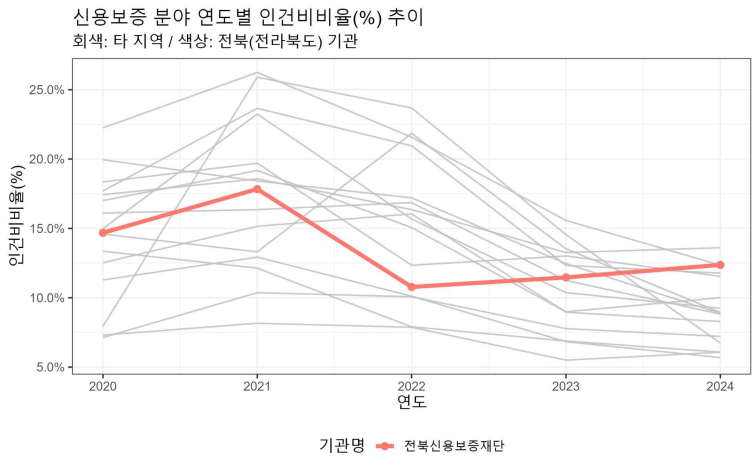
○ 신용보증재단의 연도별 총자산회전률은 비교 대상 기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26> 신용보증 분야 연도별 총자산회전률



○ 신용보증재단의 연도별 인건비비율은 크게 변화가 없으며, 비교 대상 기관들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유지하고 있음. 다만, 최근에 비교 대상 기관들에 비해 인건비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그림 27> 신용보증 분야 연도별 인건비비율



○ 이상의 내용은 다음 표로 요약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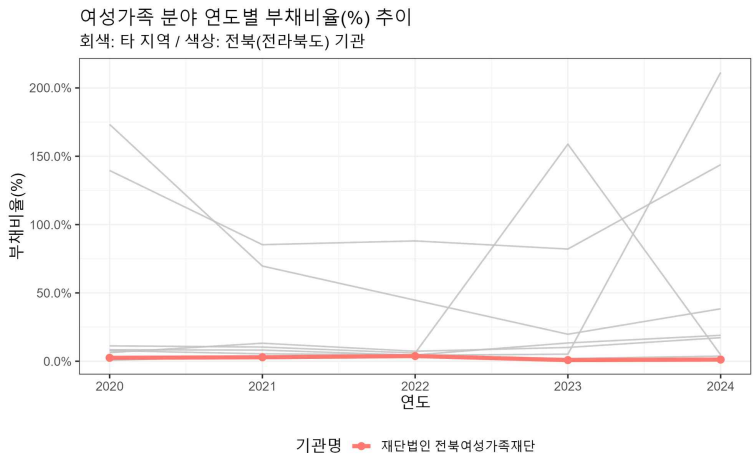
<표 64> 전북 신용보증 분야 결과 요약

기관명	연도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총자산회전률	인건비비율
신용보증재단	2020	22.92	-83.14	6.11	14.68
신용보증재단	2021	22.98	-45.74	6.34	17.83
신용보증재단	2022	25.68	-111.25	6.55	10.78
신용보증재단	2023	27.34	-94.05	6.5	11.47
신용보증재단	2024	26.22	-99.84	6.9	12.37

(5) 여성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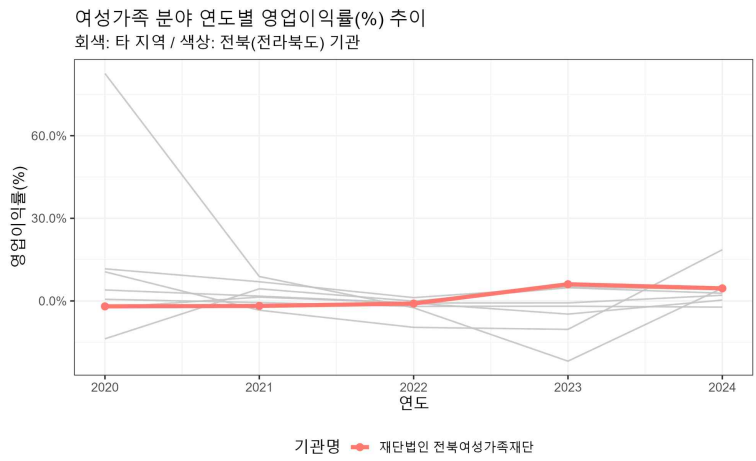
○ 여성가족재단의 연도별 부채비율은 비교 대상 기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28> 여성가족 분야 연도별 부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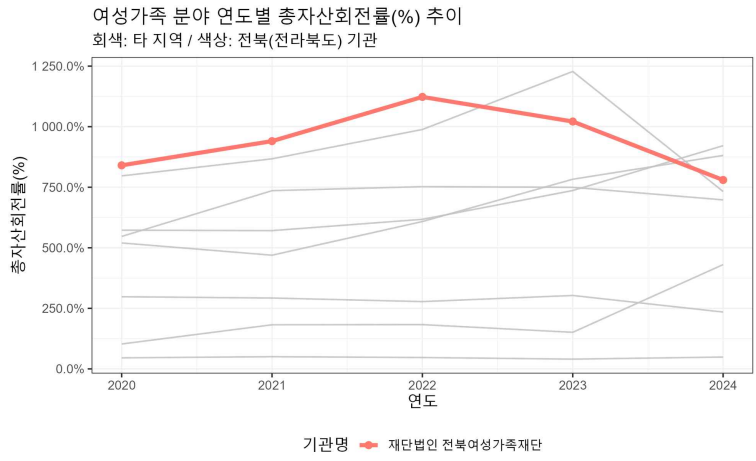
○ 여성가족재단의 연도별 영업이익률은 2021년까지 비교 대상 기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2023년부터 비교 대상 기관들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음

<그림 29> 여성가족 분야 연도별 영업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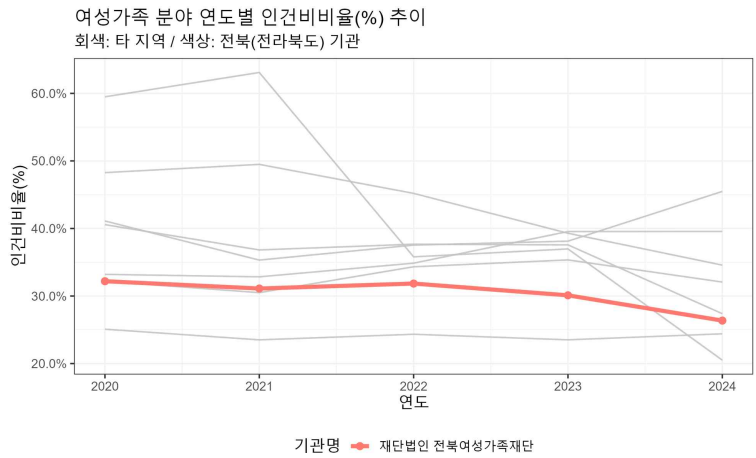
○ 여성가족재단의 총자산회전률은 대상 기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30> 전북 여성가족 분야 연도별 총자산회전률



○ 여성가족재단의 연도별 인건비비율은 비교 대상 기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31> 여성가족 분야 연도별 인건비비율



○ 이상의 내용은 다음 표로 요약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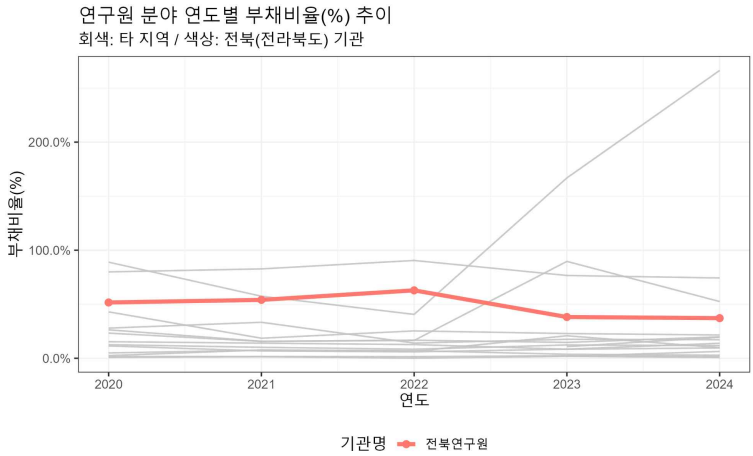
<표 65> 전북 여성가족 분야 결과 요약

기관명	연도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총자산회전률	인건비비율
여성가족재단	2020	2.5	-1.97	840.4	32.19
여성가족재단	2021	2.9	-1.81	940.31	31.11
여성가족재단	2022	3.79	-0.94	1122.85	31.85
여성가족재단	2023	0.84	6.07	1021.31	30.11
여성가족재단	2024	1.21	4.57	779.85	26.36

(6) 전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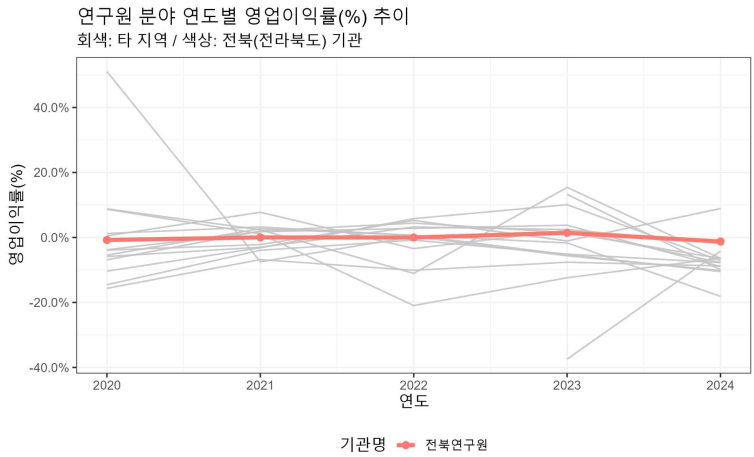
○ 전북연구원의 연도별 부채비율은 비교 대상 기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32> 연구원 분야 연도별 부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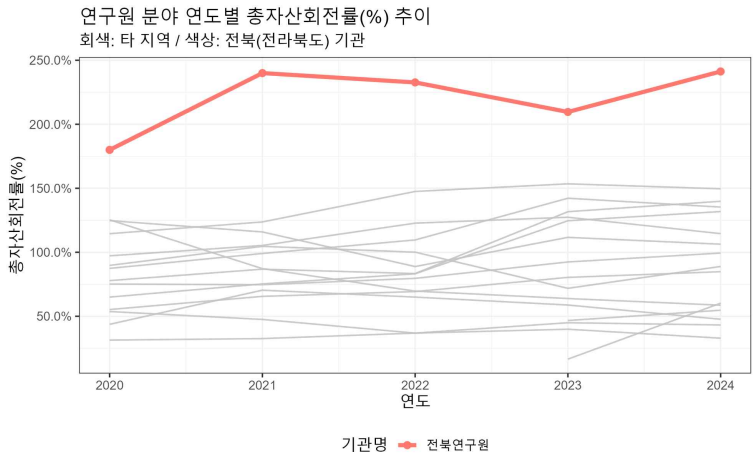
○ 전북연구원의 연도별 영업이익률은 -1%에서 1% 사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그림 33> 연구원 분야 연도별 영업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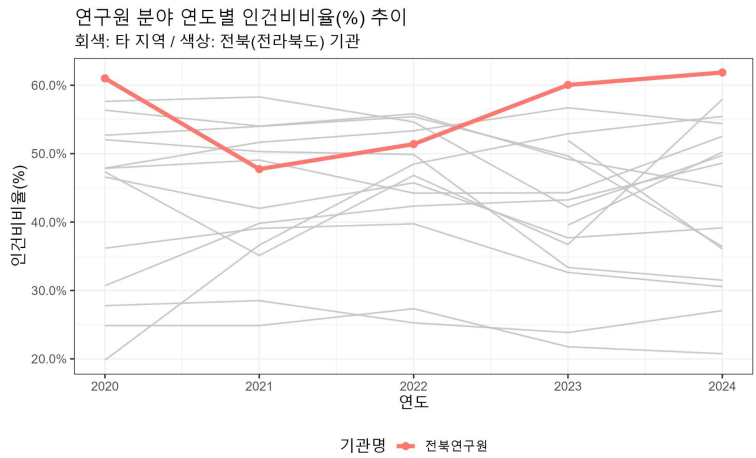
○ 전북연구원의 연도별 총자산회전률은 비교 대상 기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34> 연구원 분야 연도별 총자산회전률



○ 전북연구원의 연도별 인건비비율은 비교 대상 기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35> 연구원 분야 연도별 인건비비율



○ 이상의 내용은 다음 표로 요약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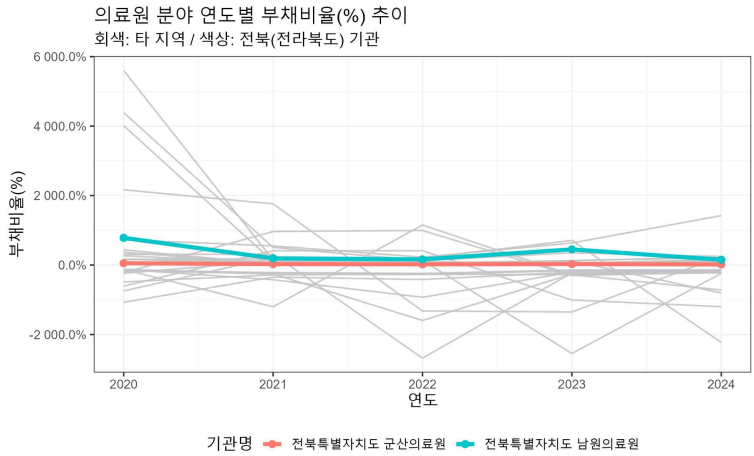
<표 66> 전북 연구원 분야 결과 요약

기관명	연도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총자산회전률	인건비비율
전북연구원	2020	51.64	-0.78	179.99	61.01
전북연구원	2021	54.02	0.01	239.98	47.74
전북연구원	2022	62.84	-0.01	232.68	51.39
전북연구원	2023	38.19	1.42	209.6	60.04
전북연구원	2024	37.13	-1.25	241.24	61.87

(7) 의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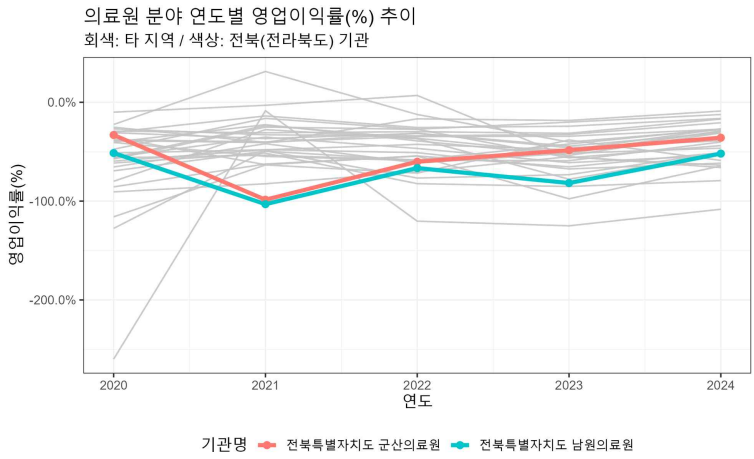
○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의 연도별 부채비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36> 의료원 분야 연도별 부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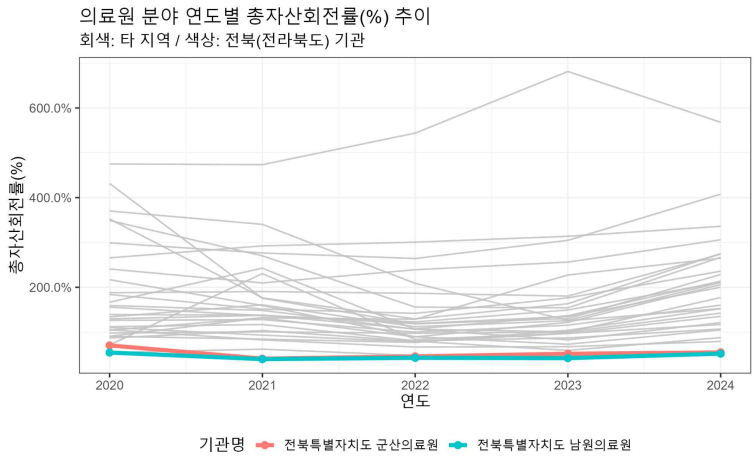
○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의 연도별 영업이익률은 2021년에 크게 감소하였으며,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비교 대상 기관들에 비해 낮음

<그림 37> 의료원 분야 연도별 영업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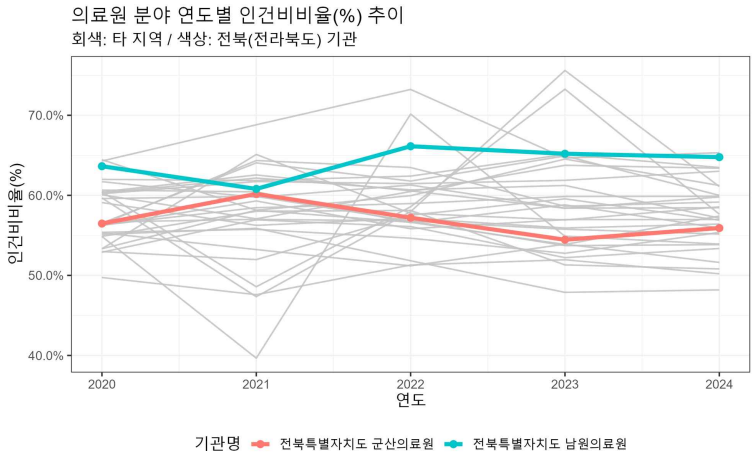
○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의 연도별 총자산회전률은 비교 대상 기관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그림 38> 의료원 분야 연도별 총자산회전률



○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의 연도별 인건비비율은 비교대상 기관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그림 39> 의료원 분야 연도별 인건비비율



○ 이상의 내용은 다음 표로 요약할 수 있음

<표 67> 전북 의료원 분야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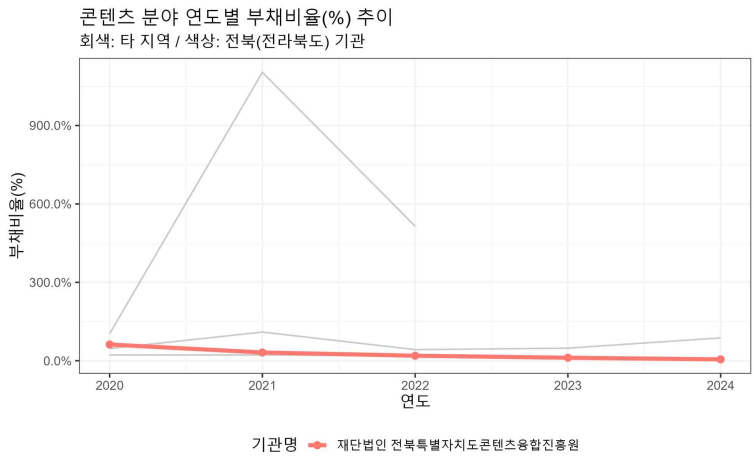
기관명	연도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총자산회전률	인건비비율
군산의료원	2020	52.26	-33.07	70.3	56.48
군산의료원	2021	26.28	-98.6	40.82	60.18
군산의료원	2022	20.71	-60.12	45.84	57.2
군산의료원	2023	28.23	-48.48	51.68	54.45
군산의료원	2024	16.82	-35.88	54.7	55.92
남원의료원	2020	782.87	-51.33	54.35	63.64

기관명	연도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총자산회전률	인건비비율
남원의료원	2021	192.37	-103.08	39.68	60.8
남원의료원	2022	163.32	-66.55	42.62	66.13
남원의료원	2023	450.25	-81.7	41.87	65.2
남원의료원	2024	152.32	-51.92	51.94	64.77

(8) 콘텐츠

○ 콘텐츠융합진흥원의 연도별 부채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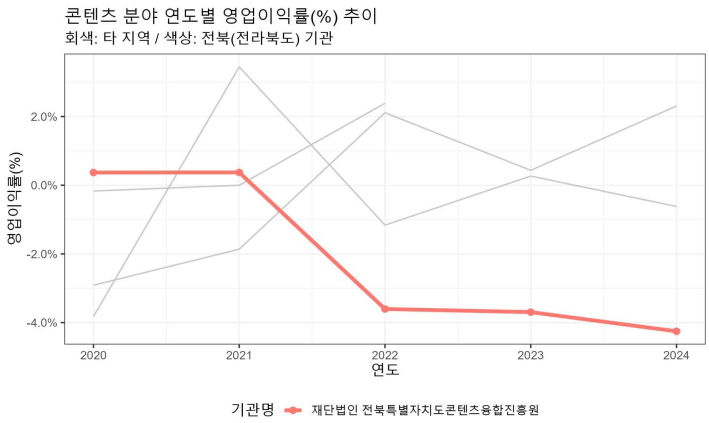
<그림 40> 콘텐츠 분야 연도별 부채비율



○ 콘텐츠융합진흥원의 연도별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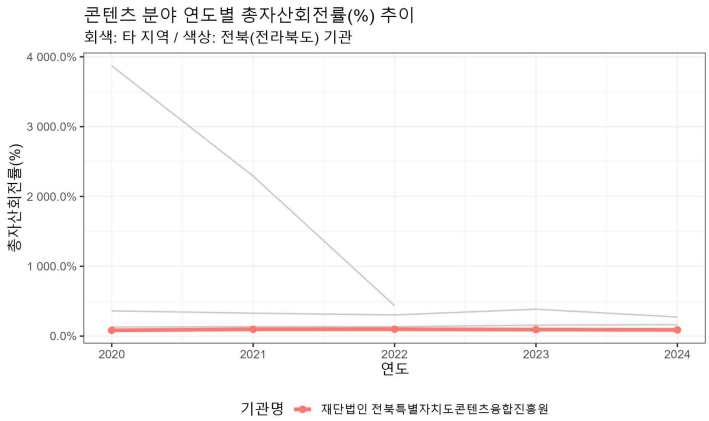
며, 비교 대상 기관들에 비해 낮은 수준임

<그림 41> 콘텐츠 분야 연도별 영업이익률



○ 콘텐츠융합진흥원의 연도별 총자산회전률은 비교대상 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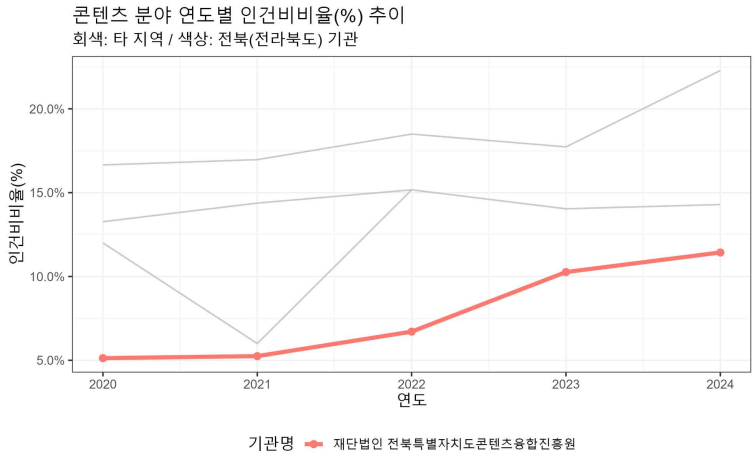
<그림 42> 콘텐츠 분야 연도별 총자산회전률



○ 콘텐츠융합진흥원의 연도별 인건비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비교대상 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43> 콘텐츠 분야 연도별 인건비비율



○ 이상의 내용은 다음 표로 요약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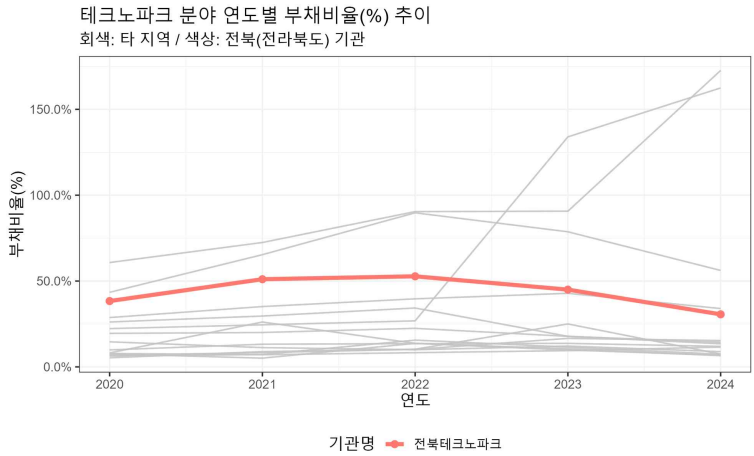
<표 68> 전북 콘텐츠 분야 결과 요약

기관명	연도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총자산회전률	인건비비율
콘텐츠융합진흥원	2020	62.06	0.37	83.46	5.13
콘텐츠융합진흥원	2021	31.43	0.37	97.62	5.25
콘텐츠융합진흥원	2022	19.17	-3.6	98.29	6.71
콘텐츠융합진흥원	2023	11.38	-3.69	93.45	10.26
콘텐츠융합진흥원	2024	5.16	-4.25	89.53	11.43

(9) 전북테크노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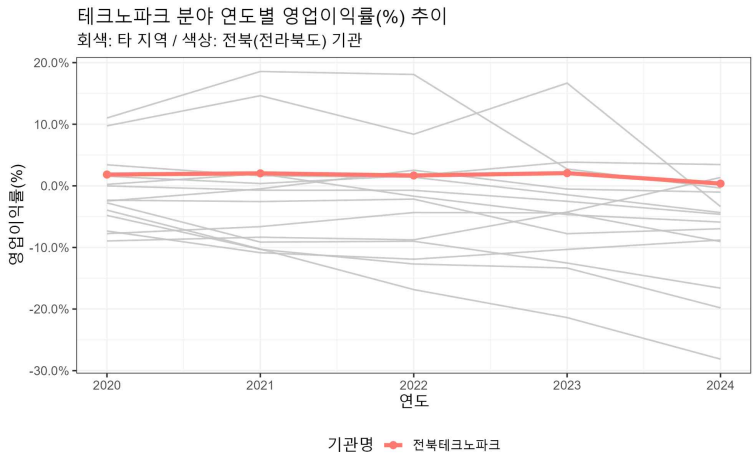
○ 전북테크노파크의 연도별 부채비율은 높은 수준은 아니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비교 대상 기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44> 테크노파크 분야 연도별 부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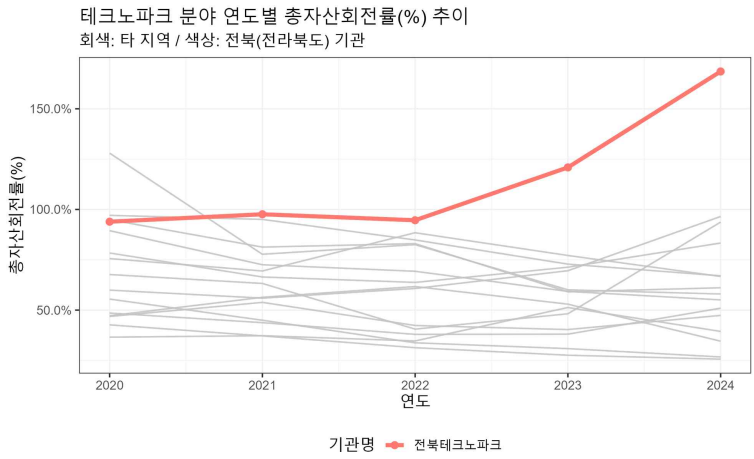
○ 전북테크노파크의 연도별 영업이익률은 0%에서 2%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비교 대상 기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45> 테크노파크 분야 연도별 영업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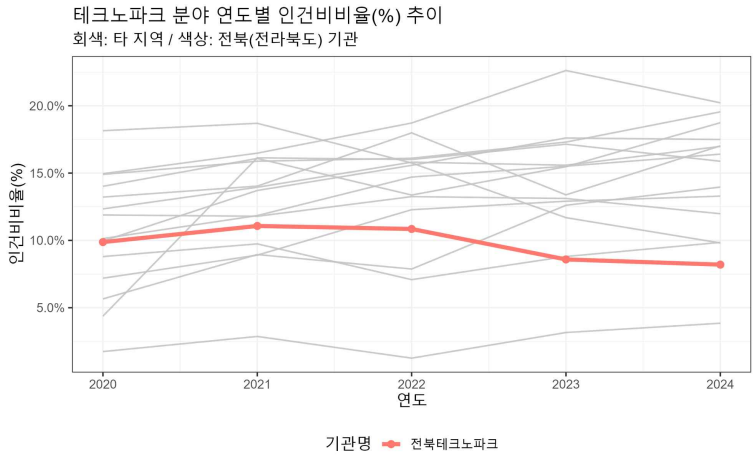
○ 전북테크노파크의 연도별 총자산회전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비교대상 기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46> 테크노파크 분야 연도별 총자산회전률



○ 전북테크노파크의 연도별 인건비비율은 8%에서 11%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비교대상 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47> 테크노파크 분야 연도별 인건비비율



○ 이상의 내용은 다음 표로 요약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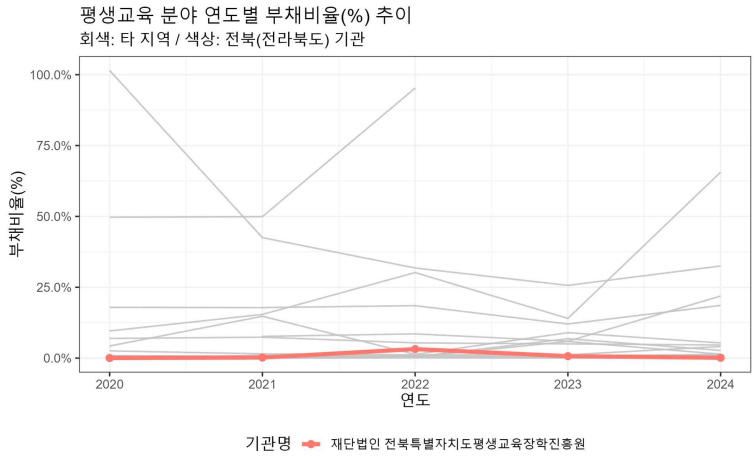
<표 69> 전북 테크노파크 분야 결과 요약

기관명	연도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총자산회전률	인건비비율
전북테크노파크	2020	38.35	1.84	93.92	9.88
전북테크노파크	2021	51.07	2.03	97.61	11.07
전북테크노파크	2022	52.76	1.68	94.64	10.85
전북테크노파크	2023	45.01	2.06	120.88	8.59
전북테크노파크	2024	30.62	0.37	168.54	8.2

(10) 평생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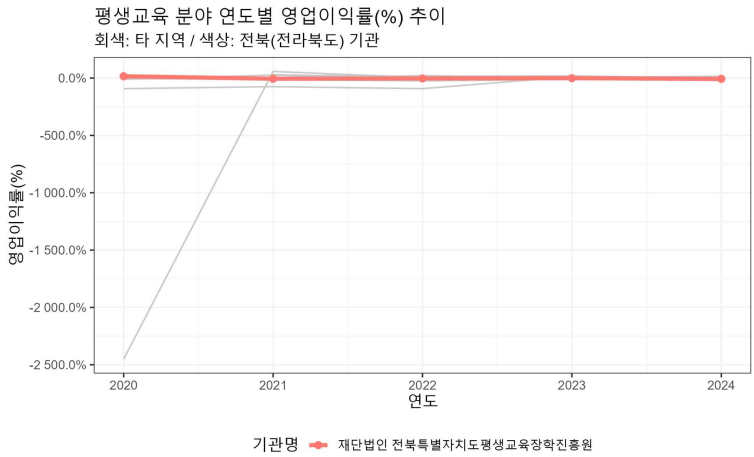
○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연도별 부채비율은 매우 낮으며, 비교 대상 기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그림 48> 평생교육 분야 연도별 부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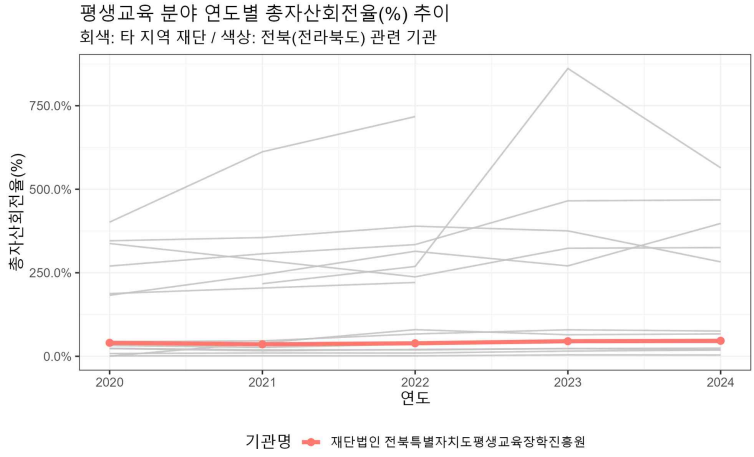
○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연도별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그림 49> 평생교육 분야 연도별 영업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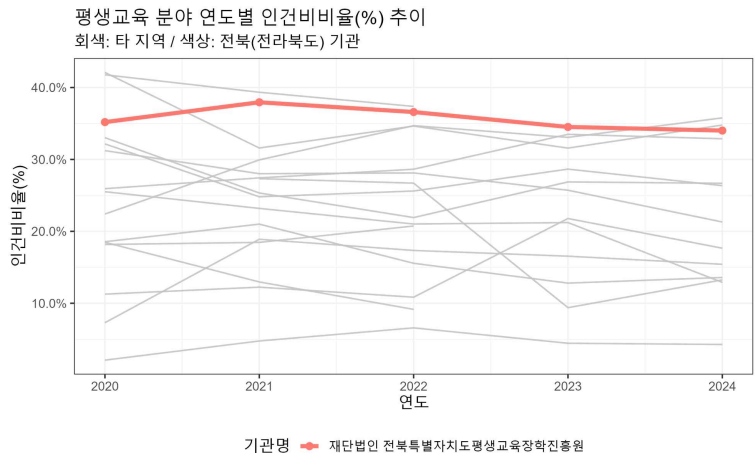
○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연도별 총자산회전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50> 평생교육 분야 연도별 총자산회전률



○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연도별 인건비비율은 비교 대상 기관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그림 51> 평생교육 분야 연도별 인건비비율



○ 이상의 내용은 다음 표로 요약할 수 있음

<표 70> 전북 평생교육 분야 결과 요약

기관명	연도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총자산회전률	인건비비율
평생교육장학진흥원	2020	0.04	15.82	35.19	40.39
평생교육장학진흥원	2021	0.21	-5.86	37.95	36.01
평생교육장학진흥원	2022	3.18	-3.1	36.59	38.95
평생교육장학진흥원	2023	0.7	-0.92	34.52	45.16
평생교육장학진흥원	2024	0.13	-7.22	34.01	46.41

3. 클러스터링 분석을 통한 출연기관의 그룹 분류

가. 최근 경영평가 결과를 통한 분류

○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결과(2020~2025) 자료를 기반으로 등급(가, 나, 다, 라 4등급)을 수치화하여 (가=4, 나=3, 다=2, 라=1) 시계열 클러스터링 분석을 수행[9)]

○ 클러스터링 분석 결과

▶ 1그룹 : 안정적 우수형(Average ≥ 3.5)

-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남원의료원, 국제협력진흥원, 사회서비스원
- 특징: 최근 3년간 연속 “가등급(4)” 유지 또는 주기적 상향
- 성과관리 체계가 제도화된 기관군
- 함의: 지속가능한 경영체계와 내부 품질관리 프로세스가 정착된 기관군

→ 정책적 시사점: 경영관리 우수사례로 벤치마킹 필요

▶ 2그룹 : 중간 안정형((2.6 ≤Average < 3.5)

- 경제통상진흥원, 군산의료원, 전북연구원, 여성가족재단, 콘텐츠융합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문화관광재단
- 특징: 전반적으로 “나~가등급(3~4)” 범위에 머무르며, 큰 등락 없음.

9) 2022년부터 평가결과를 가,나,다 세 등급으로 분류했으나, 2021년 이전에는 가, 나, 다, 라 4등급으로 분류해서 평가했으므로 5개년도 시계열을 보기 위해 4등급으로 분류해서 살펴봄

안정성은 확보하였으나, 혁신·외부성과는 부족.

- 함의: 단기 성과보다는 중장기 구조개선형 KPI 강화 필요. 내부인사 또는 리더십 안정 유지 시 상위군 진입 가능.

→ 정책적 시사점: 혁신성과지표(예: 신사업, 외부수입비율 등) 강화 필요

▶ 3그룹 : 불안정·저성과형 (Average < 2.0)

- 전북테크노파크, 에코융합섬유연구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 특징: 다수의 "라/다등급(1~2)" 포함, 등락이 반복됨. 구조적 문제(인사, 재정, 사업구조 불일치) 가능성이 높음.
- 함의: 단기적으로는 관리형(Performance Management) 체계 강화가 우선

→ 정책적 시사점: 중장기 경영성과지표 재정비 필요, 외부 컨설팅 및 성과평가 지표 현실화 필요

○ 시계열 변화 패턴 분석

- 최근 6년간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등급은 전반적으로 상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며, 일부 기관(신용보증재단·남원의료원·국제협력진흥원)은 꾸준한 개선을 통해 '가등급'을 유지

- 전북테크노파크·평생교육장학진흥원 등은 저성과·등락 반복형 패턴을 보이며 구조적 개선이 요구

- 대부분 기관은 '나~가등급'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으나, 혁신성과 및 외부성과 제고가 상위권 진입의 핵심 과제로 나타남

<표 71> 경영평가 결과를 통한 시사점

유형	주요 기관	변화 방향	시사점
상향형	신용보증재단, 남원의료원, 국제협력진흥원	나→가	구조개혁 및 인사관리 개선 효과
등락형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콘텐츠융합진흥원	가↔나 반복	프로젝트 성과 편차 큼
정체형	경제통상진흥원, 전북연구원	나 등급 고착	혁신성·외부성과 미흡
저성과 지속형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북 테크노파크,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라/다 유지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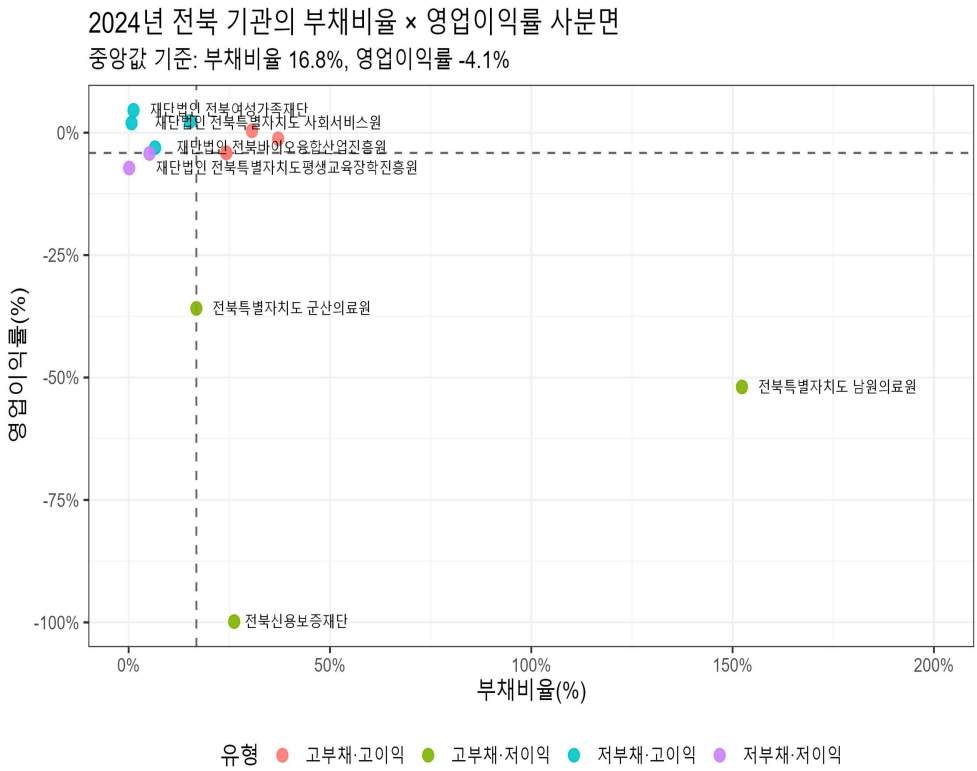
○ 6개년도의 경영평가 결과만을 가지고 클러스터링 한 결과이므로, 경영평가 자체의 변별성(3등급으로 평가)이 높지 않은 경우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분류하기 어려우므로,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를 토대로 한 그룹핑이 필요함

나.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분석을 통한 분류

○ 재무적 안정성을 의미하는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과 비용통제 능력과 내부 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반영하는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을 기준으로 기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 고부채/저부채, 고이익/저이익은 중위값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음

<그림 52> 부채비율과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한 유형 분류



○ 저부채·고이익 유형은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여성가족재단, 사회서비스원, 문화관광재단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예상되는 기관임

○ 저부채·저이익 유형은 콘텐츠융합진흥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영업이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임

○ 고부채·고이익 유형은 경제통상진흥원,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으로 부채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임

○ 고부채·저이익 유형은 신용보증재단,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으로 부채

관리와 수익성(영업이익률) 제고를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임

<표 72> 부채비율과 영업이익률 기준 기관 분류

기관명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유형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6.57	-3.08	저부채·고이익
여성가족재단	1.21	4.57	저부채·고이익
사회서비스원	0.73	1.97	저부채·고이익
경제통상진흥원	24.26	-4.13	고부채·고이익
문화관광재단	15.21	2.27	저부채·고이익
콘텐츠융합진흥원	5.16	-4.25	저부채·저이익
평생교육장학진흥원	0.13	-7.22	저부채·저이익
신용보증재단	26.22	-99.84	고부채·저이익
전북연구원	37.13	-1.25	고부채·고이익
전북테크노파크	30.62	0.37	고부채·고이익
군산의료원	16.82	-35.88	고부채·저이익
남원의료원	152.32	-51.92	고부채·저이익

<표 73> 부채비율과 영업이익률 기준 기관 유형 정리

구분	기관명	특징 및 시사점
① 저부채·고이익 유형	-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 여성가족재단 - 사회서비스원 - 문화관광재단	안정적인 운영이 예상되는 기관
② 저부채·저이익 유형	-콘텐츠융합진흥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영업이익률 제고 노력이 필요한 기관
③ 고부채·고이익 유형	-경제통상진흥원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부채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기관
④ 고부채·저이익 유형	- 신용보증재단 - 군산의료원 - 남원의료원	부채 관리 및 수익성(영업이익률) 제고가 필요한 기관

Ⅴ.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합리화 방안 제안

1. 개선방향

○ 일반적인 개선방향

-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간 통합하여 예산 절감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며, 중복성이 높은 기관은 통폐합하거나, 기능을 재조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공공성이 약한 기관의 경우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성을 갖춘 기관은 독립법인화하여 경영 자율성 확보

○ 경영평가를 토대로 한 클러스터링 분류 결과 개선제안

- 경영평가 시계열 추세 상으로는 전북테크노파크·평생교육장학진흥원 등은 저성과·등락 반복형 패턴을 보이며 구조적 개선이 요구
- 대부분 기관은 '나~가등급'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으나, 혁신성과 및 외부성과 제고가 상위권 진입의 핵심 과제로 나타남

○ 재무구조와 경영성과를 토대로 한 클러스터링 분류 결과 개선제안

- 재무적 안정성을 의미하는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과 비용통제 능력과 내부 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반영하는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을 기준으로 기관의 유형을 구분
- 고부채·저이익 유형은 신용보증재단,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으로 부채관리와 수익성(영업이익률) 제고를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임

○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실질적 평가방안 필요

- 현재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성과평가 및 운영에 대한 점검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제고하고 실질적 통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평가방안 제안
- 경영평가 방식과 지표 개선

○ 실질적 개편방안

- 타 지자체에 비해서 기업 진흥 및 지원의 특정 산업육성을 위한 성격의 기관들이 다소 많은 편이므로, 일부 기관은 기능을 통합할 수 있을 것임(전북테크노파크 vs. 자동차융합, 에코융합섬유, 바이오융합 등)[10]
- 문화라는 카테고리 안에 콘텐츠라는 세부분야를 독립시켜서 다소 중복적 내용의 사업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통합 가능 (문화재단 vs. 콘텐츠융합진흥원)[11]
- 단순 플랫폼 역할로 위탁과제를 배분해주는 역할들을 주로 하는 기관들의 통합가능성 : 주로 과제, 보조금, 바우처를 외부 수행주체에게 배분 관리하는 구조가 일반적임(전북테크노파크 vs. 경제통상진흥원)[12]

---

10) 이 네 기관은 지원기관으로서 통합 가능한 범위가 상당히 존재함. 특히 공통지원기능·관리·플랫폼 측면에서 중복적 성격이 있음. 다만 산업별 전문 지원 기능이 각 기관의 핵심이므로 통합 시 전문성 저하 및 사업자격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전면적 통합보다는 단계적·선택적 통합이 현실적이며 효과적일 것임. 초기 단계로 할 수 있는 것은 네 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업지원 포털, 접수·모니터링·성과관리 시스템을 공동 개발. 인프라·장비 데이터베이스 공유, 공동 이용 체계 마련. 공동 브랜드 또는 협력브랜드 운영(기업 입장에서는 "전북산업융합지원센터" 등으로 하나의 창구).

11) 콘텐츠융합진흥원이 지원하는 웹툰·음악·미디어 콘텐츠는 문화예술 생태계와 결합 가능성이 있으며, 문화재단의 문화관광 인프라와 연계할 수 있을 것이며, 두 기관의 '지원·생태계 조성'이라는 기능 중 일부(예: 기업지원 플랫폼, 창작지원, 공간공유 등)는 통합을 통해 중복 제거 및 효율화가 가능

12) 두 기관의 '국가사업' 집행은 전형적으로 '플랫폼/관리기관 역할이 중심'이며, 과제·보조금·바우처를 외부 수행 주체(기업·대학·전문기관)에 배분·관리하는 구조가 일반적임.

○ 도의회 차원 노력

- 지자체 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 활용 가능
- 설립 초기 단계에서의 새로운 출연기관 설립과 관련한 의회 동의에 있어 엄격한 기준으로 새로운 출연기관 설립에 신중해야 할 것임
- 공공성을 추구하는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운영상 효율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 수익성 확보 방안 마련을 조례로 제안 : 특히 일부 기관의 부채율과 영업이익에 대한 관심 필요
- 경영평가제도 지표개선 건의 및 출연기관에 대한 총인건비 산정기준의 공통적 기준 마련은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출연기관 설립단체인 지자체에 요구해야 하는 사안으로 간주됨

2. 기타제도개선 방안

1) 경영평가제도 개선

○ 경영평가의 광대함으로 실효성 없는 평가 실시

-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16개 대상에 대해 가, 나, 다 세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관대화 경향으로 2곳만 다 등급으로 평가받고, 나머지 기관은 모두 가, 나 등급으로 평가받아서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짐
- 2022년 이후 실질적으로 3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부여는 가, 나 등급 기관에게 하고 있음. 3단계의 평가에

다만 전북테크노파크는 인프라 기반의 직접 서비스(시험·장비·스마트제조 컨설팅 등)가 분명히 존재하고, 경제통상진흥원은 민간위탁·참여기업/컨설턴트 중심 운영이 더 강함. 2016년 실제 인천시는 정보산업진흥원까지 포함하여 세 기관을 통합함.

서는 가 등급의 기관에만 성과급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기관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불투명

※ 등급 부여기준

○ 평가결과에 따라 5단계로 평가등급 부여(가 ~ 마)

등급	가	나	다	라	마
점수기준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75점 미만
등급비율	10%	30%	40%	15%	5%

○ 상위등급 비율이 과다할 경우('가'·'나'등급 합계 40% 초과 등) 경영실적 평가유형별 상대적 격차 및 등급별 분포 등을 고려

○ 유형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 조정 가능

- 상대적 격차 및 등급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절대점수 기준을 원칙
- 관대화 방지를 위해, 보수적인 등급분포를 권장

출처 : 행안부(2025).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

○ 평가지표 점수획득 용이화

- 건전재정평가 지표에서 지표의 중복성 및 평가점수 획득에 유리한 측정방법 채택

▶ 재정자립도가 낮고, 수익구조가 약한 기관 → 증가율 방식이 점수획득에 유리(ex. 작년이 10%, 올해가 20%라면 증가율은 +100%가 되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현재 경영평가 지표상으로 대부분 증가율로 채택

<표 74> 건전재정 평가지표상의 문제점

건전재정지표	지표설명	문제점
일반관리비 충당률	- 지표정의 : 자체수입 / 행정운영경비 - 지표산식 : (해당연도 일반관리비충당률 / 직전년도 일반관리비충당률)×100 A비율 80%(0.2점)에서 110%(1.0점)까지 연속척도(B)로 평가	행안부 경영평가 제안모델에서는 일반관리비 충당률을 산출하도록 되어있으나, 전년도 대비 충당률의 증가율을 측정. - 지표정의와 지표산식의 차이가 있음(충당률-> 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당기순이익의 증가율(A) = (해당연도 당기순이익 / 직전년도 당기순이익)×100	제안모델 상에는 없음
재정자립도 증가율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운영경비 재정자립도 증가율(A) = (해당연도 재정자립도 / 직전년도 재정자립도)×100 A비율 80%(0.3점)에서 110%(1.5점)까지 연속척도(B)로 평가	일반관리비 충당률과 중복됨
자체수입률(II유형 미평가)	자체수입률 증가율(A) = (해당연도 자체수입률 / 평균자체수입률)×100 평균자체수입률 : 1년전 자체수입률×0.5+2년전 자체수입률×0.3+3년전 자체수입률×0.2 A비율 80%(0.3점)에서 110%(1.5점)까지 연속척도(B)로 평가	제안모델에서는 자체수입률을 산출하도록 되어있으나, 평균자체수입률 대비 해당연도 자체수입율대비 증가율을 측정 - 지표정의와 지표산식의 차이가 있음(수입률-> 증가율)

○ 총인건비 인상율 준수여부의 모호함

- 인건비 관련 경영평가 기준의 관대성으로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에서

만근자, 만근자+비만근자의 인건비 총액기준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하나만 준수해도 준수로 평가하도록 함[13)]

- 실제 경영평가서 상의 총인건비 인상률 값과 도에 출연동의안 제출서에 인건비 인상률의 값이 다름[14)]

●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지표 (미준수 시에만 –1점 감점)

- 정책인상률 2.5%, 호봉상승분 1.4%를 합한 3.9% 초과 시 미준수

① 만근자의 인건비(2개년 만근자)총액 기준의 총인건비 인상률(집행) 기준과

② 예산편성기준(만근자+비만근자)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률(집행)을 종합적으로 판단

구분	①만근자의 인건비 총액 기준	②만근자+비만근자의 인건비 총액 기준	비고
사례 A	준수	준수	①준수+②준수=준수
사례 B	준수	미준수	①준수+②미준수=준수
사례 C	미준수	준수	①미준수+②준수=준수 ※ 만근자 미준수 사유 등 확인 후 <준수> 여부 결정
사례 D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2025)「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지표」

13)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총인건비 산정을 이와 같이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음. 총액인건비 산정은 기본적으로 정규직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으나, 만근자(1개월, 1주 등 정해진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한 사람), 비만근자(결근, 병가, 휴직, 조퇴 등으로 전일 근무하지 못한 사람)로 구분하여 총인건비를 산정하여 인상율을 산정하는 것은 정규직 정원 기준의 총액인건비 산정기준과 달리, 비정규직(계약직, 시간제, 프로젝트 참여자 등)을 모두 적용하게 되는 것임. 비정규직의 경우 임금 상승률이 정규직에 비해 제한되므로 이들을 포함시켜서 총인건비 상승률을 계산할 경우 총인건비 인상율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음(임금상승율이 낮은 집단을 포함시키게 되면 전체 인건비 상승률은 낮아지게 됨. 실제 인건비 총액 증가율을 낮추고 싶을 때 비정규직 인력을 포함한 통계로 제시하기도 함)

14) 전북연구원의 경우 2024년 12월 기준 도의회 제출한 출연동의안에서는 전년대비 총인건비 인상율은 4.4%(정책인상률 3.0% + 자연증가 경력인상 1.4%)라고 되어 있는데, 2025년 경영평가보고서(2024년 실적기준)에서는 인상율 8.02%라고 되어 있음

● 총인건비 편성 예산 지침

2024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23년 말 정규직(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말한다)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 총인건비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시하는 인상률(정책인상률+호봉승급분) 범위 내에서 승진, 승급, 채용 등에 따른 추가 소요분을 모두 반영
- 총인건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설립자치단체가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를 참조,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명시하여 출자·출연기관에 통보

  단, 아래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아닌 봉급예비비로 편성

  ex)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정원대비 5%이내), 설립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 장기결원 인원의 대체 투입 인력의 인건비,,,,승인된 청년근로자의 인건비 등
-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여 패널티를 적용하고, 다음연도 인건비 예산편성 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

*출처 : 행정안전부(2024)「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 경영평가지표에 대한 도 차원의 주기적인 점검 필요

- 경영평가를 주관하는 업체에게 경영평가지표를 일률적으로 전담시켜서는 안 되며, 경영평가지표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져서, 특정 지표들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짐과 동시에, 평가전문가 중심의 출자출연기관 지표점검회의를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점검절차가 필요할 것임
- 개별 지표에 대해 3년 이상 기관의 80% 이상이 최고점을 부여받는 지표들은 지표점검을 통한 지표변경이 필요할 것임

- 도덕성에 문제가 생긴 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 연도 평가에서 최저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 도입도 필요
- 기관장의 책임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평가항목 중 기관장 평가에 대한 보다 더 강화된 지표 도입이 필요함

○ 중앙부처평가 대상기관의 경영평가 배제

- 의료원(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테크노파크, 전북개발공사, 서비스원은 이미 중앙부처로부터의 분야별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중복평가로 인한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배제가 필요
- 이들 기관은 기관 성격이 상이하게 다르므로, 도내 다른 출연기관과 함께 비교대상으로 놓고 성과순위를 메기는 것은 평가의 의미를 찾기 어려움

2) 기관별 인건비 인상 및 책정의 명확한 기준 부재

(1) 인건비 책정기준 불명확

- 어떤 항목이 '총인건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상여금, 복리후생비, 직무수당, 근속수당, 통상임금 관련 수당 등이 포함/제외 여부가 기관마다/지침별로 차이가 있음

- 지침 내 "전년도 대비 인상률" 등 일반 틀은 있지만, 유연성이 너무 커서 어떤 경우에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함

(2) 유사 동종 기관 비교 기준의 불확실성

- "유사 동종 기관"이 어떤 기관들을 말하는지, 비교 대상·범위가 명시되

지 않거나 기준이 모호함

- 예를 들어, 기관 규모, 재원 구조, 기능·사업 내용 등이 다르면 단순 비교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경우가 있음

● 유사 동종 기관과의 임금 격차 관련

- 유사 동종 기관과의 현격한 인건비 격차(1인당 평균임금의 80% 미만)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인상률을 달리할 수 있다

*유사 동종의 정의는 지방출자충연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동일 업종 또는 유사 업종을 말하며, 1인당 평균임금이란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집행액을 연간 상시근무인원(무급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한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

* 출처 : 행정안전부(2024)「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3) 자율성의 제약과 실제 운영의 괴리

- 중앙 또는 도 지침에서 인건비 인상률 상한·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출연기관이 재정 상태나 인력 구조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움

- 자치단체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수체계·정원 관리가 엄격히 통제됨. 기관 특성과 사업 성격에 맞는 인력 운용이나 보상 체계 설계가 어려움

- 반대로, 기관 내부 사정이 양호한 경우에는 더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지침/조례 상의 제한 때문에 수용되지 않거나 절차가 복잡함

(4) 감독·평가체계 연계의 불명확성

- 경영평가 지표에 인건비 사용의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 있으나, 인건비 인상률이 경영평가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어떤 기준으로 '과

다’인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 인건비 인상률을 경영성과나 효율성과 연계하여 평가할지, 단순히 지침 준수 여부만 점검할지에 대한 내부 규정과 실제 평가의 괴리가 존재

(5) 지방자치단체 의존성 과다

- 출연기관의 재원은 대부분 지자체 출연금·보조금에 의존하며, 기관 자체의 수익 창출 여지가 낮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경직적으로 편성됨

(6) 출연기관 설립자치단체의 통일된 인건비 기준 마련 필요

- 도 예산과에서 제출한 인건비, 경영 평가상의 총인건비 산정 기준이 모두 달라서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하기 어려움
-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도 차원에서 총인건비 기준을 통일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 총인건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설립자치단체가 소득세법 제 20조(근로소득)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를 참조,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명시하여 출자·출연기관에 통보”

* 행정안전부(2024)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Ⅵ. 결론

○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재정건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진단하고, 합리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함.
- 인구감소와 재정 악화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모델 마련이 필요함.

○ 제도 및 운영상 주요 문제점

-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법」 제정 이후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운영단계의 절차적·관리적 미비 지속.
- 설립심의위원회 미구성, 타당성 검토의 형식화, 사전협의 미이행 등 제도운용이 부실.
- 기관 설립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유사 기능이 중복되는 기관 다수 존재 → 행정 비효율성 심화.
- 경영평가제도는 실질적 성과관리 도구로 기능하지 못하고, 내부통제 및 책임경영 체계 미비.

○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여건 변화

- 2050년까지 인구 130만 명 이하로 감소 전망 → 지방세수 축소, 재정자립도 하락, 중앙의존도 심화 예상.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재원 대부분이 출연금·보조금에 의존 → 자체수입 창출 기반 취약.
- 인건비 중심의 경직된 비용구조로 재정 탄력성이 낮고, 도 재정 부담 증가 우려.

- 장기적으로 지출 효율화와 자체수입 다변화가 필수적 과제로 부상.

○ 재정성과 및 유형별 분석 결과

- 부채비율·영업이익률 기준으로 4개 유형 도출.
- 저부채·고이익형: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여성가족재단, 사회서비스원, 문화관광재단 → 안정적 운영, 성장기반 확충 필요.
- 저부채·저이익형: 콘텐츠융합진흥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수익성 제고 및 경영혁신 필요.
- 고부채·고이익형: 경제통상진흥원,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 부채 관리 강화 필요.
- 고부채·저이익형: 신용보증재단,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 재정 안정화와 수익성 개선 시급.
- 기관 간 재무지표 격차가 크며, 경영성과에 따른 차등적 관리 필요.
- 도 차원의 인건비 기준 통일 및 재무지표 관리체계 표준화가 요구됨.

○ 인건비 및 운영 효율성 문제

- 인건비 비중 과다 및 기준 불통일로 정확한 총액 관리 어려움.
- 회계·예산·경영평가 기준이 상이하여 비교 불가.
- 인건비 효율성을 경영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상승률과 재정성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함.

○ 운영 합리화 및 제도개선 방향

- 유사·중복 기능 기관의 통합 및 기능 재조정으로 구조 효율화 추진.
- 출연금·보조금 배분 시 성과지표 연동 → 성과중심 예산체계 도입.
- 부채비율·인건비율 관리 상한 설정 → 재정위험 예방.

- 경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주민참여형 평가제 검토 → 투명성 강화.
- 도-기관 간 책임체계를 명확히 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의 균형 확보 필요.

○ 종합적 시사점

-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출자·출연기관은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 속에서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로 전환해야 함.
- 단기적 비용 절감이 아닌, 성과 기반 재정관리·책임경영·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 과제.
- 기관별 재무구조 분석 결과는 향후 구조조정, 인건비 관리, 재정지표 개선 등 정책 설계의 실질적 근거로 활용 가능.
- 전북특별자치도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와 주민복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함.

참고문헌

감사원(2023.9.20.)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주요감사결과 보도자료.

경향신문(2023-01-18). 20인 이하 소규모 지방 출자·출연기관 못 만든다

뉴시스(2022-07-27). 지방공공기관도 구조조정 들어간다…"빚 많으면 불이익“

박지호·한인섭·백승천·김정렬(2021).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전 협의 및 타당성검토 개선방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신해룡. (2008). 「공기업 경영현황 평가」.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원구환(2006). 지방공기업의 생산성 분석. 「지방정부연구」. 10(4): 41-61

임충혁·정창훈. (202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무구조와 경영성과 추세 및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24(4): 167-198.

장호진(2024).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공기업평가원 보고서.

전라북도 정책기획관(2022.12). 2020~2040년 전라북도 시·군 장래인구추계.

전북특별자치도(2025).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경영평가 종합보고서

조임곤. (2008). 지방공기업 경영분석: 상수도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167-180.

한국경제신문(2024-05-21). 무작정 늘리다 탈났다…'돈먹는 지방공기관' 통폐합 속출.

행정안전부(2022). 지방출자·출연기관 현황.
행정안전부(2025). 지방출자·출연기관 현황.
행정안전부(2025).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